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44000-67000-67-0023

COAST & Human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 Fisheries

연안통합관리계획

2000. 8



해양수산부



< 차 례 >

제1편 연안통합관리 기본구상	11
제1장 계획의 개요	11
제2장 연안통합관리의 여건 및 전망	11
제3장 연안통합관리계획 기본구상	11
제2편 추진전략별 정책방향	15
제1장 보호지역 지정을 통한 연안생태계 집중관리	17
제2장 해역별 특성에 맞는 연안오염부하 적정관리	20
제3장 환경용량을 고려한 연안개발계획 조정	23
제4장 연안재해방지사업의 체계적 전개	29
제5장 친수연안공간 조성 및 연안접근권 개선	31
제6장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촉진 및 지원	34
제7장 전국 연안의 권역별 관리	36
제3편 권역별 연안통합관리 정책방향	41
제1장 서해중부-I 권역	43
제2장 서해중부-II 권역	57
제3장 서해남부-I 권역	73
제4장 서해남부-II 권역	85
제5장 남해서부 권역	99
제6장 남해중부 권역	113
제7장 남해동부 권역	129
제8장 동해남부 권역	141
제9장 동해중부 권역	153
제10장 제주 권역	163
제4편 연안통합관리계획 집행전략	175
제1장 연안통합관리제도의 내실화	177
제2장 연안관리 청지기 의식 확대	178
제3장 지식기반 연안관리 실현	179

< 표 목 차 >

<표 1-1> 국토개발과 연안관리정책의 전개과정	11
<표 1-2> 연안이용 및 보전관련 장기전망	12
<표 2-1> 보호지역 지정을 통한 연안생태계 집중관리	19
<표 2-2> 해역별 특성에 맞는 연안오염부하 적정관리	22
<표 2-3> 환경용량을 고려한 연안개발계획 조정	25
<표 2-4> 친수연안공간 조성	33
<표 3-1> 서해중부-I 권역 연안통합관리 요약	54
<표 3-2> 서해중부-II 권역 연안통합관리 요약	69
<표 3-3> 서해남부-I 권역 연안통합관리 요약	82
<표 3-4> 서해남부-II 권역 연안통합관리 요약	96
<표 3-5> 남부서부 권역 연안통합관리 요약	109
<표 3-6> 남해중부 권역 연안통합관리 요약	125
<표 3-7> 남해동부 권역 연안통합관리 요약	137
<표 3-8> 동해남부 권역 연안통합관리 요약	149
<표 3-9> 동해중부 권역 연안통합관리 요약	160
<표 3-10> 제주 권역 연안통합관리 요약	171

< 그림 목 차 >

【그림 1-1】 권역별 해안선 길이	6
【그림 1-2】 연안공간 이용현황	7
【그림 1-3】 연안이용 후보지 현황	9
【그림 2-1】 권역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현황	23
【그림 2-2】 권역설정시 고려요인	36
【그림 2-3】 연안통합관리 권역설정	38
【그림 3-1】 서해중부-I 권역 연안통합관리	55
【그림 3-2】 서해중부-II 권역 연안통합관리	71
【그림 3-3】 서해남부-I 권역 연안통합관리	83
【그림 3-4】 서해남부-II 권역 연안통합관리	97
【그림 3-5】 남해서부권역 연안통합관리	111
【그림 3-6】 남해중부권역 연안통합관리	127
【그림 3-7】 남해동부권역 연안통합관리	139
【그림 3-8】 동해남부권역 연안통합관리	151
【그림 3-9】 동해중부권역 연안통합관리	161
【그림 3-10】 제주권역 연안통합관리	173

제1편 연안통합관리 기본구상

여 백

제1장 계획의 개요

1. 계획수립의 목적 및 배경

가. 계획수립의 목적

바람직한 연안의 미래상 설정

- 연안을 생태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연안의 미래상 정립

연안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개발질서 확립

- 육역과 해양의 통합관리를 통해 연안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지속가능한 연안개발 실현

나. 계획수립의 배경

새천년 선진해양국가 실현을 위한 초석으로 연안관리전략 마련 필요

- 전세계 인구의 50% 거주, 지구생태계 총가치의 43% 발생 등 경제활동 및 환경적 가치가 연안에 집중되는 추세속에 새천년 인류미래의 가능성은 연안에 잠재
- 차세대 국토골격인 「연안국토축」의 형성으로 환태평양·환황해·환동해 경제권 진출의 교두보로서 연안공간의 비전과 전략마련 필요
- 인구·무역·소득의 증가로 인해 산업·문화·레저 등 대부분의 각종 시설이 연안에 배치될 전망으로 연안보전 및 개발입지간 상충·경합문제 발생

「육지중심의 연안개발」에서 「해양중심의 연안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지난 30여년간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에 따라 선점식 난개발의 대상이 되어온 연안을 환경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의 공간으로 관리전환 대두
- 인구 및 산업활동 증가로 인한 연안개발은 생태계 파괴, 수산자원 고갈, 연안 오염 등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위협

2. 계획의 성격

□ 연안의 보전·이용·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 연안자원 및 공간의 보전·이용·개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보전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연안에서의 기본계획
- 연안육역과 해역의 통합, 관련 행정주체간 통합, 보전과 이용·개발간의 통합 등을 추구
 -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이나 지정된 용도지역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기본계획

□ 연안관리법에 근거한 법정계획

- “연안을 종합적으로 보전·이용·개발하기 위하여 중앙연안관리심의회와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연안관리법 제5조)

□ 계획에 의하여 관리(Planning Control)하는 국가계획

- 연안통합관리계획은 용도지역제에 의한 토지이용 규제방식이 아닌 계획에 의한 국토관리 기법
 -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다수가 합의한 사항을 규범으로서 준수
- “계획없이는 개발없다”는 「선(先) 계획, 후(後) 이용·개발」 원칙 확립
 - 연안의 보전·이용·개발에 관한 정책방향 제시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안통합관리 유도

3. 계획의 범위

□ 지역적 범위 :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의 통합

- 연안해역 :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한계까지의 바다와 바닷가
- 연안육역
 - 무인도서와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최대 500m 또는 1km(지정항만, 1·3층어항, 산업단지의 경우) 범위의 육지지역

□ 내용적 범위 : 연안의 보전·이용·개발의 통합

- 연안관리에 관한 기본정책방향
- 연안의 바람직한 보전·이용·개발에 관한 사항
- 연안에서의 행위제한 또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연안에서 상충되는 행위에 대한 조정
- 연안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등

□ 시간적 범위

- 연안통합관리계획은 연안의 보전·이용·개발과 관련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계획을 종합 검토·조정하는 「조정계획」으로 계획기간 한정 무의미
 - 향후 다양하게 발생하는 연안의 보전·이용·개발수요는 “계획의 변경” 절차를 통해 탄력적으로 관리(적응관리의 원칙)

4.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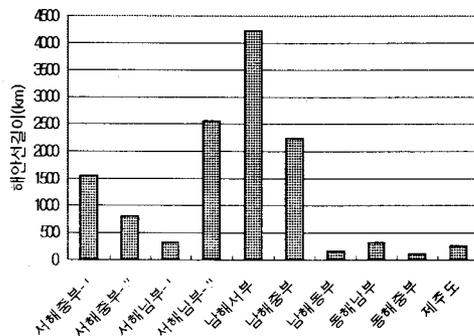
- 1996. 1 「해양개발기본계획」의 8대과제중 하나로 채택
- 1996.2~1998.8 연안실태조사 실시
- 1998. 6 국정과제의 하나로 「연안통합관리체제 구축」 선정
- 1999. 8 연안관리법·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 제정·시행
- 1998.9~1999.12 연안통합관리계획(안) 마련
- 2000.1~5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조정
- 2000. 6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의결
- 2000. 8 환경보전위원회 심의·의결

제2장 연안통합관리의 여건 및 전망

1. 연안의 특성

□ 자연환경적 특성

- 우리나라 해안선은 총길이 11,542km로 국토면적에 비해 긴 해안선을 보유
 - 육지면적대비 해안선길이 비율비교시 일본 등 외국에 비해 높음
 - * 한국 117%, 일본 87%, 영국 57%, 뉴질랜드 56%
 - 육지의 해안선은 6,227km(도서의 해안선 5,315km)로 이중 26.2%인 1,632km가 방조제·호안 등의 인공해안으로 형성
- 서·남·동해안별로 각기 다른 지형적 특성을 지님
 - 서·남해안은 리아스식해안으로 해안선이 복잡하고 수심이 낮음
 - 동해안은 주로 암반해안으로 해안선이 단조롭고 수심이 깊음
- 서·남해안은 경사가 완만하고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갯벌이, 동해안은 하천이 급경사이고 길이가 짧아 양질의 모래해안이 분포
 - 서해안 갯벌은 세계 5대갯벌의 하나이며, 서·남해안에 국토면적의 2.4%에 해당하는 2,393km²의 갯벌이 분포
- 국토의 프론티어인 3,170개의 도서가 전국에 산재
 - 유인도 479개, 무인도 2,691개로 총 도서의 62.1%인 1,969개의 도서가 전라 남도에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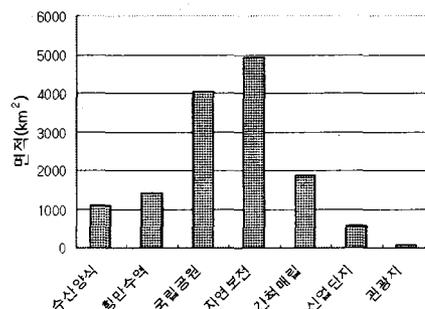
[그림 1-1] 권역별 해안선 길이

□ 사회경제적 특성

- 바다와 접하고 있는 78개 연안 시·군·구(26개시, 34개군, 18개 자치구)의 면적은 31,797km²로서 전국대비 31.9%에 달함
- 우리나라 총인구의 27.2%가 연안 시·군·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인구밀도는 402명/km²으로 전국의 평균 인구밀도보다 다소 낮음
- 연안에 분포한 취업자는 전국의 27.3%이고, 지역총생산(GRP : Gross Regional Product)은 전국의 41.9%를 점유
-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189개지구의 44.4%인 84개지구가 연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중 국가산업단지 36개지구의 75.0%인 27개지구가 연안에 배치
- 지정항만은 총 50개로서 무역항 28개항, 연안항 22개항이며, 어항은 410개의 지정어항과 1,829개의 소규모 어항이 전국에 산재
- 전국 발전소 81개소의 49.4%인 40개 발전소가 연안에 위치

□ 연안해역 이용실태

- 1,092km²의 연안해역이 수산양식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1,387km²의 해역이 항만 수역에 포함
- 20개소의 국립공원중 연안에 위치한 국립공원은 5개소 3,367km²이며, 이중 해역이 2,649km²로 국립공원 총면적 6,473km²의 40.9%, 연안에 위치한 국립공원 면적의 78.7%를 차지
- 연안해역에 지정되어 있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은 4,876km²로 이중 52.4%인 2,556km²가 수산자원보전지구
- 1962년이후 공유수면 매립면허 면적은 2,622km²로서 이중 1,778km²의 면적이 준공 또는 시공중임



[그림 1-2] 연안공간 이용현황

2. 연안관리의 문제점

가. 연안생태계 손실 및 생물다양성의 감소

□ 갯벌의 훼손

- 시화지구, 새만금지구 등 대규모 간척·매립사업으로 최근 10년간 갯벌 상실 면적이 약 810km²로 조사된바, 이는 전체 갯벌면적의 33.8%에 해당
 - 항만, 공단, 관광시설 등 연안개발로 갯벌생태계의 생산력과 기능이 크게 저하
- 최근 갯벌에 대한 국민의 관심제고로 갯벌관광객이 대폭 증가된 반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등이 없어 관광객에 의한 갯벌훼손 증가

□ 적조발생 등으로 해양생물다양성 감소

- 적조발생의 양상변화로 전 연안의 해양생태계 기능이 급속히 저하
 - 1970년대는 적조의 규모가 작고 무독성 조류에 의해 발생하였으나, 1990년대 들어 적조의 발생규모가 대형화되고 유독성 조류에 의해 발생
- 매립사업으로 인한 만의 감소 및 해수유동의 변화, 발전소 온배수의 열오염, 해사채취와 부유물질의 농도 등으로 해양생태계 악화 초래

나. 연안오염의 심화 및 쾌적성 감소

□ 일부 연안해역의 수질오염 및 부영양화 심각

- 화학적산소요구량(COD : Chemical Oxygen Demand)지표에 따른 연안의 평균 수질은 1991년 이후 점차 개선되는 추세
 - 동해는 I등급 수질을, 서·남해는 일부 해역을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II등급 수질을 유지
 - 서해의 인천·군산·목포연안과 천수만, 남해의 마산·진해·여수·광양만, 부산연안 및 울산연안 등의 경우 수질오염 심각
-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질소와 인을 기준으로 한 수질은 대부분의 해역이 III등급을 초과하고 있어 적조발생의 원인인 해역의 부영양화가 심각한 수준

□ 연안조망권 및 공공적 접근권 제약

- 자연경관이 양호한 대부분의 연안이 음식점·숙박시설 등으로 밀집되어 있어 연안공간이용의 효율성 및 다양성이 저하
- 항만, 임해산업단지, 군사시설 및 대규모 관광단지의 개발로 연안의 조망권 및 접근권이 훼손
 - 해안도로 등이 해안선까지 연접하여 개발됨에 따라 해변을 바라보는 시계 차단 및 연안경관 훼손

라. 연안의 난개발 등에 따른 연안지역의 정주여건 악화

□ 연안개발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국민의 환경권 및 미래세대의 연안향유권 위협

- 단일목적 위주의 개발사업 시행으로 지역주민 생활과의 연계성이 결여되어 연안을 삶의 터전으로 하는 어민의 생활권 손상 심각
- 임해지향적 도시 및 산업의 연안집중과 이용수요의 증대로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 심화
- 개별사업 위주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만」 또는 「해역단위」의 오염부하 관리 미흡
 - 연안은 특성상 환경적 영향범위가 넓으므로 특정해역의 환경파괴시 해류 및 조류의 영향 등에 의해 인근지역으로 환경피해 급속 확산

□ 연안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및 연안환경 변화

- 태풍·폭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연안시설물의 파괴·유실 등 대규모 재산피해와 많은 인명피해 발생
 - 최근 10년간('89~'98) 383회 1조3천억원의 피해 발생
- 매립, 항만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연안개발로 연안환경이 변화되어 해안침식, 모래사장 유실, 항로매몰, 토사유입에 의한 양식장 황폐화 등 문제 야기

3. 연안관리의 전망

가.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적 압력 가중

- 지구온난화로 인해 2100년에는 지구의 평균기온이 3~5℃ 상승하여 평균해수면은 현재보다 약 95cm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
-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 「의제21」 등을 통해 해양 및 연안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연안국의 의무 촉구
- 1995년 「육상기인오염관리를 위한 지구행동계획」이 채택되어 국가별·지역별 실천계획의 수립을 권고
 - 개발도상국에 2005년까지 하·폐수 및 고체폐기물의 50%이상 처리권고

나. 해양지향적 국토개발에 따라 연안입지 수요의 증가

- 환태평양·환황해·환동해 경제권으로 뻗어가는 「연안국토축」 형성으로 연안 지역에 산업단지·문화관광시설·국제교역기지 등 사회간접자본 중점배치 예상
 - 환황해축 : 중국의 성장에 대응하는 신산업지대망 조성
 - 환남해축 : 국제물류·관광·산업특화지대로 육성
 - 환동해축 : 국제관광 및 기간산업의 고도화

<표 1-1> 국토개발과 연안관리정책의 전개과정

구 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국토정책	국민소득증대 자립기반조성	총량경제성장 거점개발	안정기반조성 국토균형개발	세계화·개방화 분산형 국토개발
연안관리	소규모 간척지 개발, 식량증산 항만·어항정비	대단위 간척지 개발 대륙붕개발 추진 특정지역개발	해안이용율 제고 어장보전·정화 개발·보전 질서확립	연안의 통합관리 신해양시대에 대응 연안관련 제도정비
국제동향	UNESCO해양과학 위원회('60) 반개발, 생태적 개발 개념 등장	런던협약('72) MARPOL협약('78)	환경법회의('81) 몬트리올가이드라인 채택('85)	UN환경개발회의('92) 해양법협약발효('94)
정책단계	개발위주의 소극적 연안관리	연안 개발규모의 확대로 해양·연안 환경문제 태동	용도지역제 검토 등 관리정책의 전환시도	연안통합관리 체제 및 제도의 도입

다. 「삶의 질」 향상 및 해양여가 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 21세기 생활양식은 「My Car」 시대에서 「My Yacht」 시대로 전환되어 해양여가 수요의 대폭적인 증가 예상
 - 깨끗한 연안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해양문화·관광산업의 핵심자원으로 육성 하여야 할 필요성이 부각
- 연안도시의 지속적 성장과 연안으로의 인구유입 가속화 전망
 - 깨끗한 물, 풍부한 생태계 등 수준높은 해양환경보전과 친수연안공간의 대폭적 확충을 요구

라.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연안관리 지식기반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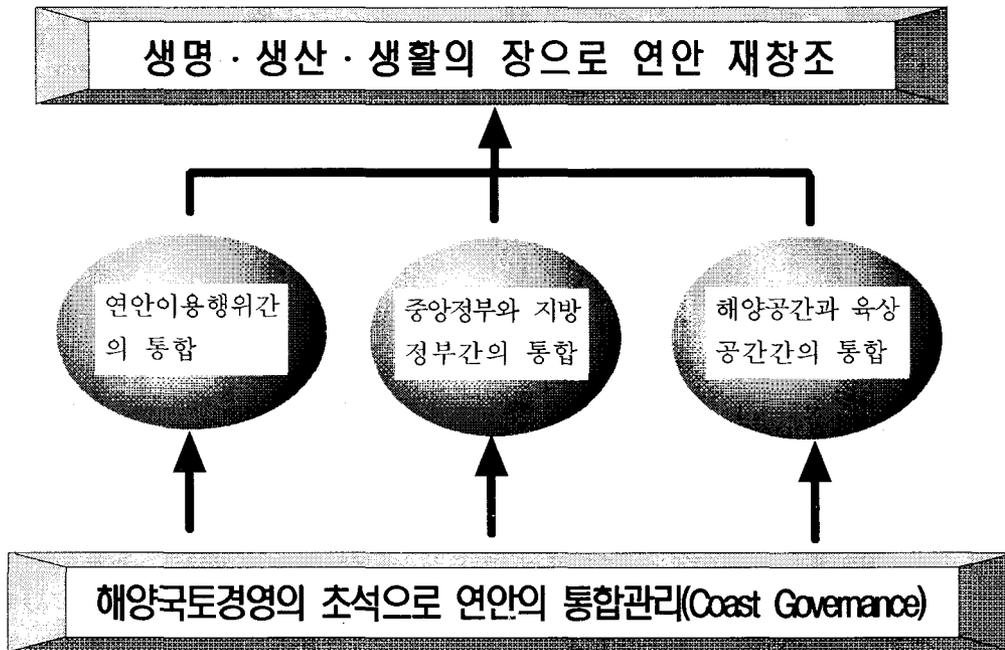
- 해양자원을 활용하는 과학기술 개념의 근본적 변화
 - 단일목적의 해양부존자원개발 노력에서 다목적·다기능의 해양잠재력 개발·산업화 시도로 전환
 -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관리에서 해양창조형 프로젝트 개발로 발전
 - 단순거대 해양구조물 건설을 탈피하여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하이테크형 해양 기술개발을 추구
- 영양염류 조절, 해안보전·방재, 생물서식환경 정비, 자연에너지 이용, 해저 퇴적물 처리 등 다양한 해역환경 제어기술 개발로 환경친화적 연안이용 실현

<표 1-2> 연안이용 및 보전관련 장기전망

지 표	2000	2010	2020	2030
전국인구 (만명)	4,733	4,907	5,087	5,274
연안인구 (만명)	1,321	1,552	1,823	2,141
연안관광객 수요 (만명)	8,440	11,643	16,015	20,525
수출입 해상물동량 (백만톤)	535	892	1,227	1,417
세계해상물동량 점유율 (%)	5.7	6.2	6.7	7.4
연안수송 분담율 (%)	22	26	28	30
하수처리율 (%)	68	90	90	90
수산물생산량 (만톤)	290	390	446	475
환경관리해역 설정 (개소수)	9	30	40	60

제3장 연안통합관리계획 기본구상

1. 계획의 기초 :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



2. 기본목표

- 생태적 균형을 이루는 생명연안
 - 생태계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통한 「환경의 질」 향상으로 건강한 연안 창출
- 환경친화적 개발을 통한 생산연안
 - 환경친화적 개발유도 및 연안의존적 산업의 계획적 배치로 풍요로운 연안창조
- 연안재해방지사업을 통한 재해없는 연안
 - 방재시설정비 및 과학적 재해예방대책 시행으로 재해에 강한 연안 창출
- 위락과 교육의 장으로서의 인간중심연안
 - 다양한 친수연안공간 확대 및 연안접근권 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쾌적한 연안 조성
- 이해관계자가 협력하는 통합연안
 - 연안의 관리주체간 협력 및 주민의 노력이 함께하는 참여의 연안 구축

3. 추진전략

가. 보호지역 지정을 통한 연안생태계 집중관리

- 전국연안의 Bio-Belt 구축
- 연안생태계 모니터링 및 정밀실태조사 실시
- 연안생태계 교육·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

나. 해역별 특성에 맞는 연안오염부하 적정관리

- 환경관리해역 지정 등 해양환경개선대책 수립·시행
- 해양쓰레기 발생억제 및 처리대책 마련
- 오염으로 훼손된 연안을 복원·개선하는 연안해역개선사업 시행

다. 환경용량을 고려한 연안개발계획의 조정

- 각종 국가종합계획과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연계·체계화
- 연안개발수요의 계획적 관리
- 생태적·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조정

라. 연안재해방지사업의 체계적 전개

- 연안재해 예방체계의 통합관리
- 복구위주에서 예방위주로 전환하여 해안보전시설 정비
- 지속적 모니터링 및 과학적 재해방지대책 수립·시행

마. 친수연안공간 조성 및 연안접근권 개선

- 친수연안공간의 확충 및 다양화 추진
- 시민의 연안접근권 및 조망권 확보대책 수립·시행

바.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촉진 및 지원

-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 기반조성
- 지역주민 참여보장과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기능강화
- 연안관리지역계획의 효율적인 심의·평가

사. 전국 연안의 권역별 관리

- 전국 연안을 해역의 특성, 지형 및 수계, 연안이용실태 및 생활권,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10대 권역으로 설정
 - ◇ 서해안 권역 : 서해중부-I, 서해중부-II, 서해남부-I, 서해남부-II
 - ◇ 남해안 권역 : 남해서부, 남해중부, 남해동부, 제주
 - ◇ 동해안 권역 : 동해중부, 동해남부

제2편 추진전략별 정책방향

여 백

제1장 보호지역 지정을 통한 연안생태계 집중관리

1. 현황 및 문제점

□ 갯벌은 생태적·경제적·심미적 가치가 높은 공간이나, 대규모 매립 등으로 갯벌 감소

- 갯벌은 다양한 해양생물의 산란·서식지이며 어민의 삶의 터전
 - 우리나라 갯벌은 세계 5대갯벌의 하나이고, 총면적은 2,393km²(국토면적의 2.4% 점유)
 - 인천광역시·경기도 35%, 충청남도 13%, 전라북도 5%, 전라남도 44%, 부산광역시·경상남도 3% 분포
- 대규모 매립으로 지난 10년간 전체 갯벌면적의 33.8%인 약 810km² 상실
 - 인천광역시·경기도 341km², 충청남도 130km², 전라북도 208km², 전라남도 125km², 경상남도 6km²

□ 도서생태계 및 철새도래지 위협요인 증가

- 도서는 희귀 야생 동·식물의 서식·번식처이며, 자연경관이 독특하여 생태적·학술적 가치가 높음에도 지리적 원격성으로 인해 체계적인 관리 소홀
 - 총 도서수는 3,170개소로 유인도 479개소, 무인도 2,691개소
- 도로확장, 산업시설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철새도래지의 파괴 가속
- 관광압력에 따른 비점오염원 증가, 관광객의 무분별한 채취·밀렵 등으로 생태계 훼손 심각

□ 연안생태계 관리체계의 허술

- 매립 및 연안개발 등으로 인한 연안생태계의 급속한 감소를 막을 수 있는 보전장치 미약
- 전국적으로 갯벌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지역 지정사례 전무
 - 국립공원의 경우 해양생태계 보전보다는 경관보전 및 관광에 우선
 - 수산자원보전지구의 경우 생태계 관리노력 미흡

2. 정책방향

□ 전국 연안의 Bio-Belt 구축

- 생태계의 가치, 국민의 환경권, 어민의 생존권, 미래세대의 생태향유권을 고려한 생태계보전지역 지정·관리
 - 생태적·심미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갯벌 : 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
 - 생태적 가치 및 자연경관이 우수한 무인도서 : 특정도서(독도등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 중요한 철새서식지 : 조수보호구(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또는 보호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도래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 생태계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법)
- 보호지역 관리목표 및 관리계획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호지역 관리대책 수립·시행
 - 대책수립시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보장

□ 연안생태계 모니터링 및 정밀실태조사 실시

- 연안생태계의 기능 및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프로그램 시행
- 습지보호지역·특정도서·조수보호구 등의 지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연안생태계 정밀실태조사 실시

□ 보호지역 지정과 연계한 연안생태계 교육·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

- 연안생태계 보호에 대한 주민의 이해증진과 보호지역의 관리주체로서 지역주민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생태계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보호지역 지정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태관광사업 등 주민지원사업 병행실시

<표 2-1> 보호지역 지정을 통한 연안생태계 집중관리

정책방향	권역명	대상지역 및 내용
습지보호 지역 지정	서해중부-I	○ 강화도남단갯벌(강화군 길상면·화도면, 옹진군 북도면)
	서해중부-II	○ 태안군 소원면·근흥면·남면 갯벌 ○ 대천천주변 갯벌(보령시 오천면·신흥동)
	서해남부-I	○ 금강하구갯벌(서천군 장항읍·마서면, 군산시 성산면·구암동)
	서해남부-II	○ 영광군 백수읍 갯벌 ○ 함평만 갯벌(영광군 염산면, 함평군 함평읍·손불면, 무안군 현경면·해제면) ○ 신안군 압해도 갯벌
	남해서부	○ 진도군 군내면 벽파리 갯벌
	남해중부	○ 강진만 갯벌
	특정도서 지정	서해중부-I
서해중부-II		○ 태안군 근흥면 난도
남해중부		○ 거제시·통영시·남해군 무인도서
제 주		○ 란도, 절명서, 사수도, 등대서, 화도, 해암서
조수보호구 지정	서해중부-I	○ 강화도남단갯벌, 신도, 동만도, 서만도, 김포시 월곶면북단, 대부도, 남양만, 남양호, 아산호, 아산만, 삼교호
	서해중부-II	○ 태안군 고남면 바람아래해수욕장 인근
	서해남부-I	○ 금강하구주변(서천군 장항읍·마서면·화양면, 군산시 성산면·구암동)
	남해서부	○ 진도군 군내면 벽파리 갯벌,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남해중부	○ 거제시(지심도·학동·와현리), 통영시(홍도·한산도·비진도), 여수시(무슬목)
제 주	○ 북제주군 조천읍 북천리 다려도(철새서식지 보호)	
생태계보전 지역 지정	서해중부-I	○ 사구 : 강화도동막해수욕장, 자월도남쪽해안, 대이작도·사승봉도주변 ○ 적송군락 : 덕적도 국수봉주변 및 서포리해수욕장 주변 ○ 모래톱 : 굴업도, 동만도, 서만도 ○ 파식대 : 덕적도 북서쪽 해안
	서해중부-II	○ 사구식물 : 태안군 원북면 ○ 적송 : 태안군 안면도해수욕장 ○ 모감주나무 : 태안군 근흥면·안면읍, 보령시 오천면 ○ 활엽수림 : 보령시 오천면, 태안군 근흥면 ○ 모래사장 : 태안군 고남면 바람아래해수욕장 인근
	남해서부	○ 공룡화석지 : 보성군 득량 선소지역
	남해중부	○ 사구식물 : 남해군 삼동면·미조면·상주면·이동면, 거제시 연초면·동부면·남부면·윤들섬·학동·지심도·내도, 여수시 오동도 ○ 파식대 등 자연해안 : 고성군 하이동 상족암, 거제시 일운면·남부면·장승포, 마산시 구산동, 진해시 저도
	남해동부	○ 부산광역시 두도·생도·방패섬·술섬·오리도·자도·금문도·진우도·수리섬·송곳섬·굴섬·등대섬
	동해남부	○ 도서생태계 : 울릉도 ○ 회귀성어류 회유지 및 서식지 : 울진군 왕피천, 영덕군 오십천, 경주시 대종천

제2장 해역별 특성에 맞는 연안오염부하 적정관리

1. 현황 및 문제점

□ 연안해역수질 악화

- 1991년 이후 연안해역 수질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 기준으로 II등급(2mg/ℓ 이하)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해역은 III등급(4mg/ℓ 이하)으로 수질이 악화
 - 인천연안, 천수만, 군산연안, 목포연안, 광양만, 여수연안, 행암만, 마산만, 진해만, 부산연안, 울산연안, 속초연안 등은 III등급 수질
- 적조발생의 주요 원인물질인 영양염류의 오염도는 수질기준을 크게 초과
 - 총질소(TN)와 총인(TP)을 기준으로 할 경우 많은 해역이 III등급을 초과
 - 질소·인 제거시설을 갖춘 하수처리장·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

□ 육상오염원의 증가에 따른 연안오염 가중

- 연안의 대규모 개발과 육상기인 오염물질의 지속적 증가로 오염물질의 총량이 증가하고 해양오염의 종류도 다양화
 - 유류·중금속 오염, 부영양화, 환경호르몬에 의한 해양오염 심각
 - * 전세계 해양오염원 : 육상기인(77%), 선박기인(12%), 해양투기(10%), 기타(1%)
- 육상기인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절대부족
 - 하수처리율(1998년 기준) : 전체평균 61%, 연안지역 39%(선진국 연안은 90%)

□ 해양쓰레기 관리의 무방비

- 저층생태계를 파괴하는 육상폐수 및 쓰레기, 해상투기물, 폐어망·어구 등 해양 폐기물의 처리 미흡
 - 해양유용생물의 산란장 및 서식지를 잠식함으로써 연근해 어업자원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
- 전용소각장·집하장 등 해양쓰레기 처리시설의 절대부족으로 해상수거 쓰레기 재투기 사례 빈발 및 육상유입쓰레기 사전차단방안 등 육상과의 연계처리 미흡

2. 정책방향

□ 해역별 특성에 맞는 해양환경개선대책 수립·시행

- 수질·퇴적물·해양생물 등 해양환경측정망에 의한 조사 실시
 -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역별 특성에 따라 집중관리하여야 할 오염원·오염물질·해역별 해양환경기준 등을 설정
- 육상오염원인 하수·공단폐수·축산폐수 등의 발생원 조사 및 저감대책 수립
 - 하수·폐수처리장 확충 및 질소·인 고도처리시설 도입 등
- 환경관리해역 지정 및 관리기본계획 수립·시행
 - 오염우심해역은 특별관리해역으로, 청정해역은 환경보전해역으로 지정·관리
 - 해양오염실태 및 오염원 파악을 위한 수질 모니터링체계 구축

□ 해양쓰레기 발생억제 및 처리대책 마련

- 해양쓰레기 주요 오염원에 대한 관리강화로 해양쓰레기 발생 최소화
 - 하구에 폐기물 유입 차단막을 설치하고 육상유입 폐기물 처리비용의 오염원인자 부담원칙 확립
- 효과적인 해양쓰레기 처리체제의 구축
 -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수산업협동조합 등 쓰레기 수거·처리 관할기관간의 연계성 극대화
 - 해양쓰레기 전용소각장 및 소각로의 설치 지속 확대
 - 재활용업체 및 수거업체 지원·육성 및 해양쓰레기 재활용기술 개발

□ 오염으로 훼손된 연안을 복원·개선하는 연안해역개선사업 시행

- 훼손된 갯벌 및 철새도래지를 복원하기 위한 습지개선사업 시행
- 어장의 정화, 수중침전 폐기물 제거, 오염된 퇴적물 제거 등을 위한 오염해역 준설사업 실시
- 도서 및 어촌의 해변쓰레기 처리시설 및 해변관광지의 오폐수 처리시설 확충

<표 2-2> 해역별 특성에 맞는 연안오염부하 적정관리

정책방향	권역명	대상지역 및 내용
특별관리 해역 지정	서해중부- I	○ 아산만 ○ 특별관리해역(시화호·인천연안)의 해양환경개선대책 수립
	남해중부	○ 특별관리해역(광양만 및 마산만)의 해양환경개선대책 수립
	남해동부	○ 특별관리해역(부산연안 및 울산연안)의 해양환경개선대책 수립
	동해남부	○ 포항시 영일만
환경보전 해역 지정	서해중부- II	○ 천수만 수산자원보전지구
	서해남부- I	○ 곰소만(부안군 변산면·진서면·보안면·줄포면·홍덕면, 고창군 부안면)
	서해남부- II	○ 환경보전해역(함평만)의 해양환경보전대책 수립
	남해서부	○ 환경보전해역(완도·도암만, 득량만, 가막만)의 해양환경보전 대책 수립
	남해중부	○ 고성만, 자란만
연안오염원 관리	서해중부- I	○ 오염원 조사 및 모니터링(인천해역, 시화호, 아산만 해역)
	서해중부- II	○ 보령·태안화력발전소 주변해역 온배수 모니터링
	서해남부- I	○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실태조사(금강하구)
	서해남부- II	○ 해양환경 모니터링(목포연안, 영광원전주변, 영암군 영암호, 해남군 금호호) ○ 해류유통 정밀조사(무안군 탄도만)
	남해서부	○ 오염원 모니터링(울포관광지) ○ 담수호 및 주변해역 수질조사
	남해중부	○ 오염원 모니터링(광양만, 마산만, 고성만, 자란만, 하동화력발전소)
	남해동부	○ 하수처리시설 정비·확충(부산 및 울산 도심지역) ○ 해양환경 모니터링(낙동강하구, 가덕신항만, 울산신항만, 고리원자력발전소 및 화력발전소 주변) ○ 폐수·하수종말처리장 운영(녹산·온산미포·온산국가공단지역)
	동해남부	○ 소규모 간이처리시설 설치 및 정화시설 보급(하수관거설치 곤란지역) ○ 해양환경 모니터링(영일만, 월성원전 및 울진원전주변)
	동해중부	○ 생활하수 처리시설 확충(동해시, 강릉시, 속초시) ○ 수산가공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청초호, 주문진항, 묵호항) ○ 오염원조사 및 모니터링(경포호, 청초호, 영랑호, 화진포호, 송지호)
	제주	○ 어장의 백화현상 조사·연구 ○ 항만수역·어항·육상수조양식장 및 하수종말처리장 배출수 수질 모니터링 ○ 해변 관광시설 오수 및 쓰레기처리 종합대책 수립·시행

제3장 환경용량을 고려한 연안개발계획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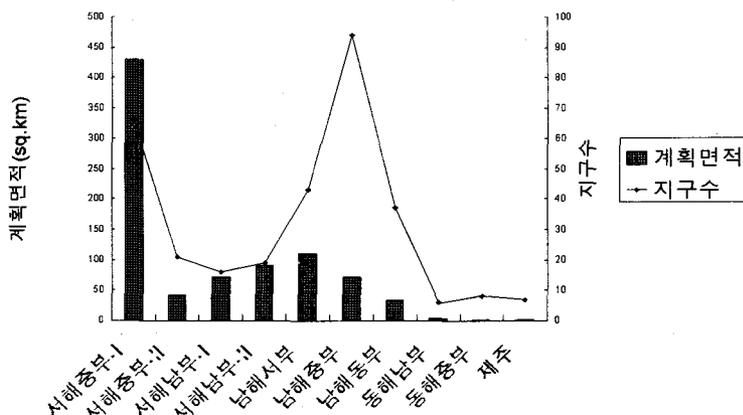
1. 현황 및 문제점

□ 연안지역에서의 개발 및 광역권 계획

- 서해안개발사업계획 : 산업단지 22개지구 13.4km², 간척 6개지구 1,123.9km²
- 광역권계획(7개권역) : 아산만권, 군산·장항권, 광양·진주권, 부산·경남권, 대구·포항권, 강원동해권, 광주·목포권역
- 21세기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구상

□ 제1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 전국적으로 총 988km², 456개 지구에 제1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 계획면적은 서해중부-I 권역이 417km²로 최대치이고, 건수는 남해중부권역이 143건수로 최고



[그림 2-1] 권역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현황

□ 개발수요의 연안집중으로 상충·경합

- 2011년까지의 연안개발수요는 전국의 신규토지수요(3,500~4000km²)의 약 50%를 상회하는 2,000km²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
 - 간척농지 320km², 임해공업용지 188km², 임해도시 1,648km², 해안관광지 등 68km² 추정
- 연안개발수요의 증대에 따라 개발과 보전 상호간 경합이 발생하고 있으며, 개발수요에 비례하여 연안환경의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이러한 개발압력은 입지유형을 불문하고 연안환경의 오염 및 연안생태계의 파괴 등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

2. 정책방향

□ 각종 국가종합계획과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연계·체계화

- 제4차 국토종합계획,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해양개발기본계획 등 확정되었거나, 수립중에 있는 정부정책의 기초와 연계하여 연안통합관리 역량 제고
- 전국계획, 도시계획 등과의 연계·체계화를 통한 연안관련계획의 통합·조정
- 연안통합관리계획의 목표실현과 지역적 구체화를 위해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연계수립

□ 연안개발수요의 계획적 관리

- 연안개발수요는 내륙지와의 기능 및 토지개발 수요분담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선별적으로 수용
 - 항만, 친수공간의 활용 등 해양성 입지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이를 억제
 - 임해산업 및 도시용지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매립을 억제하고 해안선 배후지를 중심으로 연안개발수요를 수용
- 연안의 매립지를 연안환경보전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2001~2011년)을 수립
 - 환경 및 생태계 변화와 대책, 매립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 등을 검토하여 수립

□ 연안의 보전과 개발질서의 확립

- 연안에서 보전·이용·개발행위를 할 경우 국가전체적 차원에서 계획단계부터 심사기능을 강화
 - 「선(先) 계획, 후(後) 이용·개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사업시행전에 반드시 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 환경용량의 범위안에서 사업규모를 조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의 개별적인 통제 방식보다는 「만(灣)」 중심의 총량적 환경오염의 평가방식을 채택하여 관리

<표 2-3> 환경용량을 고려한 연안개발계획 조정

정책방향	권역명	대상지역 및 내용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재검토	서해중부-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폐지 - 인천광역시 중구 잠진·북성지구, 동구 작약지구, 강화군 길상·강화지구, 옹진군 선재1·영흥·신도지구 - 경기도 안산시 시화1-1·시화1-2·시화1-3·시화1-4지구, 화성군 전곡·시화3·화용2·아산1지구 - 충청남도 당진군 아산·석문3지구 ○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시 재검토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지구, 중구 영종3지구, 강화군 내가·내리지구, 옹진군 선재3지구 - 경기도 김포시 대명지구, 화성군 화성지구, 평택시 만호지구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인주1·인주2지구
	서해중부-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폐지 - 태안군 달산·신진도·신온지구 - 서천군 당선·창선지구 ○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시 재검토 - 서산시 대로·창리·대죽II지구, 서천군 장항지구
	서해남부-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시 재검토 - 군산시 소룡·옥구·군장I·해망I·해망II·장미·금동지구
	서해남부-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폐지 - 목포시 영산강I·용양I지구 - 신안군 송공·장감I·장감II지구 ○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시 재검토 - 목포시 대반지구, 영암군 삼호II지구, 영광군 진내지구
	남해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폐지 - 여수시 우두II·서촌지구, 순천시 상내지구, 강진군 마량II지구 - 진도군 회동지구, 완도군 가용·보옥리·완도II·비자지구 - 해남군 옥동I·옥동II·한자I지구 ○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시 재검토 - 여수시 경도·국동·경호I·신월II·소호·웅천지구 - 강진군 마량I지구

정책방향	권역명	대상지역 및 내용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재검토	남해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폐지 - 전라남도 여수시 종화·굴전·강남금지구 - 경상남도 통영시 신리·영운지구, 거제시 고현·갈곶·장목Ⅱ지구, 남해군 단항지구, 고성군 배둔Ⅱ지구, 마산시 봉암지구 ○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시 재검토 - 전라남도 여수시 마상포지구 - 경상남도 진해시 충무로Ⅱ·경화지구, 통영시 화포·용남지구, 거제시 하청·장목지구, 사천시 비토·신촌·다평Ⅰ·다평Ⅱ·자혜지구, 하동군 갈사지구
	남해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폐지 - 부산광역시 강서·봉래·장림다대지구 ○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시 재검토 - 부산광역시 연화·다대Ⅴ-Ⅰ·가덕·중동·해상신도시·명지·다대Ⅱ·삼성지구
	동해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폐지 - 포항시 청림·동항지구
	동해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폐지 - 속초시 중앙지구 - 동해시 묵호지구 ○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시 재검토 - 속초시 청호Ⅰ지구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폐지 - 제주시 외도·용담지구 - 북제주군 애월Ⅱ지구 ○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시 재검토 - 제주시 동귀지구

정책방향	권역명	대상지역 및 내용
연안개발 계획 조정	서해중부-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황산도레저타운조성, 동막공유수면매립, 화도·길상머드제품제조채취단지조성, 옹진군 신·시도관광지개발 ○ 사업계획 수립시 관계기관과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용유·무의관광지개발, 경기도 시흥시 폐염전개발, 경인운하건설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대부임해관광지개발
	서해중부-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안군 최첨단 수산연구센터 조성 ○ 사업시행시 환경보전대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안군 안면도 해안관광도로 건설, 이원농어촌휴양단지 조성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산시 간월지구관광지 조성 - 보령시 원산도관광지 개발, 석태도관광지 개발 - 태안군 해양박물관 건립, 천수만 생태박물관 건립
	서해남부-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시 국제해상신도시 개발 - 부안군 계화도시개발, 해창지구 신도시개발, 새만금 해양관광단지 개발 ○ 사업계획 수립시 관계기관과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시 선유도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 부안군 상록모항지구 관광지 조성, 고창군 명사십리 해양관광지 조성
	서해남부-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평군 함평만 바다골재채취사업 - 신안군 비금해양생태공원 조성, 해양실버타운 조성, 도서문화박물관 조성, 해양교류역사공원 조성, 다도해 선사문화공간 조성, 토지항쟁기념공원 조성 ○ 사업계획 수립시 관계기관과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포시 영산강 통선문 사업, 함평군 함평만 휴양지구 개발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안군 유배문화공원 조성, 어부도래기념공원 조성
	남해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흥군 소록도 국제관광단지 조성 - 완도군 가족휴양촌 개발, 국민휴양촌 개발, 수련연수단지 조성, 케이블카·골프장 조성, 해양생태계 수중관람관 조성 - 강진군 해양유원지 조성, 여수시 여천복합관광단지 조성 ○ 사업계획 수립시 관계기관과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도군 관매도수변정화리조트조성, 마린빌리지조성, 귀성관광지조성 - 강진군 마량해양레저스포츠 관광지 조성 - 장흥군 장재도 관광개발 - 고흥군 남열국제휴양관광지 조성, 고흥만 관광공원 조성, 내발나로도지구 개발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도군 화용포 해양종합리조트 개발, 정도리 해양종합리조트 개발

정책방향	권역명	대상지역 및 내용
연안개발 계획 조정	남해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영시 한산면보존시설 설치 ○ 사업계획 수립시 관계기관과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산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통영시 미륵도관광개발 - 사천시 비토해양예술랜드 조성, 실안프론티어공원 조성, 선진리성주변공원 조성 - 고성군 공통테마파크 조성, 하동군 금성지구 관광지 조성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영시 관광섬개발, 도산해양레포츠단지 개발 - 사천시 녹도해양예술랜드 조성, 송포만 해양스포츠단지 조성, 신수도 세계어촌풍물시장 조성 - 고성군 해안골프장 조성 - 하동군 금남해수풀장 조성, 진교해양관광단지 조성
	남해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수립시 관계기관과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광역시 학리지방향만 개발, 대변연화지구 관광개발, 해운대 미포친수공간 조성, 다대포 종합관광위락단지 조성, 영도하리항 개발, 송도거북섬 개발, 이기대 도시공원 조성 - 울산광역시 일산유원지 개발(3단계이후 사업)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광역시 해운대 씨사이드라인 개발, 해운대 온천센터 개발 - 울산광역시 장생포지역 개발
	동해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시 송도유원지 개발, ○ 사업계획 수립시 관계기관과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진군 망양관광지 개발, 후정관광지 개발, 월송해양리조트 개발
	동해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수립시 관계기관과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성군 화진포호 관광지 개발, 송지호 관광지 개발 - 속초시 속초해수욕장해양첨단관광단지 조성, 외옹치 국민관광지 조성 - 동해시 망상리조트 개발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릉시 심곡리해양리조트단지 조성, 사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안목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 동해시 천곡유원지 조성, 대진시범어촌 관광단지 조성 - 양양군 동호리 해양테마관광 개발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환경보전대책 수립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제주군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조성, 용머리관광지구 조성, 송악산 관광지구 조성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귀포시 외돌개 해양체육관광 개발

제4장 연안재해방지사업의 체계적 전개

1. 현황 및 문제점

□ 국토구조상 연안재해에 취약

- 동해안이외의 대부분의 연안이 저지대 완경사의 지형구조와 천해로 형성되어 있어 재해에 취약
 - 지난 10년간('89~'98) 1조3천억원의 피해발생(전국의 22.5%)
- 연안재해는 태풍·고조해일·지진해일·파랑·집중호우 등에 기인하며, 연안 침수·해변침식·퇴적·비사·제방유실 등의 형태
 - 태풍 및 호우에 따른 피해가 대부분(95.4%)이고, 간헐적으로 2m~10m의 지진해일(Tsunami)이 내습
- 지구온난화 및 대규모 연안개발로 인해 해수위가 상승되어 해수범람 피해의 급격한 증가 예상
 - 연안도시·산업단지·발전소·항만 등의 연안입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해수침수 등 연안재해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크게 부족

□ 연안재해예방체계의 미비

- 연안재해 예방 및 복구관련 행정체제의 다원화 및 역할분담 미비
 - 시설별 관리주체의 다원화로 체계적인 연안재해방지에 한계
 - 각종 연안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미흡
- 종합적 연안재해방지 연구 및 기술 부족
 - 지구온난화에 따른 상승현상 분석 및 영향예측 관련조사 미미
 - 연안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연안재해방지기술 낙후
- 사전적 연안재해방지를 위한 정부투자의 미흡
 - 재해의 원인규명 등 예방적 대책 수립보다는 사후적 피해복구에 치중

2. 정책방향

□ 연안재해 예방체계의 통합관리

- 연안재해방지사업의 체계적·효과적 실현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체제 구축
 - 여러기관에서 추진하는 연안재해방지 사업을 연안정비계획에서 중복 및 경합 사업을 사전에 총괄적으로 조정
 - 연안재해의 피해도·반복성·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연안재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해예방 대비체제 구축 및 경보시스템 개발
- 해일·고조 기타 연안재해에 취약한 지구는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관리
 -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 복구위주에서 예방위주로 전환하여 해안보전시설 정비

- 해안방조제 및 제방시설의 정비, 항만 및 어항시설의 정비, 침식해안의 보강, 침수지역의 정비, 비사지구방재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정비
 - 연안정비 10개년계획 수립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
- 중복투자방지 및 재해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개별사업외에도 지역단위의 패키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

□ 지속적 모니터링 및 과학적 재해방지대책 수립·시행

- 원격탐사 기술을 활용하여 해안선의 광역감시체제 구축 및 실태조사 실시
 - 해안선·해저지형·해양시설물 등의 변동상황 및 조수·조류 등의 변화상태를 주기적으로 조사·점검
- 해난재해 예보기술을 비롯한 해안보호기술, 해양구조물 시공기술, 해양환경 보전기술, 해양투기 및 투기물 관리기술 등 연안방재관련 조사와 기술개발 촉진

제5장 친수연안공간 조성 및 연안접근권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친수연안공간 조성여건 미비 및 친수연안공간의 부족

-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친수활동에 관한 기본모형 및 계획기준의 결여로 친수연안공간의 조성여건 열악
- 해수욕장·유원지·해양관광지와 같은 관광개발차원으로 친수연안공간 접근
 - 어촌지역의 해수탕, 해상낚시터, 어항의 풍광을 연결한 어촌친수공간 개발 시도
 - 항만의 경우 화물유통원활화 및 보안시설적 성격으로 친수공간 확보에 부정적
- 갯벌의 심미적·생태적 가치의 재평가에 따라 자연생태공원 조성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성방안 연구 부재

□ 친수성 결여 및 연안접근권 제약

-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여가형태의 변화로 자연경관 및 친수연안공간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으나, 이의 체계적인 수용에는 한계
- 친수연안공간이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가능한 친수활동이 단조로움
 - 연안의 약 224개소 해수욕장중 110개소(49.1%)가 동해안에 산재
 - 해상골프장·크루즈관광·해중공원 등 다양한 친수연안공간의 부족으로 해수욕장, 해양관광지 방문과 같은 단조로운 친수활동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
- 지형적 조건에 의한 제약보다는 해안도로·공단·항만·발전소·군사시설 등 개별시설 위주의 공간배치로 인해 국민의 연안접근성이 크게 제약

□ 유흥·숙박시설물의 난립으로 연안경관 훼손

- 연안의 수변공간에 식당·호텔·콘도 등의 입지로 연안경관 훼손 및 오염유발
 - 대부분의 연안배후지가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유흥시설 난립 용이

2. 정책방향

□ 친수연안공간(Coastfront)의 확충 및 다양화

- 우리나라 연안의 특성에 맞는 「한국적 Coastfront」 모델 개발
- 해안변에 위치한 명승지·해수욕장 등 기존의 관광지외에 항만·공단·어촌 등에 친수연안공간의 다양화 추진
 - 공간개발의 외부효과 및 상호보완효과의 제고를 위해 인접 친수연안공간을 복합단지화
- 환경보전형 친수연안공간인 갯벌·철새도래지 등을 대상으로 해양생태공원 조성
 - 습지보호지역, 생태계보전지역 등 Bio-Belt 지정과 연계하여 환경교육장, 갯벌체험관광 등을 적극 개발
- 천혜의 자연관광자원과 청정생태환경을 활용하여 계절관광의 제약성을 극복한 4계절 복합형 친수연안공간 기능부여

□ 시민의 연안접근권 및 조망권 확보대책 수립·시행

- 해안선에 인접하여 관광시설 및 기타 시설물을 신축·개축할 경우 일반인의 해안접근로를 차단시키지 않기 위하여 기존통로 유지 또는 새로운 통로 확보
- 연안의 조망권 보호를 위해 자연해안의 보전조치 강구
 - 바닷가와 해안도로 사이의 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도시계획법상의 풍치지구·고도지구 등 지정으로 자연경관·해안 등에 대한 조망권 보호
- 연안경관의 훼손 또는 해류·해사의 흐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공유수면내 공작물(건축물 포함)의 설치 등 제한
 -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반영되고 해역이용협의 및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관리·운영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표 2-4> 친수연안공간 조성

정책방향	권역명	대 상 지 역
친수연안공간 확보	서해중부-I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포구상류, 중구 월미도, 연수구 송도 유원지·송도신도시지역 ○ 강화군 장화리·여차리·인산리·황산도·동검도·석모도, 옹진군 백령도·대청도·덕적군도 ○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구봉이, 화성군 제부도·입화도·궁평리
	서해중부-II	○ 태안군 안면도, 가로림만 갯벌~천리포수목원 ○ 홍성군 서부면 및 태안군 신진도 어촌지역
	서해남부-I	○ 군산·장항지역(인공섬 포함) ○ 고군산군도 지역
	서해남부-II	○ 신안군 압해도주변 갯벌지역 ○ 함평만 갯벌지역 ○ 목포시 삼학도
	남해서부	○ 진도군 군내면 벽파리 갯벌
	남해중부	○ 광양만 및 마산만 연안 ○ 남해군 창선면·삼동면 어촌지역
	남해동부	○ 부산항 및 울산항 ○ 부산광역시 해운대일대,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 ○ 울산광역시 정자일대 ○ 부산광역시 기장군(해운대 일부지역 포함)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촌지역
	동해남부	○ 포항시 환호해맞이공원, 장기곶등대일대 ○ 경주시 감포일대 ○ 울진군 왕피천 ○ 울릉군 울릉도
	동해중부	○ 고성군 화진포호·송지호 ○ 양양군 오산리, 강릉시 경포, 동해시 추암동, 삼척시 초곡리 ○ 속초시 연안
	제 주	○ 서귀포항 ○ 제주시 탐동해안, 제주항 등 항만지역 ○ 하도조간대, 창홍동 및 성산포 철새도래지 ○ 추자군도 및 우도

제6장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촉진 및 지원

1.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의의

□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을 통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간 연안관리의 통합성 향상

- 연안관리지역계획은 국가에서 수립하는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지역별 시행 계획적 위상
 -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제시한 정책방향에 따라 지역의 실정 및 특성에 맞는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으로 계획의 구체성 확보
- 지역주민 등의 참여를 통해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지역적 실효성 제고
 - 공청회·정책협의회 개최 등으로 민간단체·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연안관리심의회 등에 관련전문가 및 이해당사자가 참여함으로써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지역적 실천 유도

□ 지역별 연안개발을 환경친화적으로 유도

-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연안개발을 연안의 환경 및 자원의 가용 용량하에 환경친화적으로 시행하도록 유도
- 연안해역환경의 개선, 연안경관의 쾌적성 증대 및 연안이용의 안전성 제고 등을 통해 장기적·지속적으로 연안의 효용가치를 공유

□ 연안통합관리계획 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조장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는 등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을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연안통합관리의 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조장

2. 정책방향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기반 조성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역량제고를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확대
 - 실태조사 지원 및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지침 개발
 - 연안관리관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지역의 연안관리 전문가 양성 등
- 「선계획, 후개발」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사업 계획은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후 추진토록 유도

□ 지역주민 참여보장과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기능강화

- 지역연안관리심의회에 관련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해양환경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유도
- 연안통합관리에 대한 시민교육과 참여프로그램의 개발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역량을 강화
- 지역주민의 의문해소와 잠재적 갈등·상충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시 정기적인 협의회 개최

□ 연안관리지역계획의 효율적 심의·평가

-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을 통해 연안통합관리계획의 효과적 시행이 보장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심의·평가기준 개발
- 지역별 연안관리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 평가지침 운용방안 마련

제7장 전국 연안의 권역별 관리

가. 권역설정의 필요성

□ 국가차원의 연안관리를 위한 적절한 공간규모 설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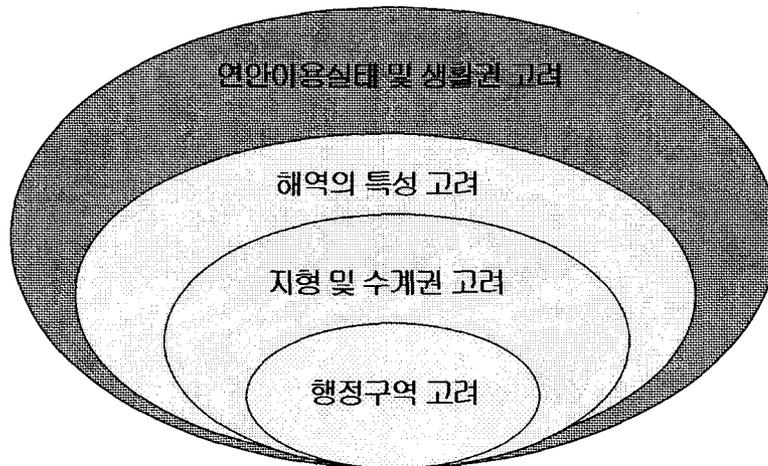
- 국가가 주체가 되는 「계획에 의한 연안관리」를 시행하기 위한 적절한 공간 규모의 확정 필요
- 국가 연안관리의 주요 쟁점과약을 위한 단위규모 설정 필요

□ 연안관리지역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 지역 연안관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권역의 기본 단위로 설정함으로써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과의 연계성 확보

□ 수계를 고려한 해역중심의 연안관리 정착

- 만·반도·도서 등 해역의 특성과 수계·지형 등 연안에 영향을 미치는 집수 구역의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생태계 중심의 연안관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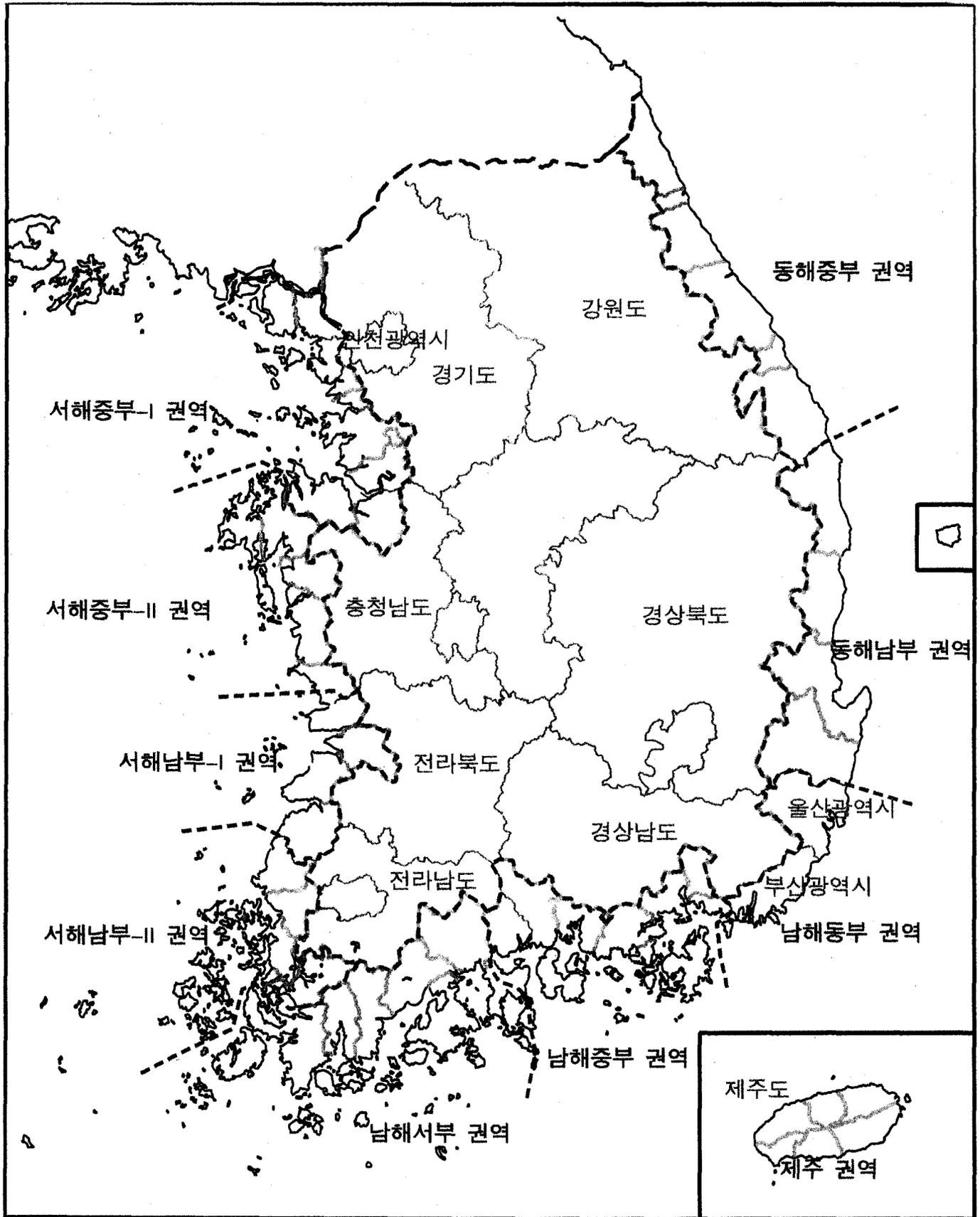


[그림 2-2] 권역설정시 고려요인

나. 권역의 설정

권역명	해당 행정구역	설정요인
서해중부-I	인천광역시 서구·동구·중구·남구·연수구·남동구·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김포시·시흥시·안산시·화성군·평택시, 충청남도 아산시·당진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 하구의 영향권을 고려하여 경기만과 아산만을 통합시스템으로 설정 ○ 인천광역시에서 아산을 연결하는 연안 신산업지대의 입지 고려
서해중부-II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홍성군·보령시·서천군(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안반도 관광자원 및 천수만 수산자원의 유기적 연관성 고려
서해남부-I	충청남도 서천군(일부), 전라북도 군산시·김제시·부안군·고창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하구의 영향권 및 연안관리의 주요쟁점인 새만금지역 고려
서해남부-II	전라남도 목포시·영광군·함평군·무안군·신안군·영암군·해남군(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 및 갯벌의 통합시스템 고려 ○ 해상교통의 연계성 고려
남해서부	전라남도 해남군(일부)·진도군·완도군·강진군·장흥군·보성군·고흥군·순천시(일부)·여수시(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 및 만의 통합시스템 고려 ○ 수산업 및 관광의존형 지역경제 특성 고려
남해중부	전라남도 순천시(일부)·여수시(일부)·광양시 경상남도 사천시·통영시·마산시·창원시·진해시·거제시·하동군·남해군·고성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의 수리적 특성에 따른 육상기인 오염부하영향 고려 ○ 임해산업활동 및 수산자원이용과의 연계성 고려
남해동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공단·도시 등 연안이용특성의 동질성 고려
동해남부	경상북도 경주시·포항시·울릉군·영덕군·울진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해역 및 행정구역 고려 ○ 임해산업활동 환경영향 고려
동해중부	강원도 삼척시·동해시·강릉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해역 및 행정구역 고려 ○ 해변관광위주의 연안이용 고려
제주	제주도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 통합시스템 고려

여 백



[그림 2-3] 연안통합관리 권역설정

여 백

제3편 권역별 연안통합관리 정책방향

여 백

제1장 서해중부- 권역

제1절 기본목표

- **육상기인오염의 체계적 관리 및 합리적인 연안생태계의 보전을 통해 수산업·해양관광 등 해양산업활동을 쾌적하게 유지**
 - 갯벌매립의 최소화, 육상기인 해양오염물질 유입의 저감 및 유류유출에 대비한 방제시스템 구축 등으로 해역환경 보호 및 개선
 - 철새서식지의 보호, 자연해안의 보전 등으로 도서 및 해양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유지와 심미적 가치 증진

- **21세기 동북아권 국제교류의 중심지로 전통해양문화와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다목적 해양공간 조성**
 - 인천국제공항 건설, 송도신도시 건설, 인천항 항만시설의 확충·정비 등 트라이포트(Tri-Port) 체제 확립에 따른 국제물류중심지로서의 기능과 조화를 이루는 친수연안공간 및 해양문화시설 조성
 - 도심해변친수공간·해수욕장·해양스포츠·갯벌체험학습장 및 해양역사유물 전시관 등이 지역별로 적절하게 배치되고, 교통망과 연계된 해양리조트공간 창출

- **임해산업권과 도서해양생태권간의 이질적인 연안이용행위를 조화롭게 조정**
 - 연안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산업 시설 등을 개발
 -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토대로 합리적인 연안개발사업을 추진

제2절 연안통합관리 정책방향

1. 보호지역 지정을 통한 연안생태계 집중관리

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1) 동향 및 전망

□ 강화도남단 갯벌 등 생태적으로 중요한 갯벌훼손

- 강화도남단 갯벌은 생물다양성이 높고, 저서생물이 군집하고 있으며 철새도래지로 보전의 가치가 매우 높으나 88km²가 매립지구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
 - 전형적인 하구 생태계로서 국내 하구중 가장 큰 자연갯벌
 - 바닷새가 매년 찾아오고 섬금류의 중간 기착지로 이용되는 지역이며 국제적으로 중요한 물새 10종 24,037개체수 관찰
- 람사협약기준에 의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인 영종도 남북단 갯벌·아산만 갯벌·남양만 갯벌 등에 대규모 매립추진
 - 영종도 남북단 갯벌은 인천국제공항 건설로 매립되고, 인천소래 및 영흥도 갯벌은 부분적으로 매립될 예정이며, 남양만은 대규모 매립이 진행중
- 최근 갯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고조로 갯벌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어패류 무단채취 및 쓰레기 투기 등 연안생태계 파괴

(2) 세부정책방향

□ 생태적·심미적 가치가 높은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 강화도남단 갯벌(강화도 길상면·화도면 남단에서 옹진군 북도면 상단까지)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갯벌보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시행
 - 해양수산부에서 추진중인 갯벌생태계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호지역 및 주변 관리지역을 확정
- 갯벌보전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공유수면매립, 공작물 설치 등 갯벌훼손 활동을 금지

□ 수도권지역 갯벌관광압력 증가에 따른 갯벌훼손방지방안 강구

- 갯벌내의 수산자원 및 해양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관광객의 갯벌출입을 일정지역 이내로 제한하고 갯벌내에서의 어패류 채취 제한
 - 갯벌출입지역 설정 및 어패류 채취제한에 대해서는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을 통해 지침을 마련하거나 조례 제정
- 지역내 민간단체 및 어민 등을 명예연안관리인으로 임명하여 관광객을 안내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
- 갯벌관광객을 위한 현지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안내판설치 등으로 갯벌의 중요성 및 관광지침을 홍보

□ 훼손된 갯벌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실시

-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제부리 바지락 시험어장 운영을 통해 민간단체·어촌계 및 전문가 등이 중심이 되어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나. 생태계 보전 및 관리

(1) 동향 및 전망

□ 보전가치가 높은 도서생태계 분포

- 갯벌생태계·자연해안·철새서식지 등 보전가치가 높은 도서
 - 강화도, 석모도, 불음도, 주문도, 소무의도, 영흥도, 선재도, 자월도, 대이작도, 사승봉도, 덕적도, 굴업도, 소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백령도 등
- 해안생물·희귀조류·식생·경관 등이 특이한 도서
 - 강화군의 우도·비도 등 8개 무인도와 옹진군의 신도·어평도 등 14개 무인도

□ 철새서식지 보전조치 필요

- 한강하구·강화도남단 등 주요 철새서식지중 강화도남단지역은 매립 및 인천 국제공항 건설 등으로 철새서식환경 위협
 - 한강하구지역은 재두루미 서식지로 총 14.9km²를 지정·보호
 - 강화도남단 지역의 우점종은 기러기류와 청둥오리이며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인 쇠창다리 도요새·노랑부리 백로의 이동상 중요한 경로로 자연생태계 모니터링 대상지역

(2) 세부정책방향

□ 도서지역의 자연생태계 및 자연경관 보호·관리대책 수립·시행

- 자연환경이 양호한 사구·적송 등 보호
 - 사구보호 :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옹진군 자월도남쪽해안, 대이작도·사승봉도주변
 - 적송군락 : 옹진군 덕적도 국수봉주변, 서포리해수욕장주변
 - 모래톱 : 옹진군 굴업도, 동만도, 서만도
 - 파식대 및 해식애 : 덕적도 북서쪽해안

- 자연해안에서는 해안의 보호 및 복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만 허용하고, 해류환경을 변화시켜 침식 또는 홍수를 유발할 수 있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 등을 제한

□ 자연경관이 우수한 무인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

- 강화군 우도, 비도, 석도, 수리봉, 분지도 및 인근 바위섬, 수지도, 소송도, 대송도
- 옹진군 신도, 어평도, 사승봉도, 몽통도, 소초지도, 할미섬, 향도, 각홀도 및 인근 바위섬, 소중통각홀도, 부도, 토끼섬, 광대도, 바지섬(상·중·하), 멩에섬, 동만도, 서만도
-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후 보전가치가 있는 도서에 대해서는 특정도서로 지정·관리

□ 주요 철새서식지를 「조수 보호구」로 지정

- 강화도남단갯벌, 옹진군 신도·동만도·서만도, 김포시 월곶면북단, 대부도, 남양만, 남양호, 아산호, 아산만, 삼교호 등을 지정·관리
 - 조수보호구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철새서식지 정밀실태조사 실시

- 조수보호구 지정후 철새서식지 상태를 감시하기 위해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의 참여를 통한 시민모니터링 프로그램과 철새관찰·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2. 해역별 특성에 맞는 연안오염부하 적정관리

가. 환경관리해역 지정 및 관리

(1) 동향 및 전망

□ 인천해역의 수질악화

- 인천해역의 수질이 1980년대 중반 II등급에서 1990년대 중반에는 III등급으로 저하
- 1990년대 중반 질소계 영양염류 농도가 III등급 수질기준을 2배 초과
- 인천지역의 공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오염원의 대량 방출은 공단인근 하천 및 주변지역 뿐만 아니라 경기만 및 인천항 일대로 그 영향권을 확대

□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인공호의 수질악화

- 시화호·삼교호·아산호 등의 담수호로 처리되지 않은 생활하수·산업폐수·축산분뇨 등이 유입되어 수질악화 가속

(2) 세부정책방향

□ 「특별관리해역」 지정 및 효과적인 해양오염방지대책 수립·시행

- 특별관리해역인 인천연안·시화호의 해양환경개선대책 수립·시행
- 해역오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정화사업 실시 및 비점오염원유입 저감대책 시행
- 시화호 및 주변 토지이용에 관한 종합관리대책이 수립될 때까지는 시화호의 수질을 악화시키거나 인근 생태계에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시설물의 설치 및 매립 등을 유보
- 해양오염이 심화될 우려가 높은 아산만해역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해역환경개선사업 실시

- 인천해역 및 아산만 해역의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 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
- 시화호·삼교호·아산호·남양호 등 인공호에서의 방류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분석하기 위한 모니터링 실시
- 인천해역에서 해역이용행위를 제한하고 해역환경개선사업을 시행

나. 연안오염원 관리

(1) 동향 및 전망

- 도서 및 갯벌 등으로 수도권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쓰레기와 관광지주변 음식점·위락시설 등에서 무단 방류하는 오폐수 등에 의해 연안오염 심각
- 대부도의 경우 시화호 간척이후 산발적인 갯벌관광을 추진하고 있어 갯벌 환경의 쾌적성 저하 및 지속적인 관광활동 장애요인으로 작용

(2) 세부정책방향

- 도서 및 수도권 주변 해변관광지의 음식점·위락시설 등에서 무단으로 방류되는 오폐수 및 쓰레기의 종합적 관리대책 수립·시행
- 강화군·옹진군·김포시 등에 산재하고 있는 해변관광지의 음식점·숙박업소 등에 대해서는 환경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3. 환경용량을 고려한 연안개발계획 조정

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재검토

(1) 동향 및 전망

- 송도신도시 조성사업은 주거지역 8.742km², 상업지역 1.683km², 녹지지역 7.275km² 등 총 17.7km²의 토지이용계획으로 1994년 7월 착공하여 진행중이며, 2단계 사업의 공유수면매립계획 지구로 총 13.5km² 지정
- 세계자연기금과 아시아습지보호국에서 보호해야 할 아시아의 주요 습지의 하나로 등록된 강화도남단 갯벌에 공유수면매립계획 지구로 88km² 지정
 - 인천광역시는 수도권 폐기물 매립지로 활용할 예정이나, 환경단체 및 민간단체 등은 갯벌보전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
- 시화호 내측에 반월특수지역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매립계획 지구로 시화3지구를 지정
 - 시화호에 대한 오염부하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어 시화호 수질개선대책 수립 및 매립의 타당성 검토필요

(2) 세부정책방향

□ 연안환경 보전을 위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폐지
 - 인천광역시 중구 잠진·북성지구, 동구 작약지구, 강화군 길상·강화지구, 옹진군 선재1·영흥·신도지구
 - 경기도 안산시 시화1-1·시화1-2·시화1-3·시화1-4지구, 화성군 전곡·시화3·화옹2·아산1지구
 - 충청남도 당진군 아산·석문3지구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유지하되,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2001~2011) 수립시 재검토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지구, 중구 영종3지구, 강화군 내가·내리지구, 옹진군 선재3지구
 - 경기도 김포시 대명지구, 화성군 화성지구, 평택시 만호지구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인주1·인주2지구

나. 연안개발계획 조정

(1) 동향 및 전망

- 인천연안·강화군·옹진군 지역에 관광개발계획이 다양하게 수립 또는 구상
 - 용유·무의 관광지 조성사업은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연계되는 관광단지 조성 및 해양휴양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중점사업
 - 강화군에서는 내리·외포리·황산도관광어촌개발, 동막해변관광지, 황산도 레저타운 등을 추진
 - 옹진군에서는 서포리국민관광지, 영흥해양관광지, 선재청소년휴양지, 신·시도 관광지, 십리포해수욕장, 자월권·덕적군도·서해5도 해양휴양지 등 관광지 개발계획을 다양하게 계획
- 아산만 지역은 평택시의 아산만 국민관광지·평택호 관광지 등 아산호를 중심으로 관광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당진군의 성구미 및 장고항 등에 관광지 조성을 계획

(2) 세부정책방향

□ 연안환경 훼손 및 사업타당성이 불투명한 개발계획 취소

- 강화군 황산도레저타운 조성, 동막공유수면매립, 화도·길상머드제품제조채취단지 조성, 용진군 신·시도 관광지 개발

□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 관광지로 지정된 인천광역시 용유·무의 관광지 조성은 공유수면매립 규모 등 조성계획 수립시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후 추진
- 경기도 시흥시 폐염전 개발은 갯벌생태계 보전 및 연안환경을 고려한 관련 계획 수립시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후 추진
- 경인운하 건설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후 추진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후 추진

-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기도 대부임해관광지 개발은 제2차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검토 및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후 추진

□ 연안개발수요의 계획적 관리

- 연안개발수요는 내륙지와의 기능 및 토지개발수요 분담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선별적으로 수용
 - 항만, 친수공간의 활용 등 해양성 입지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이를 억제
- 연안에서 보전·이용·개발행위시 국가전체적 차원에서 심사기능 강화
 - 「선 계획, 후 이용·개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사업시행전에 반드시 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4. 친수연안공간 조성 및 연안접근권 개선

(1) 동향 및 전망

□ 관광지 지정 및 자연관광 후보지 현황

- 인천광역시 중구의 을왕리 해수욕장, 옹진군 덕적도 서포리, 경기도 평택시의 평택호, 당진군 삽교호 등 4개 지역이 관광지로 지정
- 인천광역시 신·시도 해양유원지, 논현동 수변테마파크, 강화군 황산도·내리·외포리, 당진군의 행담도·성구미·장고항·도비도·한진 등 10개소의 자연경관이 뛰어난 자연관광 후보지 입지

□ 친수연안공간 조성여건 구비

- 인천광역시의 송도·월미도·자유공원 등은 수변 위락관광에 적합하고, 옹진군은 많은 도서를 보유하여 도서관광개발에 유리
- 강화군은 문화재 등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역사·문화관광에 적합
 - 강화도남단 갯벌과 문화재를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지역 단체를 중심으로 전개
- 시흥시의 갯벌은 염생식물이 광활하게 펼쳐진 내만갯벌로 도시에서 접근이 용이하여 갯벌관광지로서의 가치가 우수

(2) 세부정책방향

□ 항만 및 공업중심의 인천연안을 수도권시민이 편안하게 즐길수 있는 해양 문화·친수연안공간으로 지정

- 소래포구상류, 월미도, 송도유원지 및 송도신도시 등에 수도권 친수연안공간 지대를 형성
- 시민공원·해양박물관 등 해양문화시설공간을 남향 재개발을 통해 확보

□ 갯벌, 도서 및 유적지와 연계한 생태관광의 다양화 및 활성화

- 강화군·옹진군의 갯벌 및 도서생태계와 연계하여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생태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주민소득증대방안 마련
- 옹진군 덕적군도·백령도·대청도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주요 도서관광지를 연계하는 해상관광유람선 운영
- 강화도남단 갯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연계하여 생태마을·철새조망대 등 조성
- 장화리·인산리에 생태마을, 여차리에 철새조망대 및 철새관찰프로그램 운영, 황산도 및 동검도에 청소년 갯벌교육장 마련
- 대부도 구봉이 갯벌어장에 지역주민,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갯벌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강화도 해안에 분포하고 있는 유적지와 갯벌을 연계한 역사·생태관광자원 개발
- 석모도 남부해안 보문사, 염전, 어유정항, 민머루해수욕장 등을 연계
- 해수욕장 및 해변관광지의 접근로 및 편의시설 정비
- 강화군 동막해수욕장, 민머루해수욕장, 대빈창해수욕장, 영뜰해수욕장
- 안산시 대부도, 당진군 신평면, 석문면 교로리 왜목마을 및 난지도해수욕장

□ 해상군립공원 지정

- 화성군 제부도·입화도·궁평리를 연결하는 해역을 대상으로 해상군립공원을 지정하고 환경친화적 관광을 통한 주민 소득증대방안 강구

□ 연안경관 보호 및 접근권 개선

- 연안의 조망권 보호를 위해 자연해안의 보전조치 강구
- 바닷가와 해안도로 사이의 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도시계획법상의 풍치지구, 고도지구 등 지정으로 자연경관, 해안 등에 대한 조망권 보호
- 연안경관의 훼손 또는 해류·해사의 흐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공유수면내 공작물(건축물 포함)의 설치 등 제한
-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반영되고 해역이용협의 및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관리·운영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 해안선에 인접하여 관광시설 및 기타 시설물을 신축·개축할 경우 일반인의 해안접근로를 차단시키지 않기 위하여 기존통로 유지 또는 새로운 통로 확보

5. 특별지역관리계획 수립

(1) 인천광역시 해양문화공간 조성

□ 계획의 범위 및 수립주체

- 계획의 범위 : 인천광역시 중구·남구·남동구·동구·연수구·서구
- 수립주체 : 인천광역시

□ 목적 및 필요성

- 인천광역시 도심지역 해안은 항만시설·공단 등이 배치되어 있어 시민이 바다를 쾌적하게 접할 수 있는 여가공간 극히 제한
- 인천항과 더불어 인천국제공항 건설, 송도신도시 건설 등 트라이포트 체제를 갖춘 국제 해양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 해양문화공간의 체계적인 조성이 필요

□ 세부수립방향

- 항만시설과 연계한 친수연안공간 조성방안
- 해양문화 및 여가공간 개발방안 및 시민 해양문화프로그램 운영방안 등

(2) 강화군·옹진군 도서 생태관광 개발

□ 계획의 범위 및 수립주체

- 계획의 범위 :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 수립주체 : 강화군 및 옹진군

□ 목적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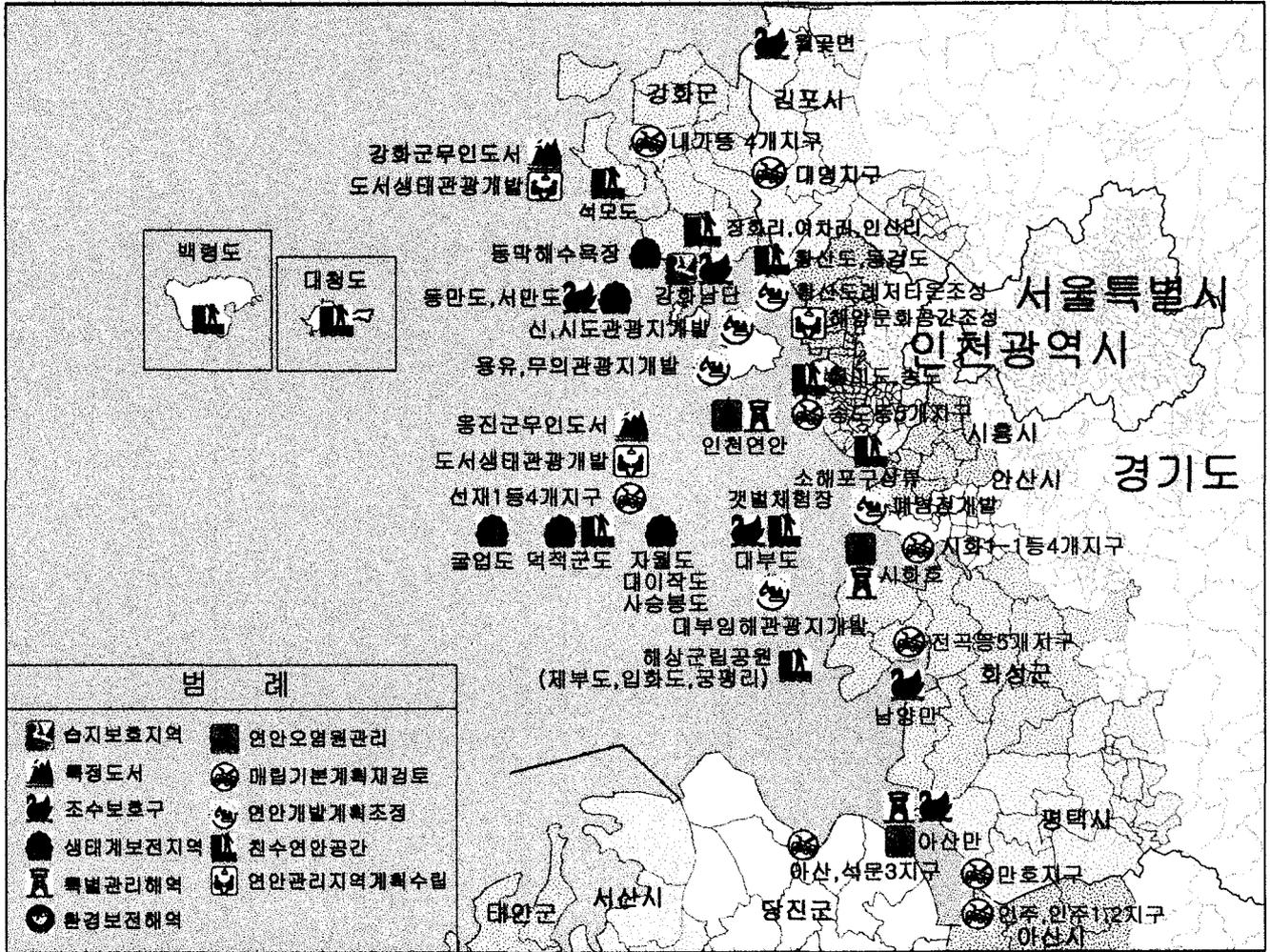
- 수도권시민의 해양관광 수요증대로 도서관광 개발압력 가중 및 도서생태계 파괴 우려
- 강화군 및 옹진군의 도서생태계 및 갯벌보전 필요성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요구를 합리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세부수립방향

- 도서의 갯벌, 기타 자연해안 및 경관의 보전방안
- 도서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방안 및 주민 참여방안
- 도서 생태관광에 따른 시설물조성 및 배치방안
- 도서 생태관광 시설물 입지에 따른 기준요건 등

<표 3-1> 서해중부- I 권역 연안통합관리 요약

추진전략	정책방향	대상지역 및 내용
보호지역 지정·관리	습지보호지역 지정	○ 강화도남단갯벌(강화군 길상면·화도면, 용진군 북도면)
	특정도서 지정	○ 강화군·용진군 무인도서
	조수보호구 지정	○ 강화도남단갯벌, 신도, 동만도, 서만도, 김포시 월곶면북단, 대부도, 남양만, 남양호, 아산호, 아산만, 삼교호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 사구보호 :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자월도남쪽해안, 대이작도·사승봉도주변 ○ 적송군락 : 덕적도 국수봉주변, 서포리해수욕장주변 ○ 모래톱 : 굴업도, 동만도, 서만도 ○ 파식대 : 덕적도 북서쪽해안
연안오염부하 적정 관리	특별관리해역 지정	○ 아산만 ○ 특별관리해역(시화호·인천연안)의 해양환경개선대책 수립
	연안오염원 관리	○ 오염원조사 및 모니터링(인천해역, 시화호, 아산만 해역)
환경용량을 고려한 연안개발계획 조정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재검토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폐지 - 인천광역시 중구 잠진·북성지구, 동구 작약지구, 강화군 길상·강화지구, 용진군 선재1·영흥·신도지구 - 경기도 안산시 시화1-1·시화1-2·시화1-3·시화1-4지구, 화성군 전곡·시화3·화옹2·아산1지구 - 충청남도 당진군 아산·석문3지구 ○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시 재검토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지구, 중구 영종3지구, 강화군 내가·내리지구, 용진군 선재3지구 - 경기도 김포시 대명지구, 화성군 화성지구, 평택시 만호지구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인주1·인주2지구
	연안개발계획 조정	○ 사업계획 취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황산도레저타운조성, 동막공유수면매립, 화도·길상머드제품제조채취단지조성, 용진군 신·시도관광지개발 ○ 사업계획 수립시 관계기관과 협의 - 인천광역시 용유·무의관광지조성, 경기도 시흥시 폐염전개발, 경인운하건설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후 추진 - 경기도 대부입해관광지개발
친수연안공간 조성	친수연안공간 확보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포구상류, 중구 월미도, 연수구 송도유원지·송도신도시지역 ○ 강화군 장화리·여차리·인산리·황산도·동검도·석모도, 용진군 백령도·대청도·덕적군도 ○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구봉이, 화성군 제부도·입화도·궁평리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특별지역관리계획 수립	○ 인천광역시 해양문화공간 조성 ○ 강화군·용진군 도서 생태관광 개발



[그림 3-1] 서해중부-I 권역 연안통합관리

여 백

제2장 서해중부-II 권역

제1절 기본목표

□ 자연경관과 역사유적을 연계·활용한 4계절 해양관광 추진

- 태안해안국립공원과 30여개의 해수욕장, 자연경관이 뛰어난 안면도 및 도서 지역, 온천 및 역사 유적지를 연계한 해양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안의 특성에 적합한 해양문화를 창조
- 갯벌 매립의 최소화, 육상기인 해양오염물질의 유입방지, 수산업 자가오염 저감, 규사 및 바다 골재채취에 대한 허가기준 강화 등으로 풍요로운 어장 환경 유지 및 생물 종다양성 확보

□ 오염원에 대한 총량규제로 연안생태계 보전

- 대산산업단지의 오염원 배출에 대한 총량규제로 청정지역으로 조성함으로써 가로림만의 갯벌 생태계를 보호하고, 바다와 육지, 어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발전
- 지속적인 시설확충이 예상되는 산업시설 등을 대규모 석유화학공업단지 지역인 대산지역으로 입지를 유도하여 오염관리의 효율성 추구

제2절 연안통합관리 정책방향

1. 보호지역 지정을 통한 연안생태계 집중관리

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1) 동향 및 전망

□ 대규모 매립에 의한 갯벌생태계 훼손

- 서산시 대산읍 석유화학단지 건설, 대죽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독곶지구 산업단지 조성계획 등으로 연안개발압력 가중
- 대규모 매립 및 화력발전소 건설 등으로 갯벌 등 해양생태계 파괴

□ 천수만 등의 철새서식환경 악화

- 철새서식지인 간월호 및 부남호 담수호에서 불법어로, 독극물과 총포를 사용한 밀렵, 항공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경음기 사용 등으로 철새서식환경 훼손
 - 천연기념물 201호인 고니를 비롯하여 약 15종 10만 마리의 철새가 서식지로 이용
 - 천연기념물 199호인 황새를 포함하여 약 20종 20만 마리의 철새가 이 지역에 도래하는 것으로 조사

(2) 세부정책방향

□ 생태적·심미적 가치가 높은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 태안군 소원면·근흥면·남면갯벌, 대천천주변 갯벌을 대상으로 지정·관리
 - 해양수산부에서 추진중인 갯벌생태계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호지역 및 주변 관리지역을 확정
- 갯벌보전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공유수면매립, 공작물 설치 등 갯벌훼손 활동 금지

나. 생태계 보전 및 관리

(1) 동향 및 전망

□ 자연경관 훼손 및 희귀식생 파괴 가속

- 안면도는 독창성을 지닌 송림, 모감주나무 군락, 새우란·안면춘란 등 희귀 식물이 서식하며, 수려한 해수욕장과 다수의 도서가 분포하는 등 천혜의 관광 자원을 보유
- 파도리 해수욕장 등 자연경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보호대책 미흡
- 태안군 신두리 해수욕장 접근로 확충 및 인근지역의 리조트 개발계획 등으로 사구 및 사구식생의 피해 우려

□ 생태계 및 경관에 대한 조사미흡

- 자연경관이 우수한 무인도서는 127개소가 분포하나, 도서생태계 가치 및 경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미비
- 태안군 신두리해수욕장 주변은 폭 100미터 길이 2km에 달하는 사구와 갯그렁·순비기나무 등으로 구성된 사구식생이 분포

(2) 세부정책방향

□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무인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

- 팽이갈매기가 서식하고 산정에 동백나무 군락지가 형성된 태안군 근흥면 난도를 특정도서로 지정·관리
- 보령시·서산시·홍성군·태안군의 127개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후, 보전 가치가 있는 도서에 대해서는 특정도서로 지정·관리

□ 훼손위기에 있는 자연생태계의 보호·관리대책 수립·시행

- 사구식물 :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신두리·장곡리
- 적 송 : 안면도 해수욕장주변
- 모감주나무 군락 : 태안군 근흥면 안흥리(마섬)·정죽리, 안면읍 승언리,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 활엽수림 :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상록수림), 태안군 근흥면 안흥리(신진도 소사나무림)
- 모래사장 : 고남면 바람아래 해수욕장인근

□ 주요 철새서식지를 「조수보호구」로 지정

- 태안군 고남면 바람아래 해수욕장 인근을 조수보호구로 지정·관리
 - 조수보호구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철새서식지 정밀실태조사 실시
- 조수보호구 지정후 철새서식지 상태를 감시하기 위해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의 참여를 통한 시민모니터링 프로그램과 철새관찰·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2. 해역별 특성에 맞는 연안오염부하 적정관리

가. 환경관리해역 지정 및 관리

(1) 동향 및 전망

□ 대규모 매립으로 해양생태계 변화

- 서산 A·B 지구, 남포지구, 부사지구, 이원지구 및 홍보지구 등에서 농업용지 및 산업단지 조성목적으로 대단위 간척·매립사업 시행
 - 서산 A·B 지구, 남포지구, 부사지구는 담수 방류, 오염 저층수의 배출, 해수 흐름 왜곡 등으로 어장환경 훼손

□ 수산자원보전지구 오염원 유입

- 천수만 연안 관할 4개 시·군 및 7개 읍·면에 육지 및 해면 총 213.481km²를 수산자원보전지구로 지정
- 농업진흥지역인 서산 A·B 지구에서 화학비료 및 농약을 다량 사용함에 따라 오폐수의 유입 및 담수 배출 등으로 양식어장의 폐사 및 어족산란기능 저하 유발

(2) 세부정책방향

□ 천수만을 「환경보전해역」으로 지정

- 천수만 수산자원보전지구를 어족자원 보호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환경보전해역으로 지정·관리

□ 천수만 해역환경개선대책 수립·시행

- 서산 A·B지구 담수호에서의 담수 및 저층오수 배출, 저질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어족자원 감소 및 해양생태계 왜곡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강구
 - 오염담수의 배출 규제 및 오염 저층수를 처리하기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해양환경 및 저질 생태계 변화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 천수만에서 개발사업 시행시 환경영향평가 강화

나. 연안오염원 관리

(1) 동향 및 전망

□ 해안관광지 및 도서지역에서 오폐수 및 폐기물 배출로 수질오염

- 대천 및 무창포 해수욕장을 비롯한 관광지는 횃집·수족관 등에서 해수취수관을 무분별하게 매설하고 하수를 방류함으로써 수질오염 유발
-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어업·생활쓰레기의 해양유입으로 수질 및 자연경관 훼손

□ 갯벌 및 바다골재의 무분별한 채취로 연안환경 훼손

- 화장품 재료로 사용하는 갯벌은 보령시 천북면 홍보지구 매립지, 골재는 호도 및 원산도 지역, 규사는 안면읍 신야리(방포) 등에서 채취
- 바다골재는 하천골재의 부족으로 인해 채취량이 더욱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해양오염 유발, 어장환경 훼손 및 저서생태계 위협

□ 화력발전소의 온배수 배출로 수산자원 감소

- 해안관광자원 및 어족자원이 풍부한 태안 및 보령지역의 화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온배수 배출로 수질환경 악영향 및 수산자원 훼손
 - 보령화력발전소의 경우 온배수 배출 영향권 지역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 진행

(2) 세부정책방향

□ 오폐수 및 쓰레기 종합관리대책 수립·시행

- 육상기인 쓰레기 발생량·발생원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종합대책 수립·시행
- 도서 및 연안에 산재하는 해변음식점·위락시설 등 관광시설의 배출 오폐수 및 쓰레기, 도서 및 낙후지역의 어업·생활쓰레기 수거·처리시설 설치

□ 골재채취기준 강화

-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을 통해 바다골재채취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가 시행 되도록 사업대상기준 개선
- 공유수면관리법에 의거 골재 및 규사채취를 위한 점·사용허가시 사업시행요건 강화

□ 화력발전소 온배수 배출영향 모니터링

- 화력발전소 배출 온배수의 영향범위, 수산자원 피해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대책 수립

3. 환경용량을 고려한 연안개발계획 조정

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재검토

(1) 동향 및 전망

□ 환경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매립계획 지구로 21개지구, 41.378km² 반영
- 장기적인 토지수요분석 및 재정 확충방안 부재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며, 매립과정에서 오탉물질이 발생하는 등 해역환경 손상

(2) 세부정책방향

□ 연안환경 보전을 위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폐지
 - 태안군 달산·신진도·신온지구, 서천군 당선·창선지구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유지하되,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2001~2011) 수립시 재검토
 - 서산시 대로·창리·대죽II지구, 서천군 장항지구

나. 연안개발계획 조정

(1) 동향 및 전망

□ 연육교 건설에 따른 식생 및 해양생태계 훼손

- 안면도 종합개발사업 및 안면도-연도-원산도-대천 연육교 건설사업은 자연경관과 모감주나무 등 천연기념물의 훼손을 초래

□ 공유수면매립을 전제로한 개발사업 추진

- 공유수면매립을 수반한 대규모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해양생태계 악영향 초래

(2) 세부정책방향

□ 연안환경훼손 우려 및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개발계획 취소

- 태안군 최첨단 수산연구센터 조성

□ 사업시행시 환경보전대책 수립

- 태안군 안면도 해안관광도로 건설은 사업시행시 연안경관 훼손방지대책 강구
- 태안군 이원농어촌휴양단지 조성은 실시계획 수립시 연안환경보전대책 마련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후 추진

- 서산시 간월지구 관광지 조성, 보령시 원산도 관광지 개발(삼시도리 관광지 개발 포함), 석태도 관광지 개발, 태안군 해양박물관 건립, 천수만 생태박물관 건립

□ 연안개발수요의 계획적 관리

- 연안개발수요는 내륙지와의 기능 및 토지개발수요 분담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선별적으로 수용
 - 항만, 친수공간의 활용 등 해양성 입지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이를 억제
- 연안에서 보전·이용·개발행위시 국가전체적 차원에서 심사기능 강화
 - 「선 계획, 후 이용·개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사업시행전에 반드시 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4. 친수연안공간 조성 및 연안접근권 개선

(1) 동향 및 전망

- 대부분의 관광지가 하계해수욕 중심의 시설형 관광지로 구성되어 있고, 대천해수욕장 개발,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 등 해안관광지 개발사업이 대단위 단지위주로 추진
- 도서지역연결 해상교통 미흡, 해양체험관광상품 미개발, 해저경관 및 생태계를 활용한 관광프로그램 미비

(2) 세부정책방향

□ 지역특성에 걸맞는 친수연안공간 기능부여

- 안면도를 서산 해미공항 건설과 2002년 국제꽃박람회와 연계한 4계절 친수연안공간으로 지정
 - 산림지역의 골프장 건설 및 공유수면매립을 통한 관광지 개발계획은 재검토
- 가로림만의 갯벌, 신두리의 사구, 만리포의 송림과 천리포의 수목원을 연계하여 생태공간으로 용도지정하는 등 친수연안공간 기능부여
 - 가로림만의 갯벌, 학암포·신두리의 해안 사구식생 관찰 프로그램 개발
- 어촌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홍성군 서부면 남당·어사·궁리, 태안군 안홍읍 신진도 어촌을 관광어촌으로 육성

□ 해수욕장 및 해변관광지에 접근로 등 편의시설 정비

- 태안군 천리포·만리포·신두리 해수욕장의 접근을 위해 도로포장 및 주차장 설치 등 편의시설 정비
- 홍성군 서부면 어사리에서 서산 A·B 지구 담수호까지의 접근로 정비

□ 연안경관 보호 및 접근권 개선

- 연안의 조망권 보호를 위해 자연해안의 보전조치 강구
 - 바닷가와 해안도로 사이의 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도시계획법상의 풍치지구, 고도지구 등 지정으로 자연경관, 해안 등에 대한 조망권 보호
- 연안경관의 훼손 또는 해류·해사의 흐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공유수면내 공작물(건축물 포함)의 설치 등 제한
 -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반영되고 해역이용협의 및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관리·운영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 해안선에 인접하여 관광시설 및 기타 시설물을 신축·개축할 경우 일반인의 해안접근로를 차단시키지 않기 위하여 기존통로 유지 또는 새로운 통로 확보

5. 특별지역관리계획 수립

(1) 안면도 종합개발사업 및 연육교 건설

□ 계획의 범위 및 수립주체

- 계획의 범위 : 태안군 안면읍, 보령시 신혹동
- 수립주체 : 충청남도

□ 목적 및 필요성

- 안면도 종합개발사업 및 연육교 건설계획은 자연경관과 모감주나무 등 천연기념물 및 적송 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 서식환경에 영향
- 연육교 사업은 건설비용에 비해 이용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해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공청회 등을 거쳐 사업타당성 검증

□ 세부수립방향

- 도로 및 시설물 설치기준 마련
 - 연도교 건설계획은 향후 이용도 등을 정밀검증한 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개발 참여권 보장조치 마련
 - 안면도 개발은 자연경관·녹지 및 해양생태계를 최대한 보호하는 조건에서 사업을 추진
 - 해안도로는 환경친화적으로 개설하고, 건축물 기타 구조물의 층수제한 및 경관보호 조치 마련
 - 방파제·방조제 신설시 무분별한 시멘트 시공금지
- 식생 및 해안보전방안 마련
 - 염분에 의한 모감주 나무의 고사방지대책 수립
 - 해안선의 침식방지 및 복원사업의 시행

(2) 천수만 수질환경 개선 및 생태계 복원

□ 계획의 범위 및 수립주체

- 계획의 범위 : 태안군 안면읍 남면, 서산시 부석면, 홍성군 서부면, 보령시 천북면
- 수립주체 : 충청남도

□ 목적 및 필요성

- 천수만의 수산자원보전지구는 서산 A·B지구의 간척·매립사업이후 어족자원 변화 등 해양생태계에 극심한 변화 초래
 - 유속 감속으로 저질 변화 및 패류양식어업의 환경악화 초래
 - 방조제내의 저층 오수와 담수 배출, 주변지역에서의 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수질 악화 및 적조현상 야기
- 천수만의 해양환경 악화를 방지하는 경우 수산자원보전지구 지정목적이 상실되고, 천수만 해역의 수질·저질환경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 필요

□ 세부수립방향

○ 연안해역환경 개선방안

- 관광지에서 해수의 무분별한 취수 및 오염해수의 배출 금지에 관한 사항
- 오염물질의 유입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에 대한 주기적 조사 및 모니터링 계획
- 해수유통 원활화, 오염물질 유입저감 및 해저면의 퇴적오염물질 준설 등 생태계 복원
- 홍보지구 간척사업에 대한 오염방지방안

○ 어업생산성 제고방안

- 수산자원보전지구내 어업활동 지원의 확충 및 적정밀도의 양식어업 개발
- 해수 유속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면도-황도간 연육 도로지역의 해수 유통로 확보
- 천수만해역의 잔여 갯벌생태계의 보호방안

(3) 대산 가로림만 이용행위상충 조정

□ 계획의 범위 및 수립주체

- 계획의 범위 : 서산시 대산읍, 태안군 태안읍 원북면·이원면
- 수립주체 : 해양수산부

□ 목적 및 필요성

- 서산시 대산읍과 태안군에 걸쳐있는 가로림만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간에 서로 다른 이용행위가 경합·상충
 - 해양수산부는 항만건설 후보지, 충청남도는 갯벌체험장 등 생태교육장 조성, 서산시는 산업단지 지원 및 배후도시 조성, 한국전력은 조력발전소 건설을 추진
 - 항만개발, 생태교육장 조성, 산업단지 조성, 조력발전소 건설 등 4가지 이용행위의 상충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바람직한 연안이용모형 정착 필요

□ 세부수립방향

- 4개 이용행위 이해상충 조정방안
 - 개발 및 보전에 따른 이해상충 조정을 위해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및 과학적인 조사를 통한 합리적인 보전·이용·개발방향을 설정하고 주민의 정주의식 고취대책을 마련
- 갯벌생태계 보호 및 청소년 교육장 활용방안
- 발전소 증설계획 재검토
 - 태안화력발전소의 증설 및 조력발전소 건설 추진에 대한 영향 등 검토

<표 3-2> 서해중부-Ⅱ 권역 연안통합관리 요약

추진전략	정책방향	대상지역 및 내용
보호지역 지정·관리	습지보호지역 지정	○ 태안군 소원면·근흥면·남면 갯벌 ○ 대천천주변 갯벌(보령시 오천면·신희동)
	특정도서 지정	○ 태안군 근흥면 난도
	조수보호구 지정	○ 태안군 고남면 바람아래해수욕장 인근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 사구식물 : 태안군 원북면 ○ 적송 : 태안군 안면도해수욕장 ○ 모감주나무 : 태안군 근흥면·안면읍, 보령시 오천면 ○ 활엽수림 : 보령시 오천면, 태안군 근흥면 ○ 모래사장 : 태안군 고남면 바람아래해수욕장 인근
연안오염부하 적정관리	환경보전해역 지정	○ 천수만 수산자원보전지구
	연안오염원 관리	○ 태안 및 보령화력발전소 온배수 모니터링
환경용량을 고려한 연안개발계획 조정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재검토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폐지 - 태안군 달산·신진도·신온지구 - 서천군 당선·창선지구 ○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시 재검토 - 서산시 대로·창리·대죽Ⅱ지구 - 서천군 장항지구
	연안개발계획 조정	○ 사업계획 취소 - 태안군 최첨단 수산연구센터 조성 ○ 사업시행시 환경보전대책 수립 - 태안군 안면도 해안관광도로 건설, 이원농어촌휴양 단지 조성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후 추진 - 서산시 간월지구관광지 조성 - 보령시 원산도관광지 개발, 석태도관광지 개발 - 태안군 해양박물관 건립, 천수만 생태박물관 건립
천수연안공간 조성	천수연안공간 확보	○ 태안군 안면도, 가로림만 갯벌~천리포수목원 ○ 홍성군 서부면 및 태안군 신진도 어촌지역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특별지역관리계획 수립	○ 안면도 종합개발사업 및 연육교 건설 ○ 천수만 수질환경 개선 및 생태계 복원 ○ 대산 가로림만 이용행위상층 조정

여 백



[그림 3-2] 서해중부-Ⅱ권역 연안통합관리

여 백

제3장 서해남부-1 권역

제1절 기본목표

□ 환경친화적인 산업지대의 개발

- 군산·장항지역은 21세기 연안국토 통합축인 환황해축과 내륙국토 통합축인 군산·포항축이 교차하는 지역으로서 서해안 경제발전 및 국토이용 거점권역으로 발전
 - 군장국가산업단지 및 군산신외항 건설 등 산업지대 개발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
- 금강하구 철새서식지 환경보전, 군산·장항지구 친수연안공간조성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 연안공간 창출

□ 자연경관·생태계 보전에 기반한 연안관광 개발

- 생태계보전 및 생태관광시설 조성 추진으로 시민의 연안생태 향유기회 제고 및 지속가능한 연안이용 실현
- 자연경관을 활용한 환경친화적인 친수연안공간 조성으로 시민의 연안접근을 제고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제2절 연안통합관리 정책방향

1. 보호지역 지정을 통한 연안생태계 집중관리

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1) 동향 및 전망

□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습지 훼손 우려

- 금강하구지역의 갯벌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철새서식지, 습지보전에 관한 국제협약(람사협약)이 정한 국제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습지지역
 - 검은머리물떼새 · 왕눈물떼새 · 개펄 · 민물도요 · 붉은어깨도요 · 뒷부리도요 · 흑꼬리도요 · 알라꼬리마도요 · 중부리도요 등이 관찰

□ 연안개발압력 증대로 서식환경 악화 우려

- 군산 · 장항권광역개발계획에서는 군산 및 장항 복합업무신도시 조성, 군산해상신도시 조성, 금강하구둑 개발, 금강연안 종합개발 등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
- 군산시 및 서천군은 금강하구 주변을 종합위락단지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수립

(2) 세부정책방향

□ 생태적 · 심미적 가치가 높은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 금강하구주변 갯벌을 대상으로 습지보호지역 지정 · 관리
 - 해양수산부에서 추진중인 갯벌생태계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호지역 및 주변관리지역을 확정
- 갯벌보전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공유수면매립, 공작물 설치 등 갯벌훼손활동을 금지

나. 생태계 보전 및 관리

(1) 동향 및 전망

□ 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도서생태계 훼손 우려

-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무녀도·선유도·장자도·대장도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연안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종합위락단지 조성 구상
 - 관광호텔, 컨벤션센터, 골프장, 마리나, 유람선, 해양스포츠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유기장, 위락시설 등을 유치

□ 철새서식지 이용 및 보전에 따른 이해상충

- 바다철새 관광자원화를 위한 금강하구 수변공간의 관광위락단지 조성(군산시, 서천군)과 이에 따른 철새서식환경 보전 등간의 상충
- 새만금종합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철새서식환경 훼손 우려

(2) 세부정책방향

□ 망주봉·선유팔경 보전방안 수립·시행

- 선유팔경을 비롯하여 연안도서에 대한 보전가치 평가후 평가결과를 토대로 보전방안 수립·시행
- 망주봉·선유팔경의 주변지역에 시설물 배치시 경관분석을 통해 입지를 선정함으로써 경관보전 및 전원공간 형성

□ 자연경관이 우수한 무인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

-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후 보전가치가 있는 도서는 특정도서로 지정·관리

□ 주요 철새서식지를 「조수보호구」로 지정

- 금강하구주변(군산시 성산면·구암동 일원 및 서천군 장항읍·마서면·화양면 일대)의 철새서식지를 조수보호구로 지정·관리
 - 조수보호구 범위 확정을 위해 철새서식지에 대한 정밀실태조사 실시
- 철새서식지의 상태 감시를 위해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및 철새 관찰·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군산·장항지역 및 새만금지구 철새서식지 주변에 철새 탐조대를 설치하여 시민 모니터링과 연계·운영

2. 해역별 특성에 맞는 연안오염부하 적정관리

가. 환경관리해역 지정 및 관리

(1) 동향 및 전망

- 수산업 이용제고 및 자원보전가치가 높은 연안해역의 보전대책 수립 필요
 - 곶소만(부안군, 고창군)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취소된 지역으로 주민의 어장이용도 및 의존도가 높은 지역
 - 변산반도 국립공원 이용객 증가에 따른 관광개발압력 증대 및 연안개발로 인해 해양환경 훼손 가능성 상존
 - 부안군 줄포면 연안은 칠면초 군락이 분포하고 있으며, 줄포면 우포리지구는 보호가치가 높은 것으로 조사

(2) 세부정책방향

- 곶소만을 「환경보전해역」으로 지정
 - 곶소만일대 풍부한 수산자원 및 갯벌생태계 보전을 위해 환경보전해역으로 지정·관리
 - 환경보전해역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어패류 서식·산란환경 건강성, 염습지 및 식생군락, 주변해역을 포함한 종합적 어장환경 및 대체어장 조성 타당성 등 조사

나. 연안오염원 관리

(1) 동향 및 전망

- 해양쓰레기로 인한 해역수질환경 악화
 - 금강수계를 통해 유입되는 육상기인 쓰레기로 인한 어장환경 및 연안환경 훼손
 - 금강하구둑 건설이후 육상기인 쓰레기는 하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서천군은 어장정화선이나 청소선이 없어 해양쓰레기 처리작업 수행에 애로

(2) 세부정책방향

□ 하천을 통한 유입쓰레기 실태조사 및 차단시설 설치

- 하계 홍수기시 금강하구를 통해 배출되는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실태 및 연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 조사
- 금강하구를 통해 연안으로 유입되는 대규모 육상기인 해양쓰레기의 근원적 관리를 위해 쓰레기 차단시설 설치 및 유입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시행

□ 도서지역 등 해변지역의 오폐수 및 쓰레기 관리대책 수립·시행

- 도서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해변의 음식점·위락시설 등 관광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폐수 및 쓰레기 관리대책 수립·시행
- 도서지역 관광지 및 부안군·고창군 해수욕장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 관리

3. 환경용량을 고려한 연안개발계획 조정

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재검토

(1) 동향 및 전망

□ 환경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16개 지구, 71.736 km²를 대상으로 수립되어 있으며, 이중 7개지구가 미시행

(2) 세부정책방향

□ 연안환경 보전을 위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유지하되,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2001~2011) 수립시 재검토
 - 군산시 소룡·옥구·군장I·해망I·해망II·장미·금동지구

나. 연안개발계획 조정

(1) 동향 및 전망

□ 연안환경보전과 위락단지 개발의 이해상충

- 군산시 및 서천군의 금강하구 관광위락단지 조성계획과 시민단체의 철새서식 환경 보전간 이해상충
- 보전가치가 높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춘 선유도에 대규모 시설형 관광단지 조성 및 연안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골프장 건설에 따른 해양생태계 악화

□ 군산 해상신도시 조성 및 새만금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상충

- 준설토 투기로 육지화가 이루어지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군장국가공단 건설, 군장신항만 건설, 새만금경제특구의 지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첨단배후도시 건설 등을 추진
 -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해 조류 및 금강하류 방류수의 흐름을 저해하여 금강연안 수질 악화 및 퇴적환경변화 우려
- 공업용지·농업용지·항만·관광·도시화용지·연구단지 등 새만금종합개발 사업에 대해 전라북도, 농업기반공사, 시민·환경단체간 이해상충

(2) 세부정책방향

□ 연안환경훼손 우려 및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개발계획 취소

- 군산시 국제해상신도시 개발, 부안군 계화도시 개발, 해창지구 신도시 개발, 새만금 해양관광단지 개발

□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 군산시 선유도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은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공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후 추진
- 부안군 상록모항지구 관광지 조성, 고창군 명사십리 해양관광지 조성은 향후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시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후 추진

□ 연안개발수요의 계획적 관리

- 연안개발수요는 내륙지와의 기능 및 토지개발수요 분담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선별적으로 수용
 - 항만, 친수공간의 활용 등 해양성 입지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이를 억제
- 연안에서 보전·이용·개발행위시 국가전체적 차원에서 심사기능 강화
 - 「선 계획, 후 이용·개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사업시행전에 반드시 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4. 친수연안공간 조성 및 연안접근권 개선

(1) 동향 및 전망

□ 해양문화 향유공간 부족

- 변산해수욕장, 위도해수욕장, 변산반도국립공원, 곰소만 갯벌자원, 금강하구 수변공간 등 해양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을 갖추고 있으나, 종합적인 해양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부재
- 변산반도국립공원지역내 건물 신축·개축 제한으로 인해 심미적 가치 저하
- 도시민에게 해양친화적 레저와 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해변공간 조성 필요

□ 산업단지 및 항만개발로 인한 시민의 연안접근권 제약

- 군장국가산업단지 입지 및 군산신외항 건설 등으로 인해 연안에 대한 시민의 접근권이 크게 제약
-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항만시설 확충시 시민의 자유로운 연안접근을 보장하고 쾌적하게 연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친수연안공간 조성 필요

(2) 세부정책방향

□ 군산·장항지역을 서해안시민을 위한 해양문화·친수연안공간 중심지로 육성

- 항만 및 공업중심의 군산·장항지역을 해양문화·친수공간이 어우러진 친수 연안공간으로 발전
 - 군장국가산업단지 및 군산신외항 개발시 친수연안공간 확보
- 인공섬과 인근 육지지역을 권역화하여 해양문화 및 생태공간지대로 육성

□ 도서생태계를 활용한 생태관광 개발 및 도서지역 접근권 제고

- 선유도 국제관광단지 조성 예정지구인 고군산군도 지역을 보전가치가 높은 도서 생태계와 연계하여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생태관광상품을 개발
- 고군산군도 도서지역의 접근을 제고하기 위해 새만금종합개발사업 방조제(신시도)와 무녀도를 연결하는 연도교 건설 추진

□ 연안경관보호 및 접근권 개선

-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자연경관 보호
 - 변산반도국립공원내 채석강 해안파식대 및 해식애 등 자연경관보전방안 마련
- 연안의 조망권 보호를 위해 자연해안의 보전조치 강구
 - 바닷가와 해안도로 사이의 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도시계획법상의 풍치지구, 고도지구 등 지정으로 자연경관, 해안 등에 대한 조망권 보호
- 연안경관의 훼손 또는 해류·해사의 흐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공유수면내 공작물(건축물 포함)의 설치 등 제한
 -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반영되고 해역이용협의 및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관리·운영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 해안선에 인접하여 관광시설 및 기타 시설물을 신축·개축할 경우 일반인의 해안접근로를 차단시키지 않기 위하여 기존통로 유지 또는 새로운 통로 확보

5. 특별지역관리계획 수립

(1) 금강하구 종합위락단지 조성

□ 계획의 범위 및 수립주체

- 계획의 범위 : 금강하구주변 연안(서천군 장항읍·마서면, 군산시 성산면·구암동)
- 수립주체 : 충청남도 및 전라북도

□ 목적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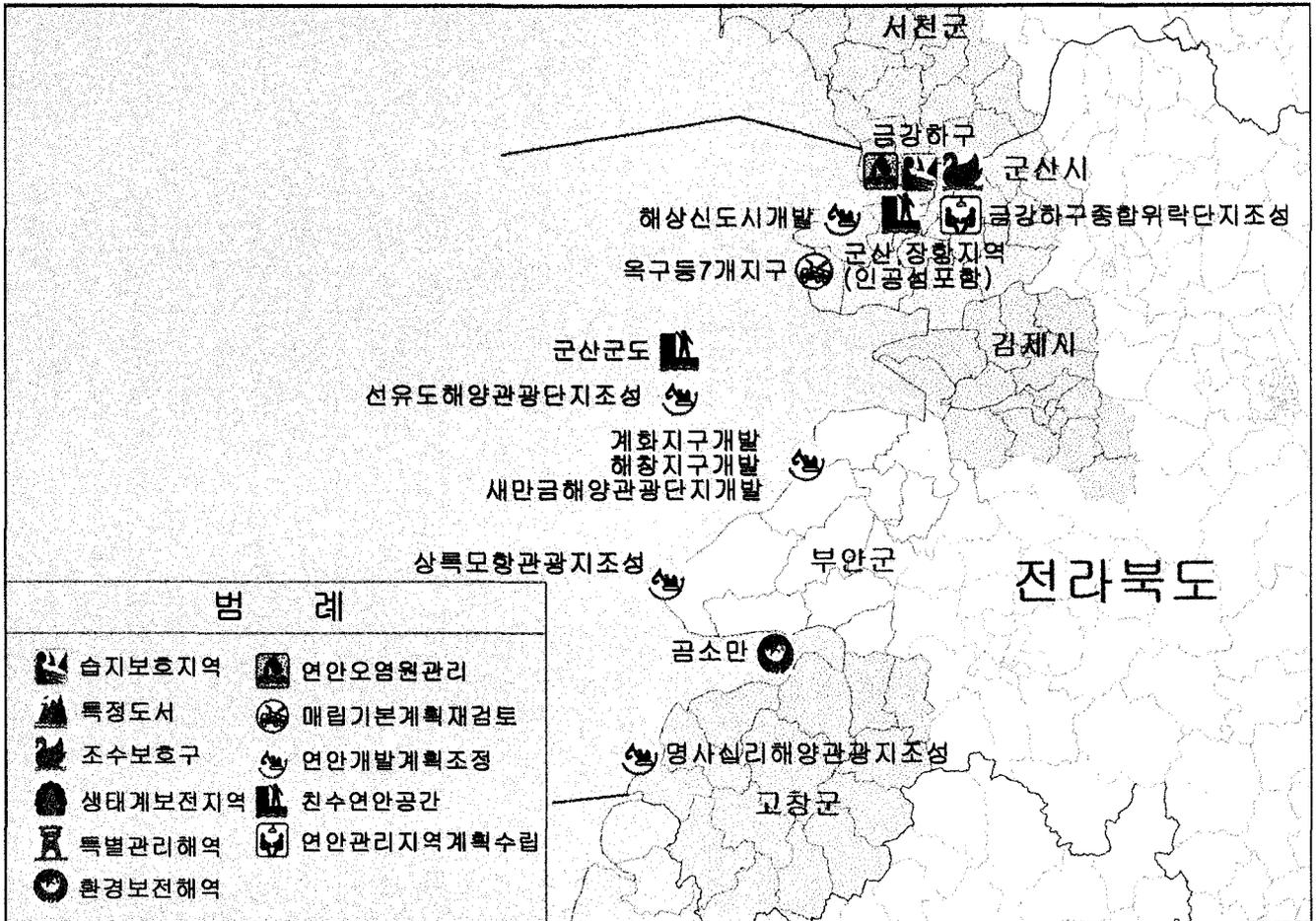
- 금강하구지역의 철새서식환경 보전과 연안친수공간 개발과의 조화 필요
 - 군산시와 서천군은 금강하구 철새서식지와 수변공간을 이용한 대단위 위락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
 - 지역주민의 연안접근권 보호 및 친수연안공간 조성을 위해 관광지 개발은 필요하나, 국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철새서식환경 훼손 우려

□ 세부수립방향

- 금강하구 수변구역 시설물 고도제한 방안
 - 금강의 자연지형과 주변환경 및 시설물과의 조화를 통해 관광가치를 제고 하고 주민의 쾌적한 연안이용 보호를 위해 시설물 고도제한
- 시설물 성격에 따른 공간배치방안
 - 시설물로 인한 철새서식환경 위협 방지 및 자연생태계를 이용한 관광가치 보전·유지를 위해 건축물 신축시 조수보호구로부터 일정거리 이격하는 방안 마련
- 수변공간 건축물 설치기준
 - 시설물의 재질·색채·디자인 등을 주위 자연경관과 부합하도록 선정
 - 연안구조물 설치시 자연특성을 반영한 환경친화적 구조물 설치
- 생태공원·철새탐조대 등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마련

<표 3-3> 서해남부- I 권역 연안통합관리 요약

추진전략	정책방향	대상지역 및 내용
보호지역 지정·관리	습지보호지역 지정	○ 금강하구 갯벌(서천군 장항읍·마서면, 군산시 성산면·구암동)
	조수보호구 지정	○ 금강하구 주변(서천군 장항읍·마서면·화양면, 군산시 성산면·구암동)
연안오염부하 적정관리	환경보전해역 지정	○ 곶소만(부안군 변산면·진서면·보안면·줄포면·홍덕면, 고창군 부안면)
	연안오염원 관리	○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실태조사(금강하구)
환경용량을 고려한 연안개발계획 조정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재검토	○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시 재검토 - 군산시 소룡·옥구·군장 I·해망 I·해망 II·장미·금동지구
	연안개발계획 조정	○ 사업계획 취소 - 군산시 국제해상신도시 개발 - 부안군 계화도시개발, 해창지구 신도시개발, 새만금 해양관광단지 개발 ○ 사업계획 수립시 관계기관과 협의 - 군산시 선유도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 - 부안군 상록모항지구 관광지 조성 - 고창군 명사십리 해양관광지 조성
친수연안공간 조성	친수연안공간 확보	○ 군산·장항지역(인공섬 포함) ○ 고군산군도 지역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특별지역관리계획 수립	○ 금강하구 종합위락단지 조성



[그림 3-3] 서해남부-I 권역 연안통합관리

여 백

제4장 서해남부-II 권역

제1절 기본목표

□ 보전적 연안이용 체계 및 해양환경개선체제 구축

- 갯벌 매립의 최소화, 육상기인 해양오염물질 유입의 저감, 유류방제시스템 구축 및 해양오염방지시설 확충 등으로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
- 신안군·함평군·영암군지역 철새서식지 보호,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및 자연경관의 보전 등으로 연안생태계의 종다양성 및 심미적 가치 증진

□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친수연안공간 조성

- 도심해변 및 향만지역, 해수욕장, 갯벌, 도서 등에 친수연안공간 조성
-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자원을 특화하여 해양역사·유물전시관 등 해양교육 공간 창출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임해지향적 산업지대 육성 및 어업기반시설 확충

- 목포 신외항 건설, 대불산업단지 및 삼호산업단지 등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으로 물류 및 광주·목포권 거점 임해산업지대로 육성
- 연도·연륙교 건설, 해상 관광·교통시설 확충, 도서지역 생활기반 정비, 어업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지역사회의 정주기반이 구축되는 새로운 어촌상 구현

제2절 연안통합관리 정책방향

1. 보호지역 지정을 통한 연안생태계 집중관리

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1) 동향 및 전망

□ 연안개발압력 증대로 인한 갯벌생태계 및 철새서식환경 훼손 우려

- 신안군 압해면 갯벌은 1998년 조사결과 8종, 26천여마리의 철새가 서식하나, 압해복합산업단지 개발지역으로 철새서식환경 파괴 예상
 - 신안군은 압해면 복룡리·학교리 지선 공유수면 등에 항만 및 압해복합산업 단지를 2016년까지 조성할 계획

□ 갯벌이 잘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함평만 갯벌지역을 중요한 습지로 평가

- 연안어족자원 보호 및 갯벌생태계 보전을 위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예정

(2) 세부정책방향

□ 생태적·심미적 가치가 높은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 영광군 백수읍 갯벌, 함평만 갯벌(영광군 염산면, 함평군 함평읍·손불면, 무안군 현경면·해제면) 및 신안군 압해도 주변 갯벌을 대상으로 지정·관리
 - 해양수산부에서 추진중인 갯벌생태계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호지역 및 주변 관리지역을 확정
- 갯벌보전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공유수면매립, 공작물 설치 등 갯벌훼손 활동을 금지

나. 생태계 보전 및 관리

(1) 동향 및 전망

□ 보전가치가 높은 도서생태계 분포

- 전라남도 도서지역의 식물생태계는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내륙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식물이 자생
 - 흑산도·홍도·가거도에는 대엽풍란(천연기념물)·구실갯밤나무·후박나무·곰솔·소사나무 등이 자생
 - 비금도·신의도·신도·우이도에는 해송림·동백림·해당화·털가침박달나무(희귀식물) 등이 자생

- 신안군 칠발도에는 바다제비·습새·칼새가, 구굴도는 뿔쇠오리·바다제비·습새가 천연기념물로 지정
- 추자군도, 거문도·백도 인근도서, 흑산제도에 대해서는 도서생태계 자연환경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체계적인 관리대책이 미흡

□ 방조제 공사가 이루어진 영암호 및 금호호의 개답에 따른 철새생태계 서식환경 훼손

- 1998년 조사결과 담수호 습지에는 4종, 123천여마리의 철새서식지가 관찰되어 철새서식지 보전조치 강구 필요

(2) 세부정책방향

□ 도서지역 자연생태계 및 자연경관 보호·관리대책 수립·시행

- 도서지역 희귀 동·식물 보호를 위한 서식환경 정밀조사 실시
- 체계적인 자원관리를 위한 보호·관리대책 수립·시행

□ 도서생태계 및 경관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

-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후 보전가치가 있는 도서에 대해서는 특정도서로 지정·관리
- 신안군 도서지역의 갯벌·자연경관·생태계 등에 대한 정밀생태계조사 실시
 - 도서지역 갯벌생태계, 자연경관권 보호를 위한 경관조사, 도서지역 동·식물 및 자연해안 실태조사 실시

□ 철새생태계 서식환경 보전조치 강구

- 영암호 및 금호호 철새서식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실시
 -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의 참여를 통한 시민모니터링 프로그램과 철새관찰·교육프로그램 개발

2. 해역별 특성에 맞는 연안오염부하 적정관리

가. 환경관리해역 지정 및 관리

(1) 동향 및 전망

수산자원 서식환경 보호 필요성 증대

- 함평만 해역은 반폐쇄성 해역이며, 수산자원보전지구로 지정
- 함평만 수산자원보전지구내 광업권 등록으로 향후 규사채취에 따른 어장환경 악화 예상
 - 수산자원보전지구내 36건의 광업권 설정

(2) 세부정책방향

「환경보전해역」인 함평만의 해양환경보전대책 수립

- 해역의 환경보전 및 수산자원 보전을 위한 해양환경관리계획 수립·시행
 - 해역 해양환경기준 설정 및 시설물 설치제한
 -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어장정화사업 실시 및 비점오염원 유입 저감대책 수립
-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생물다양성 보전방안 마련

나. 연안오염원 관리

(1) 동향 및 전망

오폐수 및 생활·어업쓰레기와 골재채취로 인한 해역오염

- 음식점·위락시설 등 관광시설로부터 오폐수 및 쓰레기가 다량 배출되고 있으나, 수거·처리체계 미흡
 - 압해면·임자면·팔금면·암태면 등 큰 도서를 제외한 소규모 도서의 경우, 발생폐기물 처리시설 미비로 연안환경 악화
 - 신안군의 경우 중·소규모 도서의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인해 하계 휴양객에 의한 다량의 쓰레기 및 연안어장 이용과정에서 어업쓰레기 발생

- 연안에 입지한 공단과 도시에서 유입되는 오폐수 및 생활하수 등과 방조제건설 등으로 인한 실트의 집적 등으로 연안해역의 오염 심각
 - 목포시와 영암군 사이에 건설된 영산 방조제의 경우, 여름철에 육상쓰레기를 다량으로 배출
-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방안으로 골재채취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생태계 파괴 등 연안환경 악화
 - 신안군은 다수업체가 골재채취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함평군은 손불면 월천리·학산리 지역에서 골재채취 추진

□ 향만 및 산업단지지역의 수질환경 악화

- 국립수산진흥원의 해양오염측정망 조사결과 17개의 조사정점 가운데 목포연안을 제외하고 비교적 양호한 수질등급을 유지
 - 도시 생활하수와 영산강 등에서 방류된 담수의 영향권내에 있는 지역인 목포항내, 영산강하구 및 고하도 동북방 등 3곳에서의 수질은 III등급을 기록

(2) 세부정책방향

□ 오폐수 및 쓰레기 종합관리대책 수립·시행

- 도서 및 연안에 산재하고 있는 해변음식점·위락시설 등 관광시설 배출 오폐수 및 쓰레기와 도서 등의 어업·생활쓰레기 수거·처리시설 설치
- 영산강하구와 목포항의 쓰레기 제거대책 수립·시행
 - 목포연안 해양쓰레기 저감 및 종합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영산강 하구를 통해 배출되는 해양쓰레기 발생원 및 발생량 조사

□ 골재채취 기준강화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통해 바다골재 채취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가 시행 되도록 평가대상사업기준 개선
- 공유수면관리법에 의거 골재 및 규사채취를 위한 점·사용허가시 사업시행 요건 강화

□ 수질환경 및 해류유통 정밀조사 실시

- 목포연안 및 영광원자력발전소 해역의 수질 및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
- 영암호 및 금호호 등 담수호 환경관리를 위한 수질 모니터링 실시
- 무안군 탄도만 지역에 대하여 해류유통 정밀조사 실시

3. 환경용량을 고려한 연안개발계획 조정

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재검토

(1) 동향 및 전망

□ 환경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19개지구 90.335km²를 대상으로 수립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도시용지 및 공업용지로 연안환경 훼손우려
- 장기적 토지수요 분석 및 재정 확충방안 부재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매립 과정에서 오탉물질 발생 등 해역환경 손상

(2) 세부정책방향

□ 연안환경 보전을 위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폐지
 - 목포시 영산강I·용양I지구, 신안군 송공·장감I·장감II지구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유지하되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2001~2011) 수립시 재검토
 - 목포시 대반지구, 영암군 삼호II지구, 영광군 진내지구

나. 연안개발계획 조정

(1) 동향 및 전망

연안개발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계획을 구상

- 전라남도 지역은 풍부한 갯벌 및 도서생태계를 보유하여 개발잠재력이 풍부하나,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산발적으로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의 타당성 의문 및 연안환경손상 예상

목포연안 삼학도 매립지 이용·복원을 둘러싼 이해상충

- 삼학도 매립지 이용·복원과 관련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목포시, 한국제분간 이해상충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해양레저부두 및 녹지조성 등 남항지역정비사업 추진
 - 목포시는 매립지 복원후 친수연안공간으로 조성할 계획
 - 한국제분은 싸이로 증설계획을 추진

(2) 세부정책방향

연안환경훼손 우려 및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개발계획 취소

- 함평군 함평만바다골재채취사업, 신안군 비금해양생태공원 조성, 해양실버타운 조성, 도서문화박물관 조성, 해양교류역사공원 조성, 다도해 선사문화공간 조성, 토지항쟁기념공원 조성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 목포시 영산강 통선문 사업은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후 추진
- 함평군 함평만 휴양지구 개발은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연계하여 추진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후 추진

- 신안군 유배문화공원 조성, 어부노래기념공원 조성

□ 연안개발수요의 계획적 관리

- 연안개발수요는 내륙지와의 기능 및 토지개발수요 분담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선별적으로 수용
 - 항만, 친수공간의 활용 등 해양성 입지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이를 억제
- 연안에서 보전·이용·개발행위시 국가전체적 차원에서 심사기능 강화
 - 「선 계획, 후 이용·개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사업시행전에 반드시 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4. 친수연안공간 조성 및 연안접근권 개선

(1) 동향 및 전망

□ 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

- 함평만·압해도·영암호·금호호 등 습지보호지역 및 조수보호구 지정대상지 주변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 제약으로 인해 지역주민과의 갈등 상존

□ 연안관광개발과정에서 지역주민 소외 및 갯벌관련 관광개발 중복·과잉

- 연안 및 도서지역 개발과정에서 위락형·시설형 관광개발로 인해 지역주민 참여에 의한 소득향상기회 감소
 - 지속적인 관광사업유지에 필요한 수려한 자연경관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지역주민 책임의식 결여
- 신안군의 경우 도서갯벌자원을 이용하여 갯벌생태공원·학습장·체험장 등 다수의 갯벌관련 관광상품을 개발하였으나, 경제적 타당성 분석 미비 등으로 중복·과잉투자 가능성 상존

□ 해변관광지 및 친수연안공간 부족

- 대부분의 해안이 갯벌로 이루어져 있어 신안군외에는 해수욕장 기능 발달 미약
 - 함평군 돌머리·안악 해수욕장, 영광군 가마미·백바위 해수욕장, 무안군 톱머리·홀통·조금나루 해수욕장 등이 있으나, 해변공간 협소
-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친수연안공간 조성 필요
 - 무안군 도리포지역은 제2종어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지역으로 친수연안공간 조성 필요

□ 해역오염 및 자연경관 훼손 우려

- 풍부한 관광자원과 양호한 경관자원 및 인구가 많은 도서지역에 일주도로 개발
 - 도서주민 정주여건 개선, 도서지역 잠재력 극대화, 거점도서의 개발촉진을 통한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총연장 424.4km의 일주도로 개설계획
- 신안군 도서를 비롯하여 도서간, 도서와 육지간의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도·연륙교 건설과정에서 야기되는 인근해역 오염 및 자연경관 훼손 우려
- 금호호 및 영암호 간척·매립용 토사채취 작업과정에서 연안경관 훼손

(2) 세부정책방향

□ 갯벌 및 도서생태계를 활용한 생태관광공간 확보

- 함평만 및 압해도 갯벌지역을 생태관광공간으로 용도지정하는 등 친수연안공간 기능부여
 - 함평만 습지보전을 위한 생태관광 조성범위에 무안군 연안습지를 포함하고, 철새서식지 주변에 철새 탐조대를 설치
- 흑산어촌관광단지는 정밀한 생태계영향평가를 토대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후 추진

□ 삼학도의 옛 정취를 되살려 관광자원화

- 목포의 상징인 삼학도를 매립지 복원을 통해 본래의 모습으로 재현하여 추억이 깃든 관광명소로 육성

□ 자연경관 보호 및 연안접근권 개선

- 연안의 조망권 보호를 위해 자연해안의 보전조치 강구
 - 바닷가와 해안도로 사이의 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도시계획법상의 풍치지구, 고도지구 등 지정으로 자연경관, 해안 등에 대한 조망권 보호
- 연안경관의 훼손 또는 해류·해사의 흐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공유수면내 공작물(건축물 포함)의 설치 등 제한
 -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반영되고 해역이용협의 및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관리·운영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 해안선에 인접하여 관광시설 및 기타 시설물을 신축·개축할 경우 일반인의 해안접근로를 차단시키지 않기 위하여 기존통로 유지 또는 새로운 통로 확보

5. 특별지역관리계획 수립

(1) 흑산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 계획의 범위 및 수립주체

- 계획의 범위 : 신안군 흑산면 흑산항 연안
- 수립주체 : 신안군

□ 목적 및 필요성

- 국립공원구역 제척시 난개발 우려
 - 흑산항지역을 국립공원구역에서 제척할 경우 경쟁적으로 위락시설을 신축하는 등 난개발 예상
- 어촌관광단지 조성시 연안생태계 영향 최소화 및 경관보호 필요
 - 흑산항을 중심으로한 난개발 및 쓰레기 다량발생 등으로 인해 연안생태계 훼손
 - 건축물의 무분별한 배치로 인해 주변 자연경관 훼손

□ 세부수립방향

- 신안군·국립공원관리공단·지역주민·전문가의 협의체제 구축
 - 흑산 어촌관광단지 조성지역의 조성면적, 시설물 배치, 경관보호조치 등과 관련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이해당사자간 협의체제 구축
- 환경영향평가 및 정밀 생태계 영향평가
 - 시설물 입지에 따른 주변 환경영향 및 국립공원지역에 자연생태계에 미칠 영향조사를 위해 정밀한 생태계 영향평가 실시
 - 환경영향 및 생태계영향 평가를 위해 평가항목·평가방법 등을 설정
- 오폐수 및 발생쓰레기 처리대책 수립
 - 흑산 어촌관광단지 시설물 및 이용객에 의해 발생할 오폐수 및 생활쓰레기 처리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 마련

(2) 목포연안 정비 및 개발계획 조정

□ 계획의 범위 및 수립주체

- 계획의 범위 : 목포시 연안
- 수립주체 : 목포시

□ 목적 및 필요성

- 도시정비 및 개발계획의 합리적 조정
 - 삼학도 복원사업, 유달산~고하도간 케이블카 건설, 북항건설, 신외항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연안이용계획간 조화 도모
 - 연안의 합리적 이용질서 구축을 위해 도시정비 및 개별계획에 대한 조정 필요

□ 세부수립방향

- 사업의 타당성 및 재원조달의 가능성 등의 분석을 통해 개별사업을 평가한 후 사업시행
 - 각 사업별 수요-공급분석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및 재원확보방안 분석
 - 전체사업을 대상으로 수요-공급을 분석한 후 사업 시행
- 자원과 공간의 합리적인 배분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주체간 협의체 구성
 - 전라남도·목포지방해양수산청·목포시·민간단체·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방안 강구

<표 3-4> 서해남부-Ⅱ권역 연안통합관리 요약

추진전략	정책방향	대상지역 및 내용
보호지역 지정·관리	습지보호지역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안군 압해도 갯벌 ○ 함평만 갯벌(영광군 염산면, 함평군 손불면·함평읍, 무안군 현경면·해제면) ○ 영광군 백수읍 갯벌
연안오염부하 적정관리	환경보전해역 지정	○ 환경보전해역(함평만)의 해양환경보전대책 수립
	연안오염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환경 모니터링(목포연안, 영광원전주변, 영암군 영암호, 해남군 금호호) ○ 해류유통 정밀조사(무안군 탄도만)
환경용량을 고려한 연안개발계획 조정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재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포시 영산강 I·용양 I 지구 - 신안군 송공·장감 I·장감 II 지구 ○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시 재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포시 대반지구 - 영암군 삼호 II 지구 - 영광군 진내지구
	연안개발계획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평군 함평만 바다골재채취사업 - 신안군 비금해양생태공원 조성, 해양실버타운 조성, 도서문화박물관 조성, 해양교류역사공원 조성, 다도해 선사문화공간 조성, 토지항쟁기념공원 조성 ○ 사업계획 수립시 관계기관과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포시 영산강통선문 사업 - 함평군 함평만 휴양지구 개발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안군 유배문화공원 조성, 어부도래기념공원 조성
친수연안공간 조성	친수연안공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안군 압해도주변 갯벌지역 ○ 함평만 갯벌지역 ○ 목포시 삼학도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특별지역관리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흑산 어촌관광단지 조성 ○ 목포연안정비 및 개발계획 조정



[그림 3-4] 서해남부-Ⅱ권역 연안통합관리

여 백

제5장 남해서부 권역

제1절 기본목표

□ 수산자원 보호·육성 및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발전 도모

- 수산자원 보호·육성, 어업생산기반시설 정비·확충, 어장정화사업, 해양쓰레기 처리 등 해역환경개선 등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삶의 질 제고
-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의식 제고를 위한 생활기반시설 확충, 연도·연륙교 건설 및 해상 관광·교통시설 확충

□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 유적을 토대로 해양관광 입지 구축

- 갯벌·도서 및 역사유물 등을 활용·연계한 친숙한 연안공간 조성
- 경쟁적인 지역별 관광개발 지양과 지역특성 및 경쟁력을 고려한 지역간 연안 관광 개발의 조화 추구
-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연안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주민소득 향상 및 정주의식 함양

□ 연안생태계 보전과 함께 합리적인 연안이용질서 구현

- 철새서식지 및 습지보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 보전 등으로 연안생태계의 종다양성 및 심미적 가치 증진
- 국립공원구역 조정 및 주민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수산자원보전지구 구역조정, 용도지역 중복지정 해소 등을 통해 연안의 합리적 이용질서 구현

제2절 연안통합관리 정책방향

1. 보호지역 지정을 통한 연안생태계 집중관리

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1) 동향 및 전망

□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순천만 하구습지 훼손 우려

- 순천만하구 습지는 강화도남단 갯벌과 더불어 보호가치가 매우 높은 습지지역으로서 희귀조류가 최다 서식하는 곳으로 조사
 - 관찰조류중 천연기념물 15종, 환경부지정 특정야생동식물중 멸종위기종 6종, 보호종 13종, IUCN적색목록 포함 12종,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부속서종 16종, 랍사협약 해당종 15종 서식
- 사회·경제적 활동에 의한 영향조사결과 순천만은 심각한 위협지역으로 분류
 - 상습적인 농경지 침수방지를 위해 지역주민들은 하도정비사업을 요구

□ 연안개발압력 증대로 인한 서식환경 훼손

- 백로·왜가리 등 희귀조류 서식지로 알려진 진도군 일원을 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관광지 개발을 구상
 - 지산면·임회면·의신면·고금면 등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주변지역 환경영향 발생

(2) 세부정책방향

□ 생태적·심미적 가치가 높은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 진도군 군내면 벽파리갯벌을 지정·관리
 - 해양수산부에서 추진중인 갯벌생태계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호지역 및 주변 관리지역을 확정
- 순천만 갯벌은 「순천만 습지보전 및 하도정비사업」에 대한 연안관리지역 계획 수립후 지정 검토
- 갯벌보전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공유수면매립, 공작물 설치 등 갯벌훼손 활동을 금지

나. 생태계 보전 및 관리

(1) 동향 및 전망

□ 보전가치가 높은 도서생태계에 대한 조사 미비

- 9개의 무인도서가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있으나 일부 학술조사외에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미비
 - 진도군 5개도서 : 병풍도(희귀동식물, 경관우수), 행금도(상록활엽수림, 희귀식물), 남태기도(상록활엽수림, 희귀식물), 변도(희귀식물, 식생우수), 백야도(해안생물, 경관특이)
 - 고흥군 4개도서 : 대옥대도(경관우수, 해안생물), 대항도(상록활엽수림), 곡두도(희귀동물, 식생우수), 목도(희귀동물, 해안생물)

□ 국제적으로 중요한 철새서식지에 대한 관리정책 미흡

- 순천만·진도군·해남군·고흥군 등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철새서식지이나, 관광지 개발을 구상하는 등 철새서식지 훼손 우려
 - 순천만 : 희귀조류 최다 서식
 - 진도군 : 백로·왜가리 등 희귀조류 서식
 - 해남군 : 국제적으로 중요한 철새 5종 13,000여마리 관찰
 - 고흥군 : 갈대군락 및 철새서식지

(2) 세부정책방향

□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및 자연경관·생태계 등에 대한 도서생태계조사 실시

- 보성군 득량 선소지역 공룡화석지를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
- 도서식생 및 생태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후 자연경관 및 생태계 우수도서는 「특정도서」로 지정하여 관리

□ 철새서식지를 「조수보호구」로 지정

- 진도군 군내면 벽파리,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를 조수보호구로 지정·관리
 - 조수보호구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철새서식지 정밀실태조사 실시
- 조수보호구 지정후 철새서식지 상태를 감시하기 위해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의 참여를 통한 모니터링 및 철새관찰·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2. 해역별 특성에 맞는 연안오염부하 적정관리

가. 환경관리해역 지정 및 관리

(1) 동향 및 전망

□ 해양환경오염 심화

- 국립수산진흥원 30개 연안조사정점중 7개 정점에서 해역환경수질 II등급, 2개 정점(여자만 장도북방, 가막만 대경도 동북방)에서 III등급을 기록하고 있어 양호한 수질환경을 유지
- 양식어장의 밀집으로 인한 자가오염 및 육상기인 축산폐수 등으로 인해 오염 심화
- 여자·득량만의 경우 축산폐수로 인한 연안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축산폐수에 의한 총질소 및 총인의 오염부하비중은 84.6% 및 92.8%로 조사

(2) 세부정책방향

□ 「환경보전해역」의 해양환경보전대책 수립

- 환경보전해역으로 지정된 완도·도암만, 득량만, 가막만 연안을 연안어족자원 보호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해양환경관리계획 수립·시행
 - 해역 해양환경기준 설정 및 시설물 설치제한
 -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어장정화사업 실시 및 비점오염원 유입 저감대책 수립
-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생물다양성 보전방안 마련

나. 연안오염원 관리

(1) 동향 및 전망

□ 육상기인 오염원에 의한 해안관광지 및 연안환경 훼손

- 보성군 울포해수욕장의 경우 육상기인 오염원인 폐 비닐 및 계분 등의 유입으로 어자원 폐사 및 갯벌체험 등 관광자원 활용기회 감소
- 도서 및 낙후지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및 생활쓰레기 처리체계 미흡으로 인해 연안해역 오염심화

□ 골재채취로 인한 해역오염

- 벽교리·전일리일대의 수산자원보전지구내에서 골재채취를 추진할 계획으로 저서생태계 및 어장환경 훼손 예상

□ 관광지 비점오염원 유입 및 해수욕장에 대한 보건성 조사 미흡

- 해수욕장 등 관광지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조사 미흡 및 자료부족으로 관리대책수립 곤란
- 해수욕장 이용객의 보건확보를 위해 비점오염원 및 병원균 등을 비롯하여 해수욕장 유지에 필요한 조사 전무

□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인공담수호에 대한 해역환경 영향조사 부재

- 해남군 금호호, 진도군 군내지구 등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담수호 내부 수질환경 및 담수배출로 인한 해양환경 영향에 대한 조사미비로 수질환경개선 대책수립 곤란

(2) 세부정책방향

□ 오폐수 및 쓰레기 처리 및 오염저감대책 수립·시행

- 도서 및 연안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음식점·위락시설 등 관광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폐수 및 쓰레기 종합처리대책 수립·시행
- 순천시 연안의 폐염전 등 연안지역을 이용한 대하양식장 배출수로 인한 연안오염 영향조사 및 저감대책 수립·시행
- 여자·득량만에 축산폐수 유입에 따른 오염부하 저감을 위해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 및 감독·운영 강화

□ 골재채취 기준강화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통해 바다골재채취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가 시행 되도록 사업대상기준 개선
- 공유수면관리법에 의거 골재 및 규사채취를 위한 점·사용허가시 사업 시행 요건 강화

□ 해안관광지 비점오염원 유입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울포관광지 육상기인 오염원에 의한 연안오염방지를 위해 수질 및 생태환경 오염현황 및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 실시

□ 담수호 및 주변 해역에 대한 해양환경 영향조사 및 관리대책 수립

- 연안해역 수질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인공담수호 및 하천구역에 대하여 수질오염방지 조치 강구
 - 진도군 군내지구, 강진군 사내지구, 고흥군 고흥지구, 완도군 화흥지구·약산우두지구·고금항동지구, 장흥군 삼산지구, 보성군 득량지구(득량만 방조제), 해남군 고천암 담수호

3. 환경용량을 고려한 연안개발계획 조정

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재검토

(1) 동향 및 전망

□ 환경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 43개지구 110.379km²를 대상으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도시용지 및 유보지역
- 장기적 토지수요 분석 및 재정 확충방안 부재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며, 매립 과정에서 오탉물질 발생 등으로 해역환경 손상

(2) 세부정책방향

□ 연안환경 보전을 위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폐지
 - 여수시 우두Ⅱ·서촌지구, 순천시 상내지구, 강진군 마량Ⅱ지구, 진도군 회동지구, 완도군 가용·보옥리·완도Ⅱ·비자지구, 해남군 옥동Ⅰ·옥동Ⅱ·한자Ⅰ지구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유지하되,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2001~2011) 수립시 재검토
 - 여수시 경도·국동·경호Ⅰ·신월Ⅱ·소호·웅천지구, 강진군 마량Ⅰ지구

나. 연안개발계획 조정

(1) 동향 및 전망

□ 재원확보, 해양환경영향,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계획 구상

- 21세기 전라남도비전에서 제시한 연안개발계획은 총 26개사업에 달하며, 대부분의 사업이 추진주체가 확정되어 있지 않거나 재원확보가 불투명
- 해양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국제적 관광지 조성을 구상
 - 고흥군 소록도 국제관광단지 조성, 완도군 가족휴양촌 개발, 국민휴양촌 개발, 화홍포 해양관광리조트 개발, 강진군 해양유원지 조성 등

(2) 세부정책방향

□ 연안환경훼손 우려 및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개발계획 취소

- 고흥군 소록도 국제관광단지 조성, 완도군 가족휴양촌 개발·국민휴양촌 개발·수련연수단지 조성·케이블카/골프장 조성·해양생태계 수중관람관 조성, 강진군 해양유원지 조성, 여수시 여천복합관광단지 조성

□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 진도군 관매도 수변정화리조트 조성·마린빌리지 조성·귀성관광지 조성, 강진군 마량해양레저스포츠관광지 조성, 장흥군 장재도 관광개발, 고흥군 남열 국제 휴양관광지 조성, 고흥만 관광공원 조성, 내발나로도지구 개발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시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후 추진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후 추진

- 완도군 화홍포 해양종합리조트 개발·정도리 해양종합리조트 개발

□ 연안개발수요의 계획적 관리

- 연안개발수요는 내륙지와 의 기능 및 토지개발수요 분담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선별적으로 수용
 - 항만, 친수공간의 활용 등 해양성 입지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이를 억제
- 연안에서 보전·이용·개발행위시 국가전체적 차원에서 심사기능 강화
 - 「선 계획, 후 이용·개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사업시행전에 반드시 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4. 친수연안공간 조성 및 연안접근권 개선

(1) 동향 및 전망

□ 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 발생

- 순천만·고흥군·해남군·진도군 등 습지보호지역 및 조수보호구 지정대상지 주변 지역주민의 경우 재산권 행사 제약 우려

□ 관광지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

- 진도~해남간 진도대교일원 관광지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 우려
- 수려한 자연경관 및 문화역사 유적자원을 기반으로 관광지개발을 계획하고 있어 자연경관 및 해안생태계 훼손방지대책 수립 필요

(2) 세부정책방향

□ 습지보호지역의 주민을 위한 생태관광 활성화

- 진도군 군내면 벽파리 갯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생태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주민소득증대방안 마련

□ 연안경관보호 및 접근권 개선

- 연안의 조망권 보호를 위해 자연해안의 보전조치 강구
 - 바닷가와 해안도로 사이의 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도시계획법상의 풍치지구, 고도지구 등 지정으로 자연경관, 해안 등에 대한 조망권 보호
- 연안경관의 훼손 또는 해류·해사의 흐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공유수면내 공작물(건축물 포함)의 설치 등 제한
 -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반영되고 해역이용협의 및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관리·운영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 해안선에 인접하여 관광시설 및 기타 시설물을 신축·개축할 경우 일반인의 해안접근로를 차단시키지 않기 위하여 기존통로 유지 또는 새로운 통로 확보

5. 특별지역관리계획 수립

(1) 순천만 습지보전 및 하도정비사업

□ 계획의 범위 및 수립주체

- 계획의 범위 : 순천시 인안동·해룡면·별량면·도사동
- 수립주체 : 순천시

□ 목적 및 필요성

- 순천만은 종다양성과 어족자원이 풍부하며 동천하류의 갈대숲, 순천만의 간석지 및 주위의 농경지 등 희귀조류의 좋은 서식환경을 형성하여 보전필요
 - 순천만에는 서식조류 149종, 천연기념물 12종, 국제희귀종 10종 등이 서식
- 순천시 동천 하구(순천만)~이사천 합류점이 하상퇴적 및 통수단면 부족으로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순천만 주변지역 보호를 위해 하도정비사업 추진 필요
 - 오탉방지시설 설치, 갈대숲 훼손면적을 최소화함으로써 하구습지 및 철새 서식환경 피해 극소화 도모
- 순천만 보전 및 하도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순천시·지역주민·민간단체·전문가 등 이해당사자의 이해상충 조정을 통해 보전과 연안이용의 합리적인 조화도모 필요

□ 세부수립방향

- 순천시·지역주민·민간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이해상충 조정
 - 순천만 생태공원 조성사업 및 하도정비사업의 병행 추진방안
 - 하도정비사업 추진시 자연친화성 제고 및 습지훼손 최소화를 위한 정밀 연구조사
- 하도정비사업 추진시 독특한 갈대군락지가 조성되어 있는 하구습지와 농경지 훼손 최소화
 - 하천유수 흐름의 효율성만을 고려한 직선화사업을 지양하고, 자연지형을 유지
- 순천만 생태공원 조성시 탐방·교육시설 공간배치방안
 - 하구습지 및 철새서식환경 보호를 위한 생태공원 조성시 탐방·교육시설 조성

<표 3-5> 남해서부 권역 연안통합관리 요약

추진전략	정책방향	대상지역 및 내용
보호지역 지정·관리	습지보호지역 지정	○ 진도군 군내면 벽파리 갯벌
	조수보호구 지정	○ 진도군 군내면 벽파리 갯벌 ○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 공통화석지 : 보성군 득량 선소지역
연안오염부하 적정관리	환경보전해역 지정	○ 환경보전해역(완도·도암만, 득량만, 가막만)의 해양환경보전대책 수립
	연안오염원 관리	○ 오염원 모니터링(울포관광지) ○ 담수호 및 주변해역 수질조사
환경용량을 고려한 연안개발계획 조정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재검토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폐지 - 여수시 우두Ⅱ·서촌지구, 순천시 상내지구, 강진군 마량Ⅱ지구, 진도군 회동지구, 완도군 가용·보옥리·완도Ⅱ·비자지구, 해남군 옥동Ⅰ·옥동Ⅱ·한자Ⅰ지구 ○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시 재검토 - 여수시 경도·국동·경호Ⅰ·신월Ⅱ·소호·웅천지구, 강진군 마량Ⅰ지구
	연안개발계획 조정	○ 사업계획 취소 - 고흥군 소록도 국제관광단지 조성 - 완도군 가족휴양촌 개발, 국민휴양촌 개발, 수련연수단지 조성, 케이블카·골프장 조성, 해양생태계 수중관람관 조성 - 강진군 해양유원지 조성 - 여수시 여천복합관광단지 조성 ○ 사업계획 수립시 관계기관과 협의 - 진도군 관매도 수변정화리조트 조성, 마린빌리지 조성, 귀성관광지 조성 - 강진군 마량해양레저스포츠 관광지 조성 - 장흥군 장재도 관광개발 - 고흥군 남열국제휴양관광지 조성, 고흥만 관광공원 조성, 내발나로도지구 개발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후 추진 - 완도군 화옹포 해양종합리조트 개발, 정도리 해양종합리조트 개발
친수연안공간 조성	친수연안공간 확보	○ 진도군 군내면 벽파리 갯벌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특별지역관리계획 수립	○ 순천만 습지보전 및 하도정비사업

여 백



[그림 3-5] 남해서부권역 연안통합관리

여 백

제6장 남해중부 권역

제1절 기본목표

- **해양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여 연안이용의 쾌적성 유지**
 - 갯벌 매립의 최소화, 육상기인 해양오염물질 유입의 저감 및 연안어장 환경의 종합적인 관리체제 구축 등으로 쾌적한 어장환경 유지
 - 철새서식지·해안식물군락 및 자연해안의 보전 등으로 도서생태계의 종다양성 및 심미적 가치를 증진함으로써 해양관광산업 촉진

- **다양한 연안이용수요에 따른 이해상충 조정으로 연안의 이용질서 확립**
 - 광양만 산업단지 및 항만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해체 위기에 있는 지역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육성·지원
 - 연안이용 및 개발에 대한 이해당사자간 이해상충 조정으로 합리적인 연안 이용질서 확립

- **물류중심기지와 수산·해양관광 개발의 조화로운 공존·발전**
 - 광양만의 임해산업지대 개발과 마산만의 임해지역 재개발을 환경친화적·해양친화적으로 추진하여 친수연안공간 및 해양문화시설 조성
 - 역사·문화적인 해양관광지, 레저중심의 해양관광지, 도심해변 친수연안공간, 해수욕장 및 청소년학습장 등을 지역별로 배치·육성
 -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어업기반시설 정비·확충, 해역환경개선, 도서 및 연안 어촌의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도모

제2절 연안통합관리 정책방향

1. 보호지역 지정을 통한 연안생태계 집중 관리

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1) 동향 및 전망

□ 연안개발압력의 증대로 갯벌생태계 및 철새서식환경 훼손

- 광양만의 하동군 갈사 및 남해군 강진만 일대의 갯벌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물새가 서식하고 람사협약 기준에 의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 평가
 - 갈사지역은 물새 4종 3,929개체수, 강진만은 물새 4종 16,361의 개체수가 관찰
- 하동군 갈사갯벌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인접해 있는 광양만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산업 및 생활 오폐수의 통로로서 자정작용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

□ 소규모 갯벌의 생태적 가치 훼손 우려

- 마산시 진동만 진전면일대, 마산항내의 봉암, 사천시 광포만 서포면 비토리, 하동군 진교면 양포리일대 및 여수시 금오도일대 등에 소규모 갯벌 존재
- 갯벌 관광객에 의한 어패류 무단채취 및 쓰레기 발생 등 갯벌자원 파괴 우려

(2) 세부정책방향

□ 생태적·심미적 가치가 높은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 남해군 강진만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갯벌의 이용행위를 제한하고 갯벌보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시행
 - 해양수산부에서 추진중인 갯벌생태계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호지역 및 주변 관리지역 확정
- 하동군 갈사갯벌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유보하되, 향후 제2차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서 갈사지구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여부에 따라 결정
- 갯벌보전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공유수면매립, 공작물 설치 등 갯벌훼손 활동을 금지

□ 소규모 갯벌의 보전 조치

- 소규모 갯벌의 보호를 위한 세부관리는 해양수산부가 추진중인 갯벌생태계조사 결과 및 갯벌보전계획 수립결과에 따라 시행
 - 갯벌보전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공유수면 매립, 공작물 설치 등 갯벌훼손 활동을 금지

나. 생태계 보전 및 관리

(1) 동향 및 전망

□ 자연해안에 대한 개발압력 가중

-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정으로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으나 최근 빈번한 국립공원 구역조정 신청 및 그린벨트의 완화 등으로 자연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
- 산업단지개발로 인한 해안의 매립과 더불어 대규모 관광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자연해안의 감소 예상

□ 보전가치가 높은 도서 생태계 보전 및 체계적 관리 필요

-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무인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하여 관리할 계획
- 지정된 특정도서외에도 보전가치가 높은 무인도서나 거주가 극히 적은 유인 도서에 대한 체계적인 자연환경 조사 및 관리대책 필요

□ 철새서식지 보전 및 관리 미흡

- 주요 철새서식지는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이 대부분이나, 국립공원 구역조정 및 그린벨트의 완화 등으로 철새서식지 감소 우려
- 지역개발에 따른 환경파괴 및 해안도로 건설 등에 의한 자연해안 훼손으로 철새서식지 상실

(2) 세부정책방향

□ 자연해안 등 보호

- 모래 및 자갈해안, 해수욕장 주변 적송군락 등 사구식생을 보호
 - 남해군 삼동면의 물건방조어부림, 미조면의 상록수림, 상주면·이동면에 걸친 적송군락
 - 거제시 연초면의 모감주 나무군락지, 윤돌섬·동부면 가배리의 상록수림, 남부면의 적송군락, 학동·지심도·내도 및 여수시 오동도의 동백림 군락
- 자연해안의 경관적 가치를 보호
 - 고성군 하이동 상죽암의 파식대 및 해식애, 공룡발자국
 - 거제시 일운면 망치리·가배리의 파식대
 - 거제시 남부면 해금강의 해식애 및 파식대
 - 마산시 구산동, 진해시 저도, 거제시 장승포의 암석해안
- 자연해안에서는 해안의 보호 및 복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만 허용하고 해안의 침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용행위는 제한

□ 자연경관이 우수한 무인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

-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후 보전가치가 있는 도서에 대해서는 특정도서로 지정·관리
 - 통영시 : 홍도(희귀동식물, 경관우수), 어유도(희귀동식물, 경관우수), 소지도(경관우수, 희귀동물), 좌사리도(경관우수, 희귀동물), 외부지도(자연경관, 식생우수), 소매물도(경관우수, 희귀동물)
 - 남해군 : 소치도(경관우수, 희귀동식물), 세존도(희귀동식물, 경관우수), 사도(경관우수, 식생우수), 죽암도(경관우수), 고도(경관우수), 목도(경관우수, 식생우수), 마안도(희귀식물, 식생우수)
 - 거제시 : 윤돌섬(경관우수, 상록수림), 내도(경관우수, 동백군락), 지심도(경관우수, 동백군락), 대병대도·소병대도(식생우수, 경관우수)

□ 주요 철새서식지를 「조수보호구」로 지정

- 정밀실태조사후 조수보호구로 지정·관리
 - 팽이갈매기 산란지 : 통영시 홍도·한산도·비진도
 - 팔색조 산란지 : 거제시 학동·지심도
 - 아비도래지 : 거제시 와현리를 비롯한 남부 전역
 - 고니도래지 : 여수시 무슬목
- 조수보호구 지정후 철새서식지의 상태를 감시하기 위해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의 참여를 통한 시민모니터링 프로그램과 철새 관찰·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통영시·거제시·여수시 등의 철새서식지 주변에 철새 탐조대 등을 설치하여 시민 모니터링과 연계하여 운영

2. 해역별 특성에 맞는 연안오염부하 적정관리

가. 환경관리해역 지정 및 관리

(1) 동향 및 전망

- 연안에 위치한 공단과 도시에서 유입되는 오폐수 등으로 연안해역의 오염심화
 - 광양만 및 마산만해역의 경우 Ⅲ등급 수질을 기록
 - 하동화력발전소 온배수 배출 등으로 주변 수질환경 악화
- 천해양식어업이 전국의 약 27%를 차지할 정도로 발달한 지역
 - 굴양식 적지로서 전국의 약 50% 이상을 생산하고 있어 천해양식어업 유지를 위해 해역환경보전사업 시행 필요

(2) 세부정책방향

-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광양만 및 마산만의 해양환경개선대책 수립·시행
 - 해역의 오염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항만준설·오니정화사업 및 비점오염원 유입저감대책 실시
 - 마산만 방파제에 해류 환류시설을 설치

- 수산업 이용 및 자원보전가치가 높은 고성만·자란만을 「환경보전해역」으로 지정
 -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실태조사 실시
 -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어장정화사업 실시 및 비점오염원 유입 저감대책 수립

- 해양오염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실시
 - 광양만·사천만 및 마산만 해역의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
 - 고성만 및 자란만 등 환경보전해역에 속하는 해역의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
 - 하동화력발전소 주변의 온배수 모니터링 실시

나. 연안오염원 관리

(1) 동향 및 전망

- 마산만 및 진해만은 생활하수에 의한 BOD부하량이 39,122.kg/일로 전체의 80.1%를 점유
- 광양만은 산업폐수에 의한 BOD부하량(4,317.8kg/일, 45.0%)이 생활하수에 의한 BOD부하량(11,959kg/일, 37.6%)보다 높게 나타나 거주인구에 비해 공업이 발달 했음을 시사
- 해안지역에 산재해 있는 음식점·위락시설 등의 관광편의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폐수 및 폐기물은 점차 증가
- 고성군·통영시·거제시 지역에서 공유수면에 폐각 투기 또는 불법매립으로 오폐수가 발생하여 연안오염 가중

(2) 세부정책방향

- 마산만·광양만 연안의 인구집중지에서 유입되는 오염원 처리를 위한 관리대책 마련
- 해안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해변의 음식점·위락시설 등 관광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폐수 및 쓰레기의 종합적 관리대책 수립·시행
 - 도서지역에서의 생활쓰레기의 해양배출 금지 및 처리시설 설치
- 굴양식 주변지역에 대하여는 퇴적물 준설작업의 주기적 시행 및 패각 불법매립 금지 조치
-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갯벌주변지역, 해변관광지 및 해수욕장에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비점오염원의 체계적 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

3. 환경용량을 고려한 연안개발계획 조정

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재검토

(1) 동향 및 전망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일반해면에 50개지구 44.216km², 지정항만에 44개지구 27.0327km² 총 94지구, 71.2487km²를 대상으로 수립
 - 갯벌의 규모가 적고, 해안에 급사면이 많아 매립조건이 열악하여 서해안지역보다 소규모 매립이 다수 존재
 - 과거에는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요구가 많은 편이었으나, 농업용지 등의 매립은 감소한 반면 산업단지 또는 관광개발과 관련된 매립은 계속 요구

(2) 세부정책방향

연안환경 보전을 위해 공유수면매립계획 변경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폐지
 - 전라남도 여수시 종화·굴전·강남금지구
 - 경상남도 통영시 신리·영운지구, 거제시 고현·갈곶·장목Ⅱ지구, 남해군 단항지구, 고성군 배둔Ⅱ지구, 마산시 봉암지구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유지하되, 제2차매립기본계획(2001~2011) 수립시 재검토
 - 전라남도 여수시 마상포지구
 - 경상남도 진해시 충무로 II·경화지구, 통영시 화포·용남지구, 거제시 하청·장목지구, 사천시 비토·신촌·다평 I·다평 II·자혜지구, 하동군 갈사지구

나. 연안개발계획 조정

(1) 동향 및 전망

□ 남해안 관광벨트 중심지로서 관광개발수요 증대

- 사천시는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관광개발, 남해군은 위락·휴양·생태 관광지 개발, 고성군은 해양레저중심의 관광개발과 역사문화 관광개발을 추진
- 마산시·창원시·진해시는 도시 재개발이나 기존 관광단지의 확장을 통한 관광개발 추진
- 거제시는 국립공원으로 인한 제한으로 자연경관을 활용한 단계별 관광개발과 함께 장목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해양관광지 개발 추진
- 통영시는 지정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을 통하여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을 추진

(2) 세부정책방향

□ 연안환경훼손 우려 및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개발계획 취소

- 통영시 한산면보존시설 설치

□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 마산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통영시 미륵도 관광개발, 사천시 비토해양예술랜드 조성·실안프론티어공원 조성, 고성군 공룡테마파크 조성, 하동군 금성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시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후 추진
- 사천시 선진리성주변공원조성은 남해안관광벨트개발계획 확정시 관련사항을 반영하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시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후 추진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후 추진

- 통영시 관광섬 개발·도산해양레포츠단지 개발, 사천시 늑도해양예술랜드 조성·송포만 해양스포츠단지 조성·신수도세계어촌풍물시장 조성, 고성군 해안골프장 조성, 하동군 금남해수풀장 조성·진교해양관광단지 조성

□ 연안개발수요의 계획적 관리

- 연안개발수요는 내륙지와의 기능 및 토지개발수요 분담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선별적으로 수용
 - 항만, 친수공간의 활용 등 해양성 입지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이를 억제
- 연안에서 보전·이용·개발행위시 국가전체적 차원에서 심사기능 강화
 - 「선 계획, 후 이용·개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사업시행전에 반드시 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4. 친수연안공간 조성 및 연안접근권 개선

(1) 동향 및 전망

□ 도시지역 해양문화 및 레저공간 부족

- 9개의 항만 및 21개의 공업지대는 시민의 해안접근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도시지역의 인접해안은 음식점 및 주변시설의 난립으로 계획적인 문화·친수공간이 형성되지 못한 실정

□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와 연계한 해양리조트 수요증가 예상

- 2003년 개통 예정인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건설은 서울~통영간 주행시간 단축으로 해양리조트 인구증가 전망
-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는 경부·호남·88·남해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국토중단 고속도로망으로 관광 배후권을 확대함으로써 관광자원 개발촉진 전망
 - 이를 겨냥하여 관광지 지정 확대와 함께 대단위 해양관광단지 개발 및 기존 관광지 확장추세

□ 도서·어촌지역의 역사문화 관광여건 양호

- 이순신 장군과 결부된 한려수도의 역사유적지, 공룡발자국이나 화석과 결부된 마산시·고성군 등의 문화유적지 다수 산재
- 전통적으로 수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전통 어구 및 어법이 남아 있으며, 자연 생태계의 보전으로 인하여 천혜의 자연경관과 함께 관광자원으로 부상
 - 도서지역에는 어부들의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어촌 및 낚시터가 많이 존재

□ 연안경관 훼손 및 연안접근권 제약

- 4계절 체류형의 대형 해양리조트 개발로 수려한 자연경관지에 대규모 매립이나 시설물이 설치되어 연안경관 훼손
- 해안에 위치한 대형 콘도·음식점 및 숙박시설이 유리한 해양조망에 접근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에 인접하고 있으나 이들은 육상에서의 해양조망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경관 훼손에 의한 관광가치 저하 야기

(2) 세부정책방향

□ 산업기반시설과 함께 해양문화·친수연안공간 확보

-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의 건설과 연계하여 남해군 및 통영시에 친수연안공간 배치
 - 대단위 규모의 해양관광단지 개발보다는 소규모의 휴양리조트단지로 유도
 - 관광지 확장이나 개발시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검토
- 항만 및 공업중심의 광양만 및 마산만 연안을 해양문화도시로서 발전시키기 위해 해양문화·친수시설이 어우러진 친수연안공간으로 지정
 - 산업단지 및 항만개발시 시민공원 등 친수연안공간 확보

□ 전통어업, 국립공원 및 도서생태계 보전과 연계한 생태관광 기능부여

- 어촌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관광어촌 활성화
 - 남해군 창선면·삼동면의 전통어업방식인 죽방염을 연계한 생태관광어장 육성
 - 해수욕장·소규모항 주변의 어촌 주택개량을 통한 민박시설 개선으로 어촌소득 증대
- 해안에 분포하는 유적지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연계한 역사·생태관광자원 개발

□ 도서·어촌지역의 해변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

- 해수욕장 및 해변관광지 접근로 등 관광편의시설 정비
 - 구조라·상주해수욕장 등 경관보호 및 개선을 위한 해안정비 실시
 - 연안접근권 향상을 위한 도로정비·주차장 등 공공편의시설 설치 및 해변정비

□ 연안경관 보호 및 접근권 개선

- 연안의 조망권 보호를 위해 자연해안의 보전조치 강구
 - 바닷가와 해안도로 사이의 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도시계획법상의 풍치지구, 고도지구 등 지정으로 자연경관, 해안 등에 대한 조망권 보호
- 연안경관의 훼손 또는 해류·해사의 흐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공유수면내 공작물(건축물 포함)의 설치 등 제한
 -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반영되고 해역이용협의 및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관리·운영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 해안선에 인접하여 관광시설 및 기타 시설물을 신축·개축할 경우 일반인의 해안접근로를 차단시키지 않기 위하여 기존통로 유지 또는 새로운 통로 확보

5. 특별지역관리계획 수립

(1) 마산만 수질환경 개선사업

□ 계획의 범위 및 수립주체

- 계획의 범위 :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
- 수립주체 : 해양수산부

□ 목적 및 필요성

- 마산만의 수질오염은 특별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오염저감 및 해역환경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종합적 방안 도출 필요
- 해양오염과 폐쇄성 내만으로 인한 자정능력의 상실로 마산만을 가로막고 있는 방파제에 통수시설을 설치하는 등 해역수질개선방안 도출 필요

□ 세부수립방향

- 마산만의 유입 부하량 및 유입원 조사로 마산만 유입 오염원 배출저감방안
- 수질오염현황 파악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계획
- 마산만을 가로막고 있는 방파제에 대한 통수시설 설치 등 수질개선방안
- 마산만 주변지 공간이용방안
- 마산만의 환경보전 및 개발이용을 둘러싼 갈등해소방안 등

2) 광양만 수질관리와 주변지 이용방안 이해상충 조정

□ 계획의 범위 및 수립주체

- 계획의 범위 :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하동군, 남해군
- 수립주체 : 해양수산부

□ 목적 및 필요성

- 광양만의 대규모 매립계획으로 인한 오염문제와 지속적인 매립압력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 등 환경악화와 관련하여 수질관리 및 주변공간이용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 도출 필요
- 광양만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간에 서로 다른 이용행위 경합
 -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개발을 추진
 - 광양시는 광양항을 비롯한 산업입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배후도시 조성
 - 하동군은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산업단지 조성
 - 남해군은 이러한 과도한 산업입지로 인해 광양만 해역이 오염되고 남해군 주변해역으로 오염이 확산되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우려

□ 세부수립방향

- 광양만의 유입 부하량 및 유입원 조사로 광양만 유입 오염원 배출저감방안
- 수질오염현황 파악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계획
- 광양만 수질개선방안
- 광양만 주변지 공간이용방안
- 항만개발·생태교육장·양식어장·산업단지 및 자연관광지 등 다양한 이용행위의 합리적 조정방안 등

<표 3-6> 남해중부 권역 연안통합관리 요약

추진전략	정책방향	대상지역 및 내용
보호지역 지정·관리	습지보호지역 지정	○ 강진만 갯벌
	특정도서 지정	○ 거제시·통영시·남해군 무인도서
	조수보호구 지정	○ 거제시(지심도·학동·와현리), 통영시(홍도·한산도·비진도), 여수시(무슬목)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 적송군락 : 남해군 삼동면·미조면·상주면·이동면, 거제시 연초면·동부면·남부면·윤들섬·학동·지심도·내도, 여수시 오동도 ○ 파식대 등 자연해안 : 고성군 하이동 상죽암, 거제시 일운면·남부면·장승포, 마산시 구산동, 진해시 저도
연안오염부하 적정관리	특별관리해역 지정	○ 특별관리해역(광양만 및 마산만)의 해양환경개선대책 수립
	환경보전해역 지정	○ 고성만 및 자란만
	연안오염원 관리	○ 광양만, 마산만, 고성만, 자란만, 하동화력발전소 모니터링
환경용량을 고려한 연안개발계획 조정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재검토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폐지 - 전라남도 여수시 종화·굴전·강남금지구 - 경상남도 통영시 신리·영운지구, 거제시 고현·갈곶·장목Ⅱ지구, 남해군 단항지구, 고성군 배둔Ⅱ지구, 마산시 봉암지구 ○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시 재검토 - 전라남도 여수시 마상포지구 - 경상남도 진해시 충무로Ⅱ·경화지구, 통영시 화포·용남지구, 거제시 하청·장목지구, 사천시 비토·신촌·다평Ⅰ·다평Ⅱ·자해지구, 하동군 갈사지구
	연안개발계획 조정	○ 사업계획 취소 - 통영시 한산면보존시설 설치 ○ 사업계획 수립시 관계기관과 협의 - 마산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 통영시 미륵도 관광개발 - 사천시 비토해양예술랜드 조성, 실안프론티어공원 조성, 선진리성주변공원 조성 - 고성군 공룡테마파크 조성 - 하동군 금성지구 관광지 조성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후 추진 - 통영시 관광섬개발, 도산해양레포츠단지 개발 - 사천시 늑도 해양예술랜드 조성, 송포만 해양스포츠단지 조성, 신수도 세계어촌풍물시장 조성 - 고성군 해안골프장 조성 - 하동군 금남해수풀장 조성, 진교해양관광단지 조성
친수연안공간 조성	친수연안공간 확보	○ 광양만 및 마산만 연안 ○ 남해군 창선면·삼동면 어촌지역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특별지역관리계획 수립	○ 마산만 수질환경 개선사업 ○ 광양만 수질관리 및 주변지 이용방안 이해상충 조정

여 백



[그림 3-6] 남해중부권역 연안통합관리

여 백

제7장 남해동부 권역

제1절 기본목표

- **환태평양권 국제해양교역의 거점지역으로 첨단해양문화가 공존하는 다목적 해양이용공간 조성**
 - 세계 5대 항만인 부산항과 대표적인 산업항인 울산항을 통한 해양진출의 거점과 내륙으로 연계된 물류기지의 기점으로서의 기능 수행
 - 임해지역의 중화학공업단지·첨단산업단지 및 테크노밸리 조성 등을 통한 국가 및 지역경제의 원동력 제공 및 기반강화

- **깨끗한 해역환경 조성·유지를 통한 지속가능한 해역의 이용**
 - 특별관리해역의 실효적 관리를 통한 해역환경의 개선
 - 다양한 연안이용계획을 환경적 측면에서의 검토와 개발의지의 조화를 통해 해역환경보전과 해역이용의 조화 도출

- **연안생태계 보전과 쾌적한 해양환경 유지로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자원 개발**
 - 낙동강 하구의 다양한 생태자원의 보전, 부산광역시 기장군 및 울산광역시 동부해역의 수산자원 및 해양생태계의 보호 등으로 연안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증진 및 수산자원 획득
 - 도심해변 및 항만지역 친수연안공간, 도시민의 해양체험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해수욕장 공간,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해양리조트 공간 등 친수 연안공간의 창출

제2절 연안통합관리 정책방향

1. 보호지역 지정을 통한 연안생태계 집중관리

(1) 동향 및 전망

- 낙동강하구 생태계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철새서식지이며, 습지보전에 관한 국제협약(람사협약)이 정한 국제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습지지역
- 고수부지 개발과 하구둑 건설, 쓰레기 매립장 조성, 공단 및 택지조성 등으로 철새서식처가 위협받고 있음에 따라 합리적인 보전대책의 수립·시행이 시급
 - 하구둑 건설에 따른 어류 및 생물군의 이동차단, 지형변화, 기상변화 및 생물종 격감 등의 환경문제 대두
 - 낙동강을 통해 유입되는 각종 폐기물 및 오폐수에 의한 하구습지 및 생태계 환경의 피해 발생

(2) 세부정책방향

□ 「습지개선지역」을 지정하여 습지복원사업 시행

- 낙동강하구 인근지역 개발로 심각하게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기 위해 습지개선 지역을 지정하여 습지복원사업 시행
 - 철새 등지형성의 재료원 확보를 위한 수생 및 육상 식물의 식재
 - 철새서식지로서의 부족한 생태학적 인자의 보충
 - 개발에 의해 훼손이 심각하거나 오염원 유입이 집중되는 지역에 인공습지 조성
- 낙동강하구에 서식하는 철새 및 습지환경 감시(낙동강하구 퇴적층 및 유속변화 모니터링 포함)를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의 참여를 통한 시민모니터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도서 생태계 보전

- 비교적 안정된 환경과 독특한 생물상 및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도서 보전
 - 두도·생도·방패섬·솔섬·오리도·자도·금문도·진우도·수리섬·송곳섬·굴섬·등대섬
- 도서의 생태적·경관적 가치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후 특정도서 및 생태계보전 지역 지정 등 세부관리방안 수립

2. 해역별 특성에 맞는 연안오염부하 적정관리

가. 환경관리해역 지정 및 관리

(1) 동향 및 전망

- 1990년 이후 해역수질은 COD기준 Ⅱ~Ⅲ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나 총질소와 총인을 기준시 Ⅲ등급을 초과
 -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부산연안은 해양오염방지법에 의거 수질측정망을 구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전지역이 환경기준을 초과

(2) 세부정책방향

□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부산연안 및 울산연안에서 해양환경개선대책 수립·시행

- 해역의 오염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해역정화사업 실시,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 유입 저감대책 실시
- 특별관리해역의 해양오염추세를 감시하기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 부산해역의 경우 낙동강에 의한 오염부하 저감은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수계 영향권별 환경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시행

나. 연안오염원 관리

(1) 동향 및 전망

- 부산연안의 오염원인은 생활하수에 의한 BOD부하량이 전체의 91.5%를 차지
 - 부산광역시의 오염원중 생활하수 발생량이 81.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울산광역시의 경우 우리나라 대표적인 중화학공업도시로 육성되어 옴에 따라 연안환경 악화초래
 - 울산광역시의 오염원중 산업폐수의 발생량이 전체 발생량의 57.8% 차지
 - 전국 21개 산업폐기물 최종처리업체중 10개 업체가 울산공단내에 집중되어 있어 이들 폐기물매립장에 의한 수질·대기 및 토양의 오염심화

(2) 세부정책방향

□ 사업장으로부터의 오염유입 저감대책 수립·시행

- 녹산·울산미포·온산 국가공단 등 임해공업단지로부터의 각종 산업폐수의 해양 직유입을 금지하고 폐수·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배출수 수질관리 강화
- 울산공단내 다수의 폐기물매립장으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에 의한 수질·대기 및 토양 등의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신규 매립장허가 억제 및 오염물 관리강화

□ 도시인구에 의한 생활하수의 해양유입 저감대책 수립·시행

- 하수도 보급 및 분리관거의 확대, 하수처리시설의 정비·확충, 배수구역별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을 통한 처리방안 검토 및 해역으로 유입되는 육상 오염원의 관리강화
- 하수관거의 설치가 곤란하고 해역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소규모 간이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정화시설 보급
 - 부산광역시 기장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동부해안지역에 마을단위별 간이 처리시설 보급 및 주거시설 개량을 통한 정화조 보급
- 부산광역시 기장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및 동부연안에 산재한 횃집·숙박시설 등 각종 위락시설로부터 오폐수 및 쓰레기의 해양유입 금지

□ 해역환경 변화감시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 낙동강하구 습지생태계의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가덕신항만 및 울산신항만 건설에 따른 해양환경 및 생태계 영향을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 실시
- 배후 대도시의 육상오염원이 유입되는 부산항 및 울산항의 수질 및 퇴적물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
- 고리원자력발전소 및 화력발전소 인근해역의 온배수에 의한 해양생태계, 수산 자원 및 해양환경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실시

3. 환경용량을 고려한 연안개발계획 조정

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재검토

(1) 동향 및 전망

- 부산광역시 40개지구 40.39km², 울산광역시 10개지구 4.71km²를 대상으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 1종어항인 기장읍 대변항, 2종어항인 일광항을 매립하여 각각 수산물유통단지 및 지방항만으로의 개발을 추진
- 도시민 친수연안공간 조성 및 공장용지 조성을 위한 다수의 공유수면매립이 계획중이며, 잦은 해안선 매립으로 인해 자연해안이 감소

(2) 세부정책방향

□ 연안환경 보전을 위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폐지
 - 부산광역시 강서·봉래·장림다대지구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유지하되,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2001~2011) 수립시 재검토
 - 부산광역시 연화·다대 V-I·가덕·중동·해상신도시·명지·다대II·삼성지구

나. 연안개발계획 조정

(1) 동향 및 전망

- 부산관광종합개발계획에서 관광개발권역을 동부산권·중부산해양권·중부산내륙권·서부산권 등 4개 권역으로 구분
 - 동부산권 : 해운대 및 송정해수욕장, 해운대 온천센터 개발 및 기장군 해양관광리조트 개발
 - 중부산해양권 : 동삼동 해양종합공원 개발 및 이기대 개발
 - 서부산권 : 가덕도 해양휴양지관광 개발
- 울산광역시에서는 장생포 마린타운 조성 및 일산유원지사업이 계획·진행중

(2) 세부정책방향

□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 부산광역시 학리지방항만개발은 항만법에 의한 관련절차 이행 및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후 추진
- 부산광역시 대변연화지구 관광개발, 해운대 미포친수공간조성, 다대포 종합관광위락단지조성, 송도거북섬 개발, 영도하리항지구 개발, 울산광역시 일산유원지개발(3단계이후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시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후 추진
- 부산광역시 이기대 도시공원 조성은 군부대이전과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후 추진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후 추진

- 부산광역시 해운대 씨사이드라인 개발, 해운대 온천센타 개발
- 울산광역시 장생포지역 개발

□ 연안개발수요의 계획적 관리

- 연안개발수요는 내륙지와의 기능 및 토지개발수요 분담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선별적으로 수용
 - 항만, 친수공간의 활용 등 해양성 입지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이를 억제
- 연안에서 보전·이용·개발행위시 국가전체적 차원에서 심사기능 강화
 - 「선 계획, 후 이용·개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사업시행전에 반드시 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4. 친수연안공간 조성 및 연안접근권 개선

(1) 동향 및 전망

□ 친수연안공간 부족

-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해안선이 항만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고 신항만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시민의 연안접근권 제한
- 공단 및 도시개발에 의한 친수연안공간은 인공시설이 대부분이며, 자연해안의 경우 도시와 인접하고 있어 개발의 압력이 강하게 작용

□ 친수연안공간 조성여건 구비

- 사회기반시설이 매우 양호하고 도시인구에 의한 레저공간의 수요가 높으며 해안관광자원 및 레저공간이 풍부하여 해양문화·관광 및 레저공간의 조성여건 양호
- 낙동강 하구의 철새도래지는 동양최대의 철새도래지
 - 도심과 인접한 자연학습장으로서의 기능과 생태계보전을 위한 환경인식의 학습장으로서의 역할수행 가능
 - 도시 및 산업권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어촌환경은 도시민의 친수연안공간 또는 어촌생활체험장으로 개발함으로써 관광자원화 가능

(2) 세부정책방향

□ 도시해안형 친수연안공간의 다양화 및 활성화

- 시민의 접근권이 제한된 부산항 및 울산항에 도시해안형 친수연안공간 확보
 - 항만구역정비 및 재개발시 시민친수공간 조성 병행
 - 다대포해수욕장 일대의 해안정비 및 이기대~신선대 해안정비를 통해 친수연안공간 확보
- 부산광역시 해운대 일대에 해양레포츠 공간 및 교육센터 유치
 - 해수욕장·자연경관·공공 및 위락시설 등의 양호한 편의시설을 바탕으로 해양레포츠를 위한 공간조성 및 주변확대를 위한 교육센터 등을 유치
 - 수영장 하구지역 경관정비 및 친수연안공간 확보
- 울산광역시 동부해안인 정자일대를 해안형 친수연안공간으로 확보
 - 해안접근로 및 빈지후면의 정비, 자연경관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친수연안공간 조성
-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를 대상으로 생태관광자원 개발
 - 조류탐조시설, 습지생태공원 및 자연생태교육장 등 마련
- 부산광역시 기장군(해운대 일부지역 포함)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어촌마을을 관광어촌화

□ 연안경관 보호 및 접근권 개선

- 연안의 조망권 보호를 위해 자연해안의 보전조치 강구
 - 바닷가와 해안도로 사이의 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도시계획법상의 풍치지구, 고도지구 등 지정으로 자연경관, 해안 등에 대한 조망권 보호
- 연안경관의 훼손 또는 해류·해사의 흐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공유수면내 공작물(건축물 포함)의 설치 등 제한
 -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반영되고 해역이용협의 및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관리·운영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 해안선에 인접하여 관광시설 및 기타 시설물을 신축·개축할 경우 일반인의 해안접근로를 차단시키지 않기 위하여 기존통로 유지 또는 새로운 통로 확보

5. 특별지역관리계획 수립

(1) 남구일대 해안 생태계보전 및 친수연안공간 조성방안

□ 계획의 범위 및 수립주체

- 계획의 범위 : 부산시 남구 이기대~신선대 해안지역
- 수립주체 : 부산광역시 남구

□ 목적 및 필요성

- 해안경관 보호 및 환경친화적인 자연자원의 이용
 - 도심지역으로 둘러싸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상태를 비교적 양호하게 유지하고 있으나, 관광개발을 비롯한 각종 개발계획에 의한 연안훼손 우려
 - 자연자원의 보전을 전제로한 도시민의 친수연안공간으로서의 연안이용을 위해 종합적인 검토 필요

□ 세부수립방향

- 자연경관 및 생태계 보전방안
 - 연안의 자연상태 보전을 기본원칙으로 육역 및 해역의 자연환경보전방안
- 대규모 시설을 지양하고 소규모의 자연친화적 친수연안공간 조성방안
 - 인공시설물의 자연소재 활용 및 주위경관 훼손방지 등

<표 3-7> 남해동부 권역 연안통합관리 요약

추진전략	정책방향	대상지역 및 내용
보호지역 지정·관리	습지개선지역 지정	○ 인공습지 조성 등 습지복원사업 시행(낙동강 하구) ○ 철새 및 습지환경감시 모니터링(낙동강 하구)
	도시생태계 보전	○ 부산광역시 두도·생도·방패섬·술섬·오리도·자도·금문도·진우도·수리섬·송곳섬·굴섬·등대섬
연안오염부하 적정관리	특별관리해역 지정	○ 특별관리해역(부산연안 및 울산연안)의 해양환경 개선대책 수립
	연안오염원 관리	○ 하수처리시설 정비·확충(부산 및 울산 도심지역) ○ 해양환경 모니터링(낙동강 하구, 가덕신항만, 울산 신항만, 고리원전 및 화력발전소 주변) ○ 폐수·하수종말처리장 운영(녹산·온산미포·온산 국가공단지역)
환경용량을 고려한 연안개발계획 조정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재검토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폐지 - 부산광역시 강서·봉래·장림다대지구 ○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시 재검토 - 부산광역시 연화·다대Ⅴ-I·가덕·중동·해상 신도시·명지·다대Ⅱ·삼성지구
	연안개발계획 조정	○ 사업계획 수립시 관계기관과 협의 - 부산광역시 학리지방항만 개발, 대변연화지구 관광 개발, 해운대미포친수공간 조성, 다대포 종합관광 위락단지 조성, 영도하리항 개발, 송도거북섬 개발, 이기대 도시공원 조성 - 울산광역시 일산유원지 개발(3단계이후 사업)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후 추진 - 부산광역시 해운대씨사이드라인 개발, 해운대온천센터 개발 - 울산광역시 장생포지역 개발
친수연안공간 조성	친수연안공간 확보	○ 부산항 및 울산항 ○ 부산광역시 해운대일대,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 ○ 울산광역시 정자일대 ○ 부산광역시 기장군(해운대 일부지역 포함)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촌지역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특별지역관리계획 수립	○ 부산광역시 남구일대 해안 생태계보전 및 친수연안 공간 조성방안

여 백



[그림 3-7] 남해동부권역 연안통합관리

여 백

제8장 동해남부 권역

제1절 기본목표

□ 자연경관 보전을 통한 해양관광 육성

- 울릉도 도서생태계와 수려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합리적인 관리로 환경친화적인 관광자원의 육성·지원
-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에 의한 연안개발사업 및 관광개발사업 추진

□ 어촌지역 정주의식 고취 및 어업환경 개선

- 육상기인 해양오염물질 유입의 저감, 수산업에 의한 자가오염 저감 및 유류 유출에 대비한 방제시스템 구축 등으로 풍요로운 어장환경 유지
- 해안선을 따라 산재해 있는 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환경의 질 향상을 통한 정주의식 고취

□ 환동해권 다목적 해양이용공간 조성

- 동해의 청정해안과 신라문화, 울릉도 및 독도의 천연자원, 온천과 산악이 조화를 이룬 해양·문화관광지 개발을 환경친화적·해양친화적으로 추진
- 연안이용 집중에 따른 오염부하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해역환경 개선 및 지속 가능한 개발 달성

제2절 연안통합관리 정책방향

1. 보호지역 지정을 통한 연안생태계 집중관리

가. 생태계 보전 및 관리

(1) 동향 및 전망

- 포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안지역은 어촌 및 어항, 관광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자연해안이 비교적 잘 보존되고 있는 상태
- 울릉도는 천혜의 자연경관 및 도서생태계의 보고로서 보전가치가 매우 높으나, 다양한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어 연안자원훼손 우려
 - 울릉도 및 부속도서는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의 동·식물이 많이 서식하고 있으며 울릉도에만 자생하는 식물이 47종으로 조사
- 연안을 대상으로 각종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해역의 수질이 악화되어 해양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기수역의 개발 및 자연해안선의 변형에 따라 육지생태계 및 자연경관 파괴

(2) 세부정책방향

□ 도서생태계 보전 및 관리

- 동해안 유일의 도서관광권인 울릉도의 도서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실태 조사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
 - 자연경관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세부계획은 연안관리지역계획을 통해 수립

□ 기수역 생태계 보전 및 관리

- 울진군 왕피천, 영덕군 오십천, 경주시 대종천의 양호한 수질과 연어를 비롯한 회귀성 어류의 회유지 보전을 위한 생태계보전지역 지정·관리
 - 자연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을 금지하고 자연친화적 개발 유도
 - 하류지역에서의 오염부하(생활하수, 축산폐수, 농업폐수 등) 저감 또는 차단

2. 해역별 특성에 맞는 연안오염부하 적정관리

가. 환경관리해역 지정 및 관리

(1) 동향 및 전망

- 포항시 영일만은 대도시 및 산업단지가 배후지에 위치하고 있어 생활하수 및 산업폐수의 유입에 따른 해역오염 심각
 - 영일만의 해역수질은 Ⅲ등급수준으로 오염이 심화되어 해역환경개선사업 시행 시급
 - 오염원 유입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여 오염우심해역으로 관리 필요

(2) 세부정책방향

오염우심해역인 포항시 영일만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

-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해역정화사업 실시
 - 포항시·경주시 등에서 발생하는 하·폐수의 해양으로 직접 배출 억제 및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을 통한 해역 오염부하 저감
- 특별관리해역의 해양오염을 감시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상류지역(경주)의 오염유입 부하 저감, 정기적 모니터링에 의한 수질관리 및 오염원 감시 강화
- 포항국가산업단지로부터의 폐수 및 폐기물 유출 관리강화

나. 연안오염원 관리

(1) 동향 및 전망

- 연안을 따라 산재하고 있는 어항 및 주거지역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원이 처리되지 못한 채 인근 해역으로 유입
- 대부분의 해안이 개방형이고 조류의 흐름이 빨라 오염의 부하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지역은 수질 악화현상 발생

(2) 세부정책방향

□ 육지오염원의 유입 저감대책 수립

- 해변의 음식점 및 관광시설로부터 연안해역으로의 오폐수 배출 및 폐기물 투기에 대한 관리강화
- 하수관거의 설치가 곤란하고 해역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소규모 간이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정화시설 보급
 - 마을단위별 간이처리시설 보급, 주거시설 개량을 통한 정화조 보급 등 오폐수 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 및 정비
-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산재하고 있는 횡집·숙박시설 등 각종 위락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폐수 및 쓰레기의 해양오염원 관리강화

□ 해역환경변화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 영일만 일대의 산업단지·도시 및 연안개발사업에 의한 오염원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실시
- 월성원자력발전소·울진원자력발전소 등 발전소 인근해역의 온배수에 의한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실시

□ 수산활동에 의한 오염원 저감대책 수립

- 연안에 산재하고 있는 어촌 및 어항에서 발생하는 각종 어업폐기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 수립·시행
- 영덕군 및 울진군 연안의 수산물 유통·가공공장 및 종묘배양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및 폐기물의 해양유입을 억제하고 효과적인 처리대책 수립
- 어장환경의 정기적인 정화를 통한 청정해역 보전 및 수산자원의 보전

3. 환경용량을 고려한 연안개발계획 조정

(1) 동향 및 전망

- 개발의 잠재력이 풍부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중복투자 및 연안환경훼손 우려
 - 동해안 종합개발 및 환경보전계획에서 환동해씨월드·해양리조트·스포츠센터 및 레저타운 등의 기능이 중복
 - 각각의 연안관광지 개발에 따른 해안선 및 연안환경의 변화예측 미흡
- 모든 관광자원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자연상태의 해안선 및 생태계 파괴가 예상되므로, 개별 사업의 시행에 앞서 광역적 관점에서 타당성 검토 필요

(2) 세부정책방향

연안환경 보전을 위해 공유수면매립계획 폐지

- 포항시 청림지구·동항지구

자연생태계 훼손우려가 있거나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개발계획 취소

- 포항시 송도유원지 개발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 울진군 후정관광지 개발, 망양관광지 개발, 월송 해양리조트 개발은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시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후 추진

연안개발수요의 계획적 관리

- 연안개발수요는 내륙지와의 기능 및 토지개발수요 분담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선별적으로 수용
 - 항만, 친수공간의 활용 등 해양성 입지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이를 억제
- 연안에서 보전·이용·개발행위시 국가전체적 차원에서 심사기능 강화
 - 「선 계획, 후 이용·개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사업시행전에 반드시 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4. 친수연안공간 조성 및 연안접근권 개선

(1) 동향 및 전망

□ 해양문화 및 친수연안공간 부족

- 해양관광자원이 풍부하여 다수의 해수욕장 및 역사적 관광지가 산재하고 있지만, 관광자원의 정비 및 상품화가 부족하고 광역적 접근 불편
- 미개발지역이 비교적 많아 개발의 잠재력이 매우 높은 편이며 지역의 소득 향상과 연안관광자원의 가치향상을 위한 다양한 개발계획을 수립중
- 산재한 관광자원의 보전과 이용을 위한 장기적인 정비·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해양문화공간으로 조성 필요

□ 우수한 연안경관 보유

- 해안을 따라 다수의 모래사장이 자연상태로 잘 보존되어 있는 등 관광자원으로의 개발 잠재력 보유
- 울릉도의 경관은 자연해안선이 신비로운 자연미를 갖추고 있는 뛰어난 도서관광자원
- 다른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미개발된 지역으로 관광자원의 개발압력이 크기 때문에 향후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 우려

(2) 세부정책방향

□ 해양문화 및 레저공간으로 지정

- 환호해맞이공원을 해양과 녹지공간을 활용한 테마파크형 도시공원 유치
- 장기곶등대 일대를 교육 및 전시·관람형 공간으로 배치
- 감포일대를 경주 역사문화권과 연계하여 해양·문화관광지대 조성거점지역으로 육성
 - 역사문화탐방·풍습·경관 및 해양레크리에이션 활동 중심지로 육성
 - 보문관광단지과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자연지형의 훼손을 최소화

□ 생태관광 및 어촌관광의 다양화 및 활성화

- 울릉도 지역의 도서생태계 및 자연경관 보전과 연계된 환경친화적인 도서관광 상품의 개발을 통한 지역주민의 정주의식 고취 및 소득증대방안 등 마련
 - 일주도로 건설에 따르는 자연경관 및 생태계 훼손의 최소화
 - 울릉도 전역에서 자생하는 희귀식물 및 식용식물의 관광상품화
 - 독도의 접근권을 확보하고 역사 및 교육의 장으로 개발
- 울진군 왕피천을 환경친화적인 생태관광공간으로 지정
 - 연어 회귀의 남방한계선으로서의 생태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양질의 사구 및 배후 자연림을 이용
- 해안경관이 양호한 소규모 어항을 관광자원화
 - 고기잡이 체험, 해산물 채취 및 유어선 낚시도구 대여 등의 생산수단 대여형 및 수산물 채취형 어촌관광자원을 적극 발굴

□ 연안경관 보호 및 접근권 개선

- 울릉도 지역에 대하여 도서의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연안관리지역 계획을 수립·시행
- 연안의 조망권 보호를 위해 자연해안의 보전조치 강구
 - 바닷가와 해안도로 사이의 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도시계획법상의 풍치지구, 고도지구 등 지정으로 자연경관, 해안 등에 대한 조망권 보호
- 연안경관의 훼손 또는 해류·해사의 흐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공유수면내 공작물(건축물 포함)의 설치 등 제한
 -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반영되고 해역이용협의 및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관리·운영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 해안선에 인접하여 관광시설 및 기타 시설물을 신축·개축할 경우 일반인의 해안접근로를 차단시키지 않기 위하여 기존통로 유지 또는 새로운 통로 확보

5. 특별지역관리계획 수립

(1) 울릉도 자연경관 및 생태계보전과 개발수요와의 상충조정

□ 계획의 범위 및 수립주체

- 계획의 범위 : 울릉도 연안
- 수립주체 : 울릉군

□ 목적 및 필요성

- 천연자연경관 및 생태계의 보전과 주민소득 증대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개발간의 이해상충을 세부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조화로운 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 추진
-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서개발에 따라 자연상태의 연안이 훼손되고 있으며, 주민생활의 불편 및 소득증대를 위한 개발압력 증대
- 독특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고 대부분의 생태계가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으며, 신비로운 자연경관을 비롯한 자연자원이 풍부하여 보전의 필요성 제기
- 보전과 개발간의 이해상충을 조정하고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지역 구상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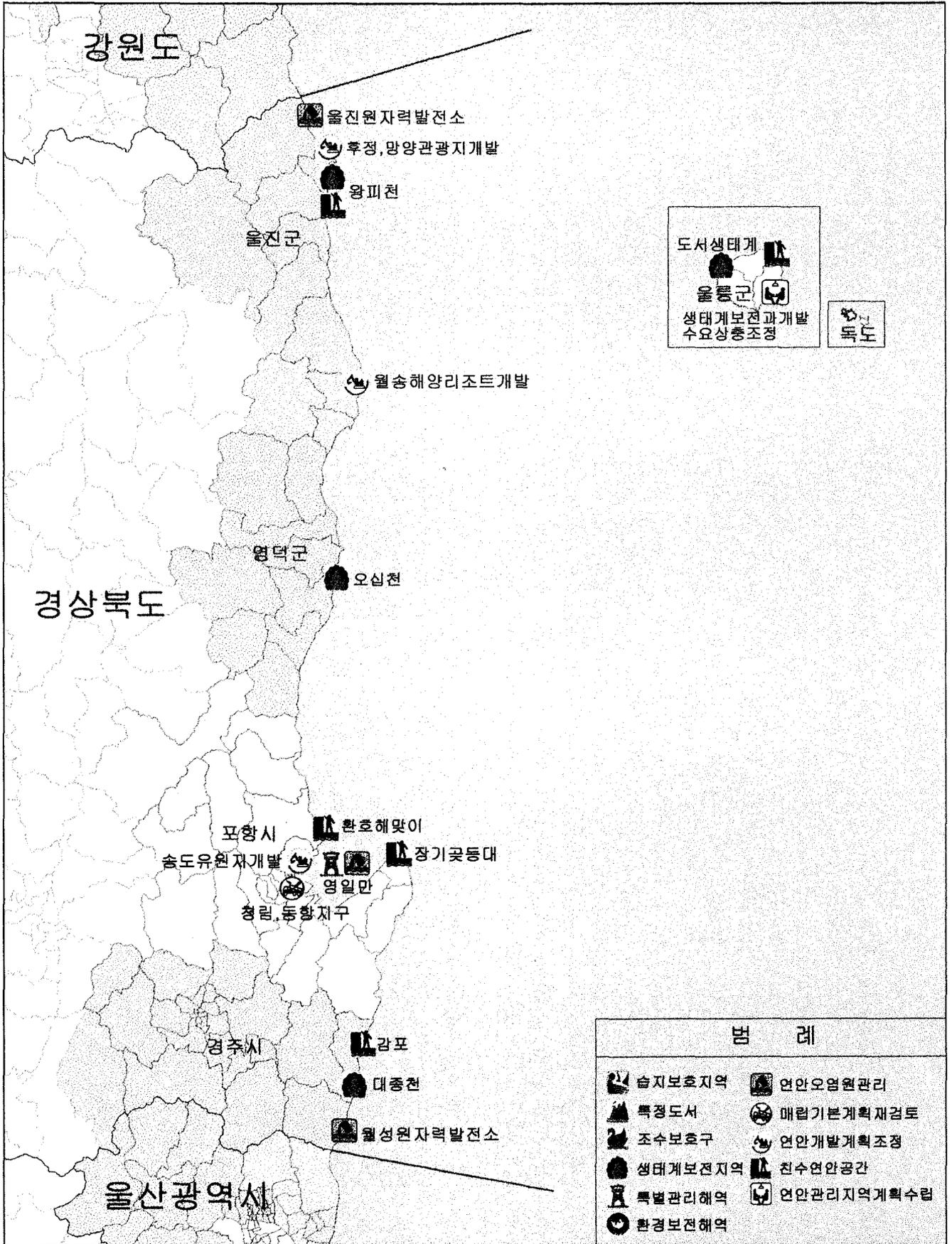
□ 세부수립방향

- 자연환경자원의 보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연안자원이용 및 개발기본방향 설정방안
- 자연생태계·해안선 보전 및 모니터링 계획
 - 시설물의 재질·색채 및 디자인 등을 주위 자연경관과 부합하도록 선정하고 지역별 선정기준 선정

<표 3-8> 동해남부 권역 연안통합관리 요약

추진전략	정책방향	대상지역 및 내용
보호지역 지정·관리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생태계(울릉도) ○ 회귀성어류 회유지 및 서식지(울진군 왕피천, 영덕군 오십천, 경주시 대중천)
연안오염부하 적정관리	특별관리해역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시 영일만
	연안오염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간이처리시설 설치 및 정화시설 보급(하수관거 설치 곤란지역) ○ 해양환경변화 모니터링(영일만, 월성원전 및 울진 원전주변)
환경용량을 고려한 연안개발계획 조정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재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폐지 - 포항시 청림·동항지구
	연안개발계획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취소 - 포항시 송도유원지 개발 ○ 사업계획 수립시 관계기관과 협의 - 울진군 후정관광지 개발, 망양관광지 개발, 월송 해양리조트 개발
친수연안공간 조성	친수연안공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시 환호해맞이공원, 장기꽃등대일대 ○ 경주시 감포일대 ○ 울진군 왕피천 ○ 울릉군 울릉도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특별지역관리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릉도 자연경관 및 생태계 보전과 개발수요와의 상충 조정

여 백



[그림 3-8] 동해남부권역 연안통합관리

여 백

제9장 동해중부 권역

제1절 기본목표

□ 환동해권 국제교류 및 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

- 부산~포항~동해~속초~원산~나진을 연결하는 통일시대의 남북교류의 거점인 동시에 일본의 서해안 및 러시아를 포괄하는 환동해권 쿠르즈관광 거점으로 육성·발전
 - 항만시설 및 물류기지 확충, 국제수준의 관광항만 및 배후 기반시설 조성
- 다양성과 지역적 특성을 갖춘 해양관광지 조성
 - 관광의 전제조건인 경관 및 양호한 수질을 보전하고, 해변친수공간·해수욕장·해양스포츠·어업체험장·생태관광 및 해양학습장 등을 지역별로 특화하여 합리적으로 배치
 - 지역 여건 및 문화적 차이를 감안하여 다양한 형태의 해양리조트공간 조성

□ 수산업 육성 및 지역 정주여건 조성

- 육상기인 해양오염물질 유입저감 및 어장환경개선, 자원증식, 어항시설 및 물양장 확충 등 어업생산기반시설 조성
- 지역주민 정주의식 고양을 위해 어촌중심의 관광·친수연안공간 조성
- 동해항과 북평산업단지는 환동해 물류거점 및 북방교역 생산기지로 개발
 - 강원도 연안의 해양관광 및 수산기능과 조화를 이루는 산업단지 조성

□ 연안환경 및 자연경관 보전

- 자연해안 및 석호의 수질오염 예방 및 생태계 보전
- 무분별한 관광단지 개발에 의한 백사장·해안단애 등 자연경관 훼손방지로 연안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 도모

제2절 연안통합관리 정책방향

1. 보호지역 지정을 통한 연안생태계 집중관리

가. 생태계 보전 및 관리

(1) 동향 및 전망

□ 석호에 대한 관광개발 추진으로 환경문제 대두

- 화진포호·송지호에는 천연기념물인 고니와 청둥오리 등 철새가 서식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석호가 발달한 지역이나, 관광개발 계획이 수립·추진중으로 철새서식환경 손상 우려
- 호수환경 및 생태계가 관광개발로 파괴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환경보전대책 마련 필요

(2) 세부정책방향

□ 생태계 보전조치 강구

- 동해 연안의 최대 자연호수로서 강원도지정 지방기념물인 화진포호와 송지호를 관광지로 개발시 호수보호조치 강구
- 관광개발계획과 생태계보전조치간의 양립성 또는 조정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환경파괴 최소화

□ 철새서식지 보호 조치

- 철새서식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석호주변 관광개발시 철새서식지 보호대책을 마련
- 철새관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

2. 해역별 특성에 맞는 연안오염부하 적정관리

(1) 동향 및 전망

□ 연안수질 악화

- 강릉측정소의 1991~1996년간 수온·수소이온 농도·용존산소·생물학적산소 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 및 부유물질에 대한 측정결과, 용존산소가 점차 감소되고 있으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도 감소
 - 동해시 연안해역은 화학적산소요구량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수질은 II등급을 유지
 - 주문진해역의 수질환경은 III등급에서 1994년이후 점차 낮아져 II등급으로 개선
 - 속초시 연안의 수질도 거의 II등급 내지 III등급을 유지

□ 육상오염원 유입으로 인한 오염심각

- 강릉시 주문진항, 속초시 대포항 및 동명항, 동해시 묵호항 및 어달동 등 어항 주변의 식당·간이 수산물 가공판매장 등에서 배출되는 오수 및 쓰레기의 해수유입 심각
- 화진포호·송지호·영랑호 및 경포호 등 석호 주변의 농경지로부터 유입되는 농업용수가 호수의 수질유지에 위협
- 해수순환율이 4% 수준에 불과한 폐쇄성 해역인 청초호는 자정능력이 매우 미약하여 수질오염이 심각
 - 공유수면 매립에 의한 해수순환 저하와 생활하수, 축산폐수 및 수산가공 폐기물의 해수유입은 해양오염을 더욱 심화

(2) 세부정책방향

□ 환경기초시설 확충

- 동해시·강릉시·속초시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 환경기초시설과는 별도로 청초호, 주문진항 및 묵호항 등 주요 어항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확충

□ 오폐수 배출기준 강화 및 모니터링 실시

- 음식점 및 해변관광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오폐수의 해양유입 차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례 제정
- 관광개발이 추진중인 경포호·청초호·영랑호·화진포호 및 송지호의 수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오염원 조사 및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 지정호소 및 호소수질보전구역 지정 추진

3. 환경용량을 고려한 연안개발계획 조정

(1) 동향 및 전망

□ 기초지방자치단체간에 경쟁적인 관광개발로 난개발 예상

- 동해시 7개사업, 삼척시 5개사업, 양양군 3개사업, 강릉시 7개사업, 속초시 4개사업, 고성군 4개사업 등 30개의 연안개발계획을 구상
- 계획중인 관광개발 등은 토지확보의 용이 및 개발비의 절감 등을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을 선호

(2) 세부정책방향

□ 연안환경 보전을 위해 공유수면매립계획 변경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폐지
 - 속초시 중앙지구, 동해시 묵호지구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유지하되,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2001~2011) 수립시 재검토
 - 속초시 청호 I 지구

□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 고성군 화진포호 관광지 개발·송지호 관광지 개발, 동해시 망상리조트 개발, 속초시 속초해수욕장해양첨단관광단지 조성·외옹치 국민관광지 조성은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시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후 추진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후 추진

- 강릉시 심곡리 해양리조트단지 조성 · 사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 안목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동해시 천곡유원지 조성, 대진시범어촌 관광단지 조성, 양양군 동호리 해양테마관광개발

□ 연안개발수요의 계획적 관리

- 연안개발수요는 내륙지와의 기능 및 토지개발수요 분담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 · 선별적으로 수용
 - 항만, 친수공간의 활용 등 해양성 입지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이를 억제
- 연안에서 보전 · 이용 · 개발행위시 국가전체적 차원에서 심사기능 강화
 - 「선 계획, 후 이용 · 개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사업시행전에 반드시 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4. 친수연안공간 조성 및 연안접근권 개선

(1) 동향 및 전망

□ 천혜의 관광자원 보유

- 수도권시민이 선호하는 관광지역으로서 지속적인 관광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
- 공업 및 유통업 등의 발달여건이 지리적으로 불리하므로 수산업과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산업의 발전필요
 - 산악 · 해양 등 자연환경을 연계한 4계절 체류형 관광개발 및 환동해권 관광거점으로서의 발전 기대

□ 관광 · 숙박시설에 의한 시민의 연안접근 제한

- 해안에 밀집한 식당 · 숙박업소 및 판매시설 등은 경관뿐만 아니라 해안접근에 장애가 되며, 대규모 해양관광시설의 완공시 해안이용이 크게 제약
- 수려한 해안경관의 대부분은 군사시설로서 시민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는 바, 해양관광객의 증가시 이들 보호지역에 대한 개방 필요

(2) 세부정책방향

□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지역을 생태관광공간으로 용도부여

- 화진포호·송지호 등 경관이 우수하고 철새서식지로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자연생태 및 철새보호와 병행하여 생태관광지로 지정
- 시설형 관광단지 조성은 자연생태 및 경관을 고려하여 거리를 두고 조성하며, 인근의 문화자원과 연계한 역사관광·자연학습 및 철새관찰프로그램을 개발

□ 관광자원 적극 발굴 및 해안관광공간 배치

- 지역주민이 개발주체가 되어 주민 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관광개발 방안으로서 중소형 규모의 어항을 관광자원화
- 강릉시 경포관광문화거리, 삼척시 초곡해양문화촌, 동해시 추암근린공원 및 양양군 오산리선사유적지 등을 배치하여 해안관광지대 형성
- 속초지역을 환동해권 관광벨트의 거점으로 육성
 - 속초해수욕장·대포항·외옹치 및 영금정 등의 개별적인 관광지 개발계획을 단일계획으로 통합·추진하여 입지성격을 고려한 관광기능 배분

□ 연안경관 보호 및 접근권 개선

- 연안의 조망권 보호를 위해 자연해안의 보전조치 강구
 - 바닷가와 해안도로 사이의 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도시계획법상의 풍치지구, 고도지구 등 지정으로 자연경관, 해안 등에 대한 조망권 보호
- 연안경관의 훼손 또는 해류·해사의 흐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공유수면내 공작물(건축물 포함)의 설치 등 제한
 -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반영되고 해역이용협의 및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관리·운영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 해안선에 인접하여 관광시설 및 기타 시설물을 신축·개축할 경우 일반인의 해안접근로를 차단시키지 않기 위하여 기존통로 유지 또는 새로운 통로 확보

5. 특별지역관리계획 수립

(1) 속초권 관광개발방안

□ 계획의 범위 및 수립주체

- 계획의 범위 : 속초시 연안
- 수립주체 : 속초시

□ 목적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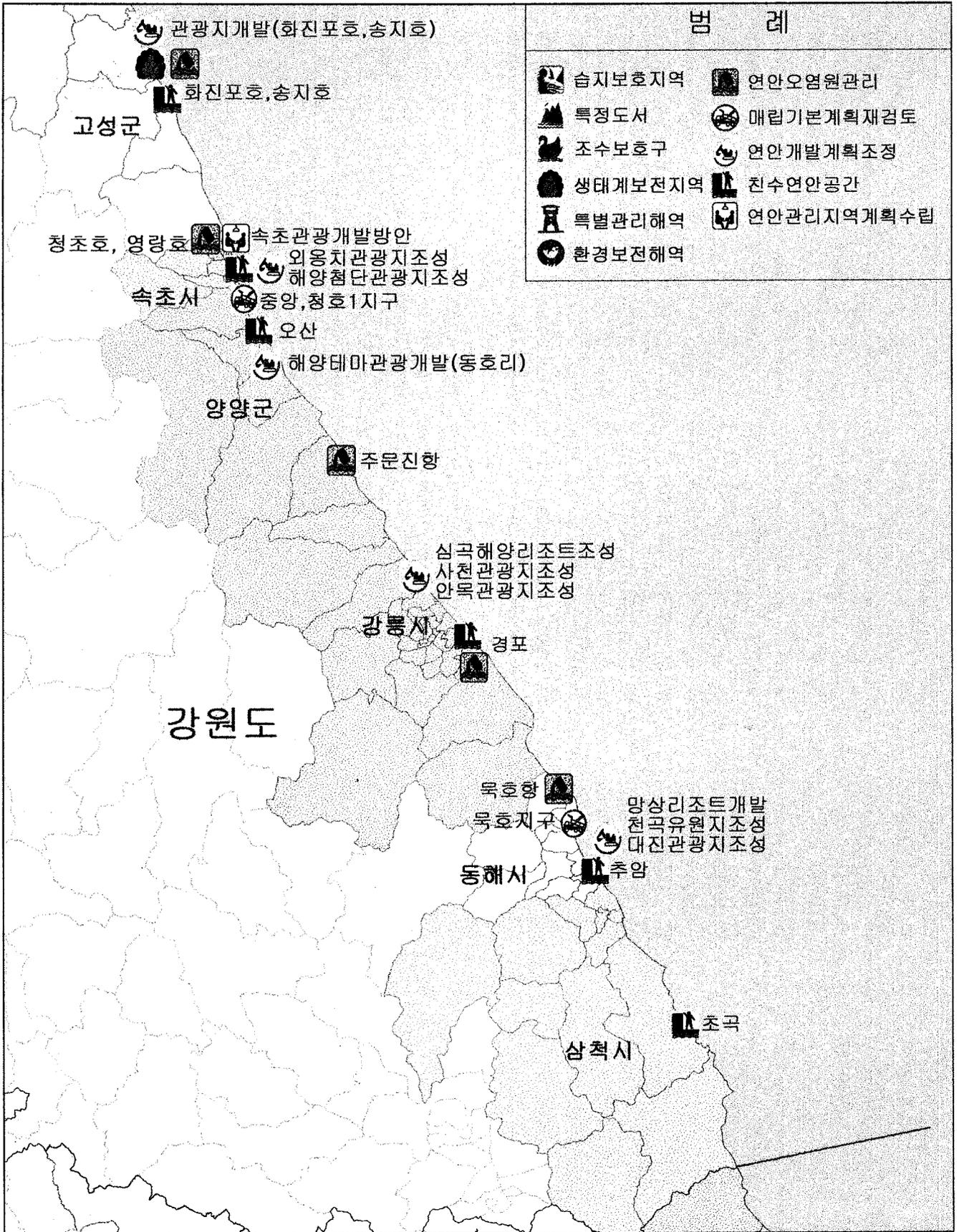
- 관광지 조성계획의 사전조정을 통한 개발효과 제고
 - 한정된 공간에 밀집된 개별 관광개발계획의 사전조정을 통해 사업간의 기능 중복 또는 상충 등을 발생시키는 난개발 방지
 - 개별입지에 대한 효과적 기능배분 및 상호 연계성 강화로 체계적인 관광지 조성 및 바람직한 연안관광 모델 창출
- 연안환경 개선 및 천혜의 관광자원 활용극대화
 - 속초시는 산악관광지인 설악산국립공원과 동해안의 깨끗하고 넓은 백사장 등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한 천혜의 관광지
 - 속초항이 위치한 청초호의 수질오염은 속초시를 환동해 관광거점항으로 발전시키는데 장애요인이 되며, 대포항 및 동명항에 난립한 활어회 판매시설도 관광환경을 손상시키는 요인
 - 청초호 및 영랑호의 수질환경 개선, 항만·어항시설의 정비 및 친수연안공간 조성 과 산악관광과 연계한 지역특성이 종합된 관광지 개발 필요

□ 세부수립방향

- 기존 개별계획의 통합 추진방안
 - 기존 계획상의 해양관광지 개발사업의 기능을 전체적 차원에서 재검토하고, 속초시 전 연안을 국제적 수준의 종합관광지로 발전하는 방안 강구
- 지구별 기능분담 및 연계성 확보방안
 - 지구별로 분산된 각 사업의 개발방향을 재정립하여 전문기능의 분담, 사업간 연계 및 보완성 강화로 투자효과 극대화

<표 3-9> 동해중부 권역 연안통합관리 요약

추진전략	정책방향	대상지역 및 내용
보호지역 지정·관리	생태계보전·관리	○ 관광지 개발시 생태계 보전조치 강구(화진포호, 송지호)
연안오염부하 적정관리	연안오염원 관리	○ 생활하수 처리시설 확충(동해시, 강릉시, 속초시) ○ 수산가공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청초호, 주문진항, 묵호항) ○ 오염원 조사 및 모니터링(경포호, 청초호, 영랑호, 화진포호, 송지호)
환경용량을 고려한 연안개발계획 조정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재검토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폐지 - 속초시 중앙지구 - 동해시 묵호지구 ○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시 재검토 - 속초시 청호 I 지구
	연안개발계획 조정	○ 사업계획 수립시 관계기관과 협의 - 고성군 화진포호 관광지 개발, 송지호 관광지 개발 - 속초시 속초해수욕장해양침단관광단지 조성, 외옹치 국민관광지 조성 - 동해시 망상리조트 개발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후 추진 - 강릉시 심곡리해양리조트단지 조성, 사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안목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 동해시 천곡유원지 조성, 대진시범어촌 관광단지 조성 - 양양군 동호리 해양테마관광 개발
친수연안공간 조성	친수연안공간 확보	○ 고성군 화진포호·송지호 ○ 양양군 오산리, 강릉시 경포, 동해시 추암동, 삼척시 초곡리 ○ 속초시 연안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특별지역관리계획 수립	○ 속초권 관광개발방안



[그림 3-9] 동해중부권역 연안통합관리

여 백

제10장 제주 권역

제1절 기본목표

□ 아시아·태평양 도서관광의 중심지로 육성·발전

- 한라산, 수려한 해안경관, 온화한 기후, 섬의 고유생활과 문화를 최대한 활용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표적인 도서관광지로 육성·발전
- 제주도가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로의 발전과 함께 지역적 여건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을 고려한 환경친화적이고 합리적인 개발 추진

□ 수산업 생산기반 확충 및 연안주민 정주여건 개선

- 관광산업외에 수산업에 종사하는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해 수산자원 보호·육성, 어업기반시설 정비·확충, 어장정화사업 등 소득기반시설의 정비·확충

제2절 연안통합관리 정책방향

1. 보호지역 지정을 통한 연안생태계 집중관리

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1) 동향 및 전망

- 1998년 습지조사결과 하도리 해안조간대는 환경이 양호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해안습지로 파악
 - 동 지역은 제주도개발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

(2) 세부 정책방향

- 북제주군 구좌읍 하도리 해안조간대에 대하여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시민 모니터링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습지보전대책 마련

나. 생태계 보전 및 관리

(1) 동향과 전망

□ 도서생태계 보전 필요

- 수려한 경관을 가진 유·무인도서가 산재하고 있고, 이들 도서의 해역은 I 등급 수질을 유지하는 청정해역과 더불어 천혜의 관광자원을 형성
- 이들 도서는 제주도 해양관광지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해양스포츠 및 마리너 등으로 개발 예상

□ 철새서식지 환경변화

- 대섬은 연육교가 가설되어 출입 및 철새관찰이 용이한 지역이나, 유원지 개발 의욕이 강하며, 자연생태공원 방식의 개발의견도 제시
- 오조리 철새서식지는 북쪽에 건설된 ‘한도교’ 갑문 다리가 물의 흐름을 정체시켜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고, 주거지 및 양식어장 등과 인접하여 주민생활과 상충문제 발생

(2) 세부 정책방향

□ 자연경관이 우수한 무인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

- 란도·절명서·사수도·등대서·화도·해암서를 특정도서로 지정·관리
 -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 도서의 자연해안에서는 해안의 보호 및 복원 목적의 사업만 실시
- 해류환경을 변화시켜 경관손상, 침식 또는 오염을 유발시키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

□ 철새서식지 보호대책 수립

- 세계 최대의 원앙새 서식지인 조천읍 북천리 다려도는 낚시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지역주민들의 개발의욕과 관련하여 개발과 보전에 대한 적절한 조정방안 강구
- 철새서식지의 상태를 감시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의 참여를 통한 시민 모니터링 프로그램과 철새 관찰·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

2. 해역별 특성에 맞는 연안오염부하 적정관리

(1) 동향과 전망

- 제주도의 연안수질은 양호하나, 항만수질은 악화
 - 항만별 해수수질의 평균농도는 I 등급인 제주항내 연안측을 제외하면 II · III등급의 수질이나, 외해측은 전부 I 등급 수질을 유지
- 인구의 도시집중, 관광객의 증가 및 각종 연안개발 등으로 제주 주변어장에 백화현상이 발생하는 등 생태계 변화 및 오염심화
- 해안 조간대에 산재한 주민 식수원인 용출수, 보존가치가 있는 전통어업 및 수려한 경관 등의 자원이 육상에서 유입되는 오폐수 및 쓰레기로 피해 심각
 - 오염원의 유입을 방지할 경우 연안 생태계 손상, 관광가치 상실, 어장환경 및 연안주민 정주여건 악화

(2) 세부 정책방향

- 어장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백화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사·연구 실시
- 상대적으로 오염이 심한 항만수역 및 어항을 중심으로 해양오염 모니터링 실시
 - 육상수조 양식장 주변 및 하수처리장 배출수를 포함하여 실시
 - 모니터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가 및 민간단체 활용
- 해안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음식점·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등 관광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폐수 및 쓰레기 처리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시행
- 소규모 도서의 어업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3. 환경용량을 고려한 연안개발계획 조정

(1) 동향 및 전망

- 제주도 연안은 주로 관광지 및 어항 등 비교적 환경친화적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지속적으로 수려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관광개발을 추진
 - 관광개발 잠재력을 가진 남제주군 송악산·용머리 해안 및 섭지코지 등에 관광단지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경관 및 생태계 훼손 우려
 - 자연경관 및 생태계 보전상태가 양호한 도서의 경우도 인근 지역의 관광지와 연계한 개발계획의 추진으로 자연환경 훼손 우려

(2) 세부정책방향

□ 연안환경 보전을 위해 공유수면매립계획 변경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폐지
 - 제주시 외도·용담지구, 북제주군 애월 II 지구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유지하되,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2001~2011) 수립시 재검토
 - 제주시 동귀지구

□ 연안환경보전대책 수립후 추진

- 남제주군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조성·용머리 관광지구 조성·송악산 관광지구 조성은 연안환경보전대책 수립후 추진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후 추진

- 서귀포시 외돌개 해양체육관광개발

□ 완충지역 설정

- 송악산 및 용머리해안 지역등은 관광자원인 자연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광시설 개발시 자연경관과 시설간 일정한 거리 유지
 - 자연경관의 경계 및 완충거리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설정

□ 연안개발수요의 계획적 관리

- 연안개발수요는 내륙지와의 기능 및 토지개발수요 분담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선별적으로 수용
 - 항만, 친수공간의 활용 등 해양성 입지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이를 억제
- 연안에서 보전·이용·개발행위시 국가전체적 차원에서 심사기능 강화
 - 「선 계획, 후 이용·개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사업시행전에 반드시 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4. 친수연안공간 조성 및 연안접근권 개선

(1) 동향과 전망

□ 항만 및 관광시설에 의한 연안 접근로 차단

- 제주시 탐동해안 공유수면 매립지역, 제주항 등 항만지역은 주민이 연안에 접근하는데 제약요인
- 중문관광단지 및 해안에 인접한 대형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이 해안과 내륙과의 통로를 차단하고 해안을 독점적으로 점유

□ 관광단지 개발에 의한 자연경관 훼손 우려

-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 수려한 해안경관이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으나, 자연경관을 이용한 관광단지의 건설을 추진하여 경관 및 생태계 파괴 우려
- 관광지 인근의 해안구조물 설치에 의한 해양환경 변화로 해수욕장의 모래유실 및 오염원 유입 등 발생
 - 함덕해수욕장, 이호해수욕장 및 중문해수욕장의 모래유실 심각

(2) 세부 정책방향

□ 생태공원 등 친수연안공간의 다양화 및 활성화

- 서귀포항의 기능을 관광·마리너항으로 전환하고, 수질정화 및 배후지 정비를 통해 해양활동 거점시설, 청소년과 젊은층을 위한 공연·놀이시설 등 친수연안공간 기능부여
- 제주시 탐동해안, 제주항 등 항만지역에 시민접근이 보장된 친수연안공간으로 용도지정
- 하도리 해안조간대, 창흥동 및 성산포 철새서식지를 연계하여 생태관광지대 형성
- 환경친화적 관광개발을 위하여 추자군도 및 우도를 해상군립공원으로 지정·관리

□ 해안시설 건설시 환경영향평가 및 시뮬레이션 실시

- 방파제, 관광시설 입지를 위한 매립 등 인공구조물 설치시 해양환경 변화로 인한 해수욕장 모래유실 및 이물질 유입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해수욕장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전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및 시뮬레이션 실시

□ 연안경관 보호 및 접근권 개선

- 연안의 조망권 보호를 위해 자연해안의 보전조치 강구
 - 바닷가와 해안도로 사이의 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도시계획법상의 풍치지구, 고도지구 등 지정으로 자연경관, 해안 등에 대한 조망권 보호
- 연안경관의 훼손 또는 해류·해사의 흐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공유수면내 공작물(건축물 포함)의 설치 등 제한
 -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반영되고 해역이용협의 및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관리·운영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 해안선에 인접하여 관광시설 및 기타 시설물을 신축·개축할 경우 일반인의 해안접근로를 차단시키지 않기 위하여 기존통로 유지 또는 새로운 통로 확보

5. 특별지역관리계획 수립

(1) 성산 해안관광의 환경친화적 개발

□ 계획의 범위 및 수립주체

- 계획의 범위 : 남제주군 성산읍
- 수립주체 : 남제주군

□ 목적 및 필요성

- 대규모 해양관광지 조성계획은 수려한 경관 및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며, 관광자원의 가치를 손상할 경우 관광개발의 의의 상실
- 관광개발이 자연경관, 환경 및 생태계의 파괴를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해안관광개발 필요

□ 세부수립방향

- 자연경관 및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전통생활 및 고유문화를 계승·발전시키며 이를 관광과 연계하는 방안
 - 자연학습장, 지역문화관 및 해양과학관 건설, 체험어장 및 생태공원 조성, 자연경관 및 철새관찰 산책로 조성
- 환경보전과 지역경제발전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해양관광단지 건설의 신모델 제시
 - 관광시설의 고급화를 통한 최소한의 개발로 최대이익 추구
 - 개발시 지역주민의 참여 등 개발이익 공유방안 강구
 - 대규모 다중이용 시설은 배후지역에 배치

(2) 서귀포항 정비 및 서귀포 해안의 체계적 관광개발

□ 계획의 범위 및 수립주체

- 계획의 범위 : 서귀포항, 서귀포시 해안 및 도서 일원
- 수립주체 : 서귀포시

□ 목적 및 필요성

- 서귀포항은 주변 해안 및 무인도서의 아름다운 경관 및 청정해역과 연계하여 천혜의 관광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청사진 부재
 - 항만개조사업을 통하여 국제수준의 미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 보유
- 서귀포시의 관광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종 개발계획의 통합조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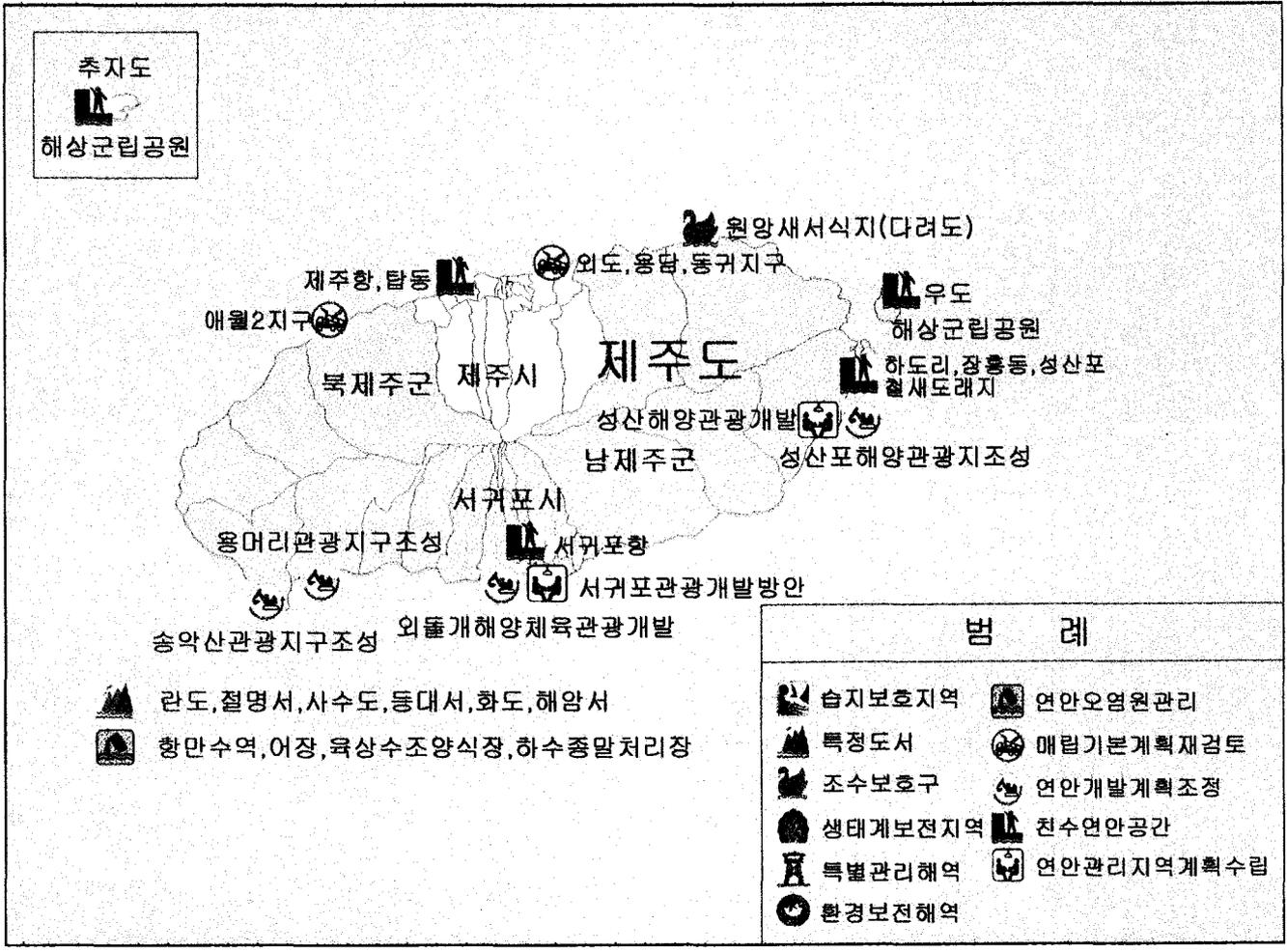
□ 세부수립방향

- 국제수준의 관광미항으로의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
 - 기존의 여객 및 수산중심의 항만기능에서 마리너 및 관광 중심항으로 전환
 - 해수유통 방파제 시설 및 선착장 정비사업 등으로 쾌적한 항만환경 조성
 - 항만배후시설의 정비, 이벤트공간의 조성, 해양스포츠 및 해양문화공간으로 개발
- 서귀포항 인근지역 종합해양관광시스템 구축방안
 - 서귀포시 서건도 및 거문여 해안은 해안경관이 양호한 곳으로써 서귀포항 및 인근 강정유원지와 연계하여 체계적 관광개발계획 수립
 - 해양스포츠·마리너·숙박시설·위락시설과 자연학습 및 생태관광 기능을 갖춘 환경친화적인 공원 등을 지역특성에 따라 배치하고 지역별 관광기능 분담 및 연계성 강화

<표 3-10> 제주 권역 연안통합관리 요약

추진전략	정책방향	대상지역 및 내용
보호지역 지정·관리	철새서식지 보호	○ 북제주군 조천읍 북천리 다려도(원앙새 서식지)
	특정도서 지정	○ 란도, 절명서, 사수도, 등대서, 화도, 해암서
연안오염부하 적정관리	연안오염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장의 백화현상 조사·연구 ○ 항만수역·어항·육상수조양식장 및 하수종말처리장 배출수 수질 모니터링 ○ 해변관광시설 오수 및 쓰레기처리 종합대책 수립
환경용량을 고려한 연안개발계획 조정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재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 외도·용담지구 - 북제주군 애월Ⅱ지구 ○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시 재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 동귀지구
	연안개발계획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환경보전대책 수립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제주군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조성, 용머리관광지구 조성, 송악산 관광지구 조성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귀포시 외돌개 해양체육관광 개발
친수연안공간 조성	친수연안공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귀포항 ○ 제주시 탐동해안, 제주항 등 항만지역 ○ 하도조간대, 창흥동 및 성산포 철새도래지 ○ 추자군도 및 우도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특별지역관리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산 해안관광의 환경친화적 개발 ○ 서귀포항 정비 및 서귀포 해안의 체계적 관광개발

여 백



[그림 3-10] 제주권역 연안통합관리

여 백

제4편 연안통합관리계획 집행전략

여 백

제1장 연안통합관리제도의 내실화

□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연안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적 관리기반의 정착

- 연안개발수요를 전국적 차원에서 조정하고 환경친화적 개발을 선별적으로 추진
- 연안의 10개 권역별로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와 지역개발수요, 환경용량 등을 고려하여 종합관리

□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시행에 따른 이해상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체제 구축

- 연안관리 주체간 효율적 통합·조정체계 구축
 - 지역별·유형별로 다양하게 대두되고 있는 연안이용의 이해상충문제에 대한 적절한 조정방안 마련
- 연안통합관리계획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할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에 대한 기본지침 마련
 - 연안통합관리분야에 대한 행정자원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기술적으로 지원

□ 연안통합관리제도 시행효과 감시를 위한 평가제도 구축

- 연안관리정책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할 수 과학적 평가제도의 구축
 - 평가지표의 설정, 평가방법의 체계화, 평가주체의 선정, 평가결과의 D/B화, 평가결과에 따른 전략의 수정 등 일련의 체계를 수립
 - 각종 연안개발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모형 정립

□ 연안통합관리에 관한 국가역량 증진을 위하여 국제협력 추진

- 연안통합관리분야의 선진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캐나다·호주 등 선진국과 국제협력체계 구축
- 축적된 연안통합관리 역량을 향후 아시아·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으로 적극 전파

제2장 연안관리 청지기 의식 확대

□ 함께 참여하는 연안통합관리체제 구축

- 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민간단체 등 연안관리의 이해당사자가 연안통합관리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안통합관리체제의 지지기반 확대
 - 지방자치단체 관련공무원의 연안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공조체제 구축
 - 연안통합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의 정비 및 재원확보방안 마련
- 지역주민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연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설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개발

□ 「연안청지기」 의식고취 및 연안지킴이 네트워크 형성

- 지역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연안이용 이해상충문제 해결과 연안환경 보전을 위해 풀뿌리 민간단체 적극 지원 및 명예연안관리인 활동 강화
- 연안 지역별 풀뿌리 민간단체의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시민교육프로그램, 시민 참여 모니터링, 지역별 정보교환 프로그램 등 운영
- 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민간단체 등이 지역의 연안을 책임지고 지키며 관리한다는 청지기 의식 고양 및 적절한 권한위임 시행
 - 연안관리정책 수립시 자문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연안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위임
- 일반시민 및 학생의 연안보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시행

제3장 지식기반 연안관리 실현

□ 주기적인 연안실태조사, 연안모니터링 및 연안현상에 대한 과학연구 삼각체제 형성

- 연안실태조사를 통해 연안의 자원현황 변화, 이용행위 변화, 환경실태 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점검
- 연안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파악 및 연안재해현상의 지속적 관측을 위해 일정 주기별로 연안모니터링 실시
- 연안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통하여 연안생태계의 기능 및 가치에 대한 과학적·사회경제적 분석 수행 및 연안자원의 변화추세에 대한 원인분석 실시
 - ※ 대학에 연안통합관리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지역별 현안에 대해 각 대학이 연구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과학적 근거제공 및 효율적 정책지원을 위한 연안관리정보시스템 구축

- 연안해역 및 육역의 속성·공간정보를 통합한 연안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 GIS를 활용하여 연안을 대상으로한 각종 입지계획 수립 및 정책개발지원을 하기 위한 연안정보관리시스템(MIS) 개발
- 연안의 장·단기 변화 등의 탐지를 위해 인공위성 영상자료를 이용한 원격탐사(RS) 기술개발

본 연안통합관리계획의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연안계획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 3148-6571

☞ FAX : 02) 3148-6575

☞ PC통신 : 천리안 ID iczm

본 연안통합관리계획의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오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www.momaf.go.kr> (해양수산부 홈페이지)